

###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이적 용공성향의 표현물이 라도 학문적으로 소지해 읽거나 토론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용공·이적표현물을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적발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전북대 사회대 학생회장 이기인(26) 전전북대생 이상희(23)씨등 2명에 대한 국

보안법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등이 가지고 있던 책과 노트등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대학생으로서 빈부격차, 분배의 공정성, 현실도순 등에 대해 비판적, 학문적 소지, 토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등이 구입하거나 독서한 책들은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되고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산주의 및 사회학에 대한 이론서인데다 자신들

의 전공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이 인정된다"며 "이를 이용해 토론등을 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라는 의미에서 채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열림터 이용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며 1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93년 12월에도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48시간안에 증거를 확보하고 심리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성폭력 위기 센터'를 개설한 바 있다. 열림터는 위기센터와 유기적 연결을 통해서 긴급한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여성들을 보호, 치유하고 재활 하도록 돕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열림터는 7인의 운영위원회가 개별상담과 집단 상담을 이끌고 1백여명의 자문위원들이 6개월 단위로 자문활동을 담당한다.

#### 전국 고도소 공안정국 편승 양심수 면회 가족의 금지

강희철(일본관련간첩사건,

대전교소도 복역중), 남진현(사노맹사건, 제주교소도 복역중)씨등 양심수 등의 면회가 가족을 제외 하고는 전면 금지당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월 20일 남씨를 면회한 최병모 변호사와 김형태 변호사와 9월 9일 정의철씨를 면회한 오창래(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씨등 2명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데서 밝혀졌다.

천주교인권위(위원장 최병모)는 12일 성명을 통해 "공안 기류에 편승해 전국의 모든 교도소들이 양심수들에 대한 면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인권유린행위"에 교도소 관계자는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면회를 허가하게 되면 교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면회를 금지하라는 법무부의 지침이 전국 교도소에 하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광고시간확대는 여성 상품화 가속화 시킬 것 14일 민우회 성명

'한국여성민우회'(회장 이경숙, 민우회)는 14일 "방송광고시간의 확대는 남녀 차별철폐와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토록 요구했다.

민우회는 '방송광고시간 확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광고는 선정주의와 전통적인 여인상을 함께 부각시키며,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곡된 성문화를 앞장서서 유포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광고의 확대는 여성의 상품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평화와 인권

준비 10 호(94.10.10)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주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화 : 0658-44-0152 팩스:0658-45-0152

##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필요 대한변협, 『인권보서서』8집 발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인권 상황은 과거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수 사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여러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관련법도 세계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93년도의 인권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인권보서서』제 8집(1993년)에서 구속수사가 원칙적이고 불구속수사는 예외적으로 보일 정도의 인신 구속사태,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는 수사상의 고문 및 가혹행위등 생명,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검찰, 경찰의 인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연물에 대한 사전 검열, 컴퓨터통신에까지 적용되는 이적 표현물 조항 등 표현의 자유도 여전히 제약당하고 있다고 지적하

였다. 변협은 특히 김영삼 정부가 아무리 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개혁을 한다고 해도 정부당국마저 법이론적으로 위헌법률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는 것, 제도의 부분적 합리화라는 평가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93년에는 여성의 인권과 아동, 장애인, 노동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가 유엔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강조된 해였으나 우리나라에는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법의 합리적 개정의 유보, 고용문제의 악화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파견법(안)제정을 직업등을 통해 '특별대우'의 성장을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고분담을 강요'하는 의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40만여명의 매우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건강하게 살 권리, 400만이 넘는 장애인 의 근로권과 생존권의 보장 등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변협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의 쟁취를 위한 부재이 현 정부의 동장을 결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민중부문의 사상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를 제한하고 집회와 시위를 차별하고 있으며, 이런 민중부문의 차별화는 수구세력의 입장을 강화하여 현재의 배분구조를 유지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보서서』는 87년에 86년 인권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시작한 이래 매년 발간되고 있다. 이번 8집 보고서 간행위원회는 박인제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김용조, 문병호, 차정훈, 최은순변호사 등이 집필하였다.

모욕적인 형벌로서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 시키고 오만 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으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부가 이용하는 형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지부는 "홍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권을 보장해줄 것을 바라고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지부는 이번 사형집행에 대해 "정부가 최근 사회범죄에 대한 국민감정을 이유로 범죄에대한 정부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형집행을 실시한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사무국에서도 긴급 논평을 통해 "어떤 나라에서도 범죄의 제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 사형을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국정부 사형집행에 대한 입장을 반박하면서, 다른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 천주교인권위 '94연례모임'

'천주교인권위'는 지난 1일-3일에 '94 천주교 이년 연례모임을 인권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고 종교단체의 인권운동의 방향(오재식), 한국사회의 종교개혁(효림승려), 평신도 활동과 우리의 과제(이영섭) 등의 강의를 들었다.

#### 더 많은 사형집행 우려 국제사면위 본부, 한국지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matiol) 한국지부는 6일 있었던 15명 사형 집행에 대해 즉각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15명의 사형 집행에 대한 우려'라는 성명서에서 한국지부는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10주년 기념미사 ◎

노동자들의 인권과 사람됨의 참뜻을 실천해 왔던 가톨릭 노동사목 1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미사가 있습니다.

주제 : 이 땅의 노동자를 위하여 빌으소서  
일시 : 1994년 10월 18일(화요일)  
장소 : 성심여자고등학교백합관(서울)

### 한국교회, 장애인에 대한 관심 계기되기를 KNCC장애인위, 일본장애시설등 방문

지난 9월 26일부터 130장에 10월 2일 까지 일본 오사카, 동경 등을 방문한 KNCC 장애인위원회(위원장 대형 김기택 목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 장애인 시설을 살펴보고 일본 교회의 장애인정책에 관한 상황과 정보를 교류했다고 밝혔다. 일본 NCC 장애인교회위원회 방문한 것은 처음인데, 이번 방문에는 김기택목사를 비롯해 이철용(장애인위원회부위원장), 김경식(한국장애인선교단체협의회)씨 등 15명이 참석했다. 황필규목사는 "일본의 장애인들은 국가연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내 장애인공동작업소등을 통해 사회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걸자블록, 장애인용동버스 턱없는 카, 도로시설등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일본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방문취지는 한국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심을 갖기 위해 각 교회내 장애인 위원이 먼저 장애인문제에 관심과 지식을 갖게 하기위한 것이라고 황목사는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은 오는 11월 26일 가질 '사랑의 장애인 체험대회'를 위한 사전작업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천명 규모로 열릴 예정인 장애인 체험대회에는 강연회와 공연등이 있게 된다.

### 긴급구속영장 남발

#### 안기부등 강제연행 합법화 장치로 악용 뚜렷한 혐의없이 마구남발 인권침해 심각

긴급구속 제도가 사법당국에 의해 자의적 인신구속을 위한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 안기부는 지난 5일 성균관대 정현백 교수, 서강대 윤여덕 교수, 숭실대 김홍진 교수등 3명을 긴급구속한뒤 혐의점이 없자 7일 오전 석방했다. 안기부는 자수간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혐의점이 없는데도 단지 독일 유학시절 북한 공작원과 이웃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긴급구속장을 발부발았다. 안기부는 이들을 긴급구속하면서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기는 커녕 피의자에

에 대한 변호인 선임권 고지등의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는 지난 5일 오후 정현백 교수를 연행하면서 긴급구속장은 물론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30여분 동안 자택을 수색해 열람 5권과 비망록, 수첩, 여권 등 개인물품을 압수해 갔다. 이날 안기부 수사관들은 연행사유를 묻는 정 교수에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발았으나 지금은 없다"며 정 교수를 연행했다. 정 교수는 "7년간의 독일 유학중에 김씨와 몇차례 만난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뚜렷한 혐의점도 없이 긴급구속한 것은 명예훼손은 물론, 심각한 인권침해"라면서 "특히 독일 개발원조처 장학금으로 유학했는데도 북한 장학금 운운한 언론 보도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긴급구속제도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만큼 긴박한 때 검사가 긴급구속장을 발부해 인신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긴급구속된 48시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예초의 취지와는 달리 울들어 고대생 프락치 폭행치사사건, 전국연합 이창복 의장 사건, 남충현 홍대시위사건과 관련한 대학생 무더기 긴급구속 사태등에서 보듯 사법당국이 임의 동행 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췌수사와 강제연행을 합법화하기 위한 장치로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지난해 2월 김영삼 정부 출범뒤 긴급구속된 사람은 모두 1만3천7백32명으로 이중 특히 검사가 사후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석방한 사람이 5백46명,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경우가 4백30명에 이르는 등 전체의 8%에 이르는 9백76명에 대해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 "현중노조간부에 대한 구인장 발부는 민주노동 건설 방해의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대표 양규현등)는 6일 현대중공업 노조간부 26명에 대한 전격적인 구인장

발부가 민주노동 건설에 중실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에 타격을 가해 민주노동 건설을직임을 가로막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노대는 성명에서 "노사간의 자율적인 타결로 파업이 마무리된지 1달넘게 지나고, 노사관계가 정상화 되찾고 있는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구인장을 발부받아 연행 및 구속을 강행한데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차원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외국인 노동자에 동등한 대우를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민(외국인)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노동자 연대회의'가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각국에서 발생하는 이민노동자들의 실태와 정부정책등이 보고되고 이후 어떤 방향으로 이민노동자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주된 논의였다.

회의에 참석한 윤우현(전 노협 고용대책부장)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노동자의 이동현상은 각국의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각국 정부는 공통적으로 이민 노동자의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으로 차별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민 노동자의 합법화와 이를 위해서 관계법령의 철폐운동과 노사정 합법에 의한 동등한 대우실현, 이민노동자들의 노조결성 및 가입의 자유"가 논의되었다.

# 평화와 인권

준비 12 호(94.10.17)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0658-45-0152

## 고문방지협약 가입 추진하면서도 고문은여전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창립 1주년

문국진모임 창립1주년기념 모임 지난 9월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전망이다. 또 한 10월 7일에는 김근태씨가 국가를 상대로 고문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소식은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 보인다. 그러나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 보인다. 그러나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 보인다. 그러나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 보인다.

에서 문씨 가족들을 문제 제기에 나섰다. 문씨의 아내 윤연옥씨가 인권단체와 연세대에 민주문화등을 찾아나선 끝에 박정기 대표, 박래군(문국진모임 총무)등 고문문제에 관심을 가진 인사들을 만나 작년 10월 13일 향린고회에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하였다. 창립직전 문씨 동기생들은 연대 79학번을 중심으로 하였고, 무엇보다 고문피해자들의 호응이 컸다. 고문후유증 인정계기되어야 이를 뒤인 93년 10월 15일 서울민사지법 국가손해배상 5사 재판은 받을 예정이다. 문씨의 재판이 갖는 의미에 대해 박총무는 "고문 후유증

을 인정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고문후유증 판정을 받은 뒤 국가 책임문제와 공소시효의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문피해자의 경우 고문 증거와 공소시효 문제가 큰 어려움으로 만나 작년 10월 13일 향린고회에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하였다. 창립직전 문씨 동기생들은 연대 79학번을 중심으로 하였고, 무엇보다 고문피해자들의 호응이 컸다. 고문후유증 인정계기되어야 이를 뒤인 93년 10월 15일 서울민사지법 국가손해배상 5사 재판은 받을 예정이다. 문씨의 재판이 갖는 의미에 대해 박총무는 "고문 후유증

있다. 가족들은 물론 고문 피해 당사자조차도 후유증이 크지 않으면 문제삼고 싶어하지 않는 '고문'사업에는 연구자도 활동가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신체적 고문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신적,심리적 측면에서 더 강화되고 있어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인식 속에서 일단 5.6공 시절 있었던 고문사재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연구과제를 제기하고 고문피해자들의 만남을 갖자는 취지로 고문백서 작업은 시작되었다. 올 연말까지 신문기사, 논문등 자료수집과 고문 피해자 증언 취재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이 작업은 고문추방운동과 고문피해자 재활운동, 고문가해자 처벌운동의 근거가 되리라고 내다 보았다.

## 전북 9개 시민운동단체 연합체 결성 지역현안해결 부조리파수꾼

11월 도내 시민운동 단체들이 힘을 뭉친다. 환경운동연합과 YWCA, 여성군사정권시절 고문관련 소송이 무조건 기각당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신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고문피해당사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차마 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못내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민정부를 맞아 무언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기대

운동연합은 시민들과 연대해 교통, 주택, 환경등 제반문제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여나가는 한편 우리강 살리기, 무분별한 도시계획 저지등 구체적인 현안문제 해결에 공동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각종 선거에서의 부정사태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지방 자치가 건전하게

성숙될수 있도록 유도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교통질서 지키기등이 시민 스스로의 생활 방식 변화운동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민운동연합은 시민도 임이라는 성격에 걸맞게 정치성과 개인의 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당선자들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등을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이번 시민운동연합 출범은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폭넓은 연대를 유도해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1교회 1장애인고용운동전개'

기독교 28개교단 등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증대 방안을 일환으로 기독교 개신교계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안성혁)과 함께 교회 중사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기독교 28개 교단과 5개 선교단체 실무자들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1교회 1장애인술선고용하기 운동'을 전개키

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교계교단 및 선교단체 실무자들은 교의 원로 15~20명을 중심으로 '1교회 1장애인 술선고용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 동안 이 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운동 참여대상 교단은 1천개 이상의 교회가 가입돼 있는 10개 교단과 가입교회의 평균 교인수가 3백명 이상되는 10개 교단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교회수는 우리나라 전체 개신교회의 60%에 해당하는 2만7천8백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참여 교단명은 대한예수교장로회 12개 교단, 기독교대한성령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구세군 대한본영, 그리스도의 교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등이다.

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씨(68)가 '올해의 여성상', 평생을 사회봉사활동에 바쳐온 황은순씨(93)가 용선봉사상을 각각 수상했다.

엘네스티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 캠페인 국제 엘네스티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 채택 5주년을 맞아 각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캠페인을 벌인다.

매년 10월 세계주 '엘네스티 주간'에 벌이는 이 활동에서 엘네스티는 부당하게 침해당한 각지의 사례를 선정해 해당정부를 상대로 탄원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엘네스티가 선정한 고문 사례는 경찰에 의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인도네시아의 9세 소년 Junyont 등 아시아지역 4명, 아버지가 콜롬비아의 게릴라들을 돕고 있다는 이유로 잡혀가 실종된 베네주엘라의 14세 소녀 2명 등 미주지역 5명, 유럽과 아프리카 2명 등 모두 14명이다.

수많은 민간단체와 유니세

프등의 유엔기구에 의해 10여년의 기초과정을 거쳐 채택된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94년 4월 현재 1백58개국에 가입하고 있다.

## 10명의 목숨 앗아간

### 탄광사고 또 발생

지난 6일 강원도 태백시 계산동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문곡경 지하 7천10m 지점에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발생, 막장과 인근에서 작업중이던 김춘부씨 등 10명의 광부가 질식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탄광입구로부터 7천 10m, 지하 770m 지점의 케이빙막장(채탄을 하고 벽에 붙어있는 탄을 폭발작업으로 털어내는 막장)에서 황태익씨 등 채탄장부 4명이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가 가득찬 가스공간의 탄벽을 파들이다가 가스가 순식간에 누출되어 발생하였다. 누출된 가스는 순식간에 3천50m 하부경도를 가득 메우고 인근 굴진경도에서 일하고 나오던 다른 광부 6명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이번 사고는 공기중의 메탄가스 함유량이 높아 폭발위험이 큰 '갑종 탄광'으로 분류되는 광산에서 일어난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산업안전관리의 부실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산보안법에 따르면 탄광은 갑종탄광과 을종탄광으로 분류되는데 갑종탄광은 가연성 가스 함유율이 0.25% 이상, 통기시설의 가동을 1시간 멈출 경우 3%이상의 가연성 가스가 검출되는 경우에 지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김영삼 정부 출범 뒤 긴급구속된 사람은 1만3천7백32명으로 검사가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사람이 5백46명,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경우가 4백30명에 이르는데 전체 8%에 해당하는 9백76명에 대해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실은 긴급 구속영장제도의 남발이라는 문제점을 증명해주는 예이다. 심지어 긴급구속영장조차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하며 긴급구속시 구타등 인권침해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 합법이라는 형식 갖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

# 평화와 인권

준비 13 호(94.10.24)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규현  
주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화 : 0658-44-0152 팩스: 0658-45-0152

## 긴급구속 경,검,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 긴급구속후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긴급 구속영장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웬만한 '공안사건'은 거의다 일단 긴급구속부터 하고 있다. 임의동행을 가장한 불법연행이라는 비난을 벗고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기 때문이다.

본래 형사소송법에 긴급구속의 요건은 △구속자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김영삼 정부 출범 뒤 긴급구속된 사람은 1만3천7백32명으로 검사가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사람이 5백46명,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경우가 4백30명에 이르는데 전체 8%에 해당하는 9백76명에 대해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실은 긴급 구속영장제도의 남발이라는 문제점을 증명해주는 예이다. 심지어 긴급구속영장조차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하며 긴급구속시 구타등 인권침해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 합법이라는 형식 갖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

기도 한다. 원래 긴급한 경우에만 발부하는것

긴급구속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유를 알리고 피의자의 인신을 구금할 수 있는 만큼 긴급 구속자의 집행은 신중을 요해야 한다. 따라서 긴급구속 요건지키기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김철준 변호사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긴급구속영장은 긴급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만큼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 보기로 안기부가 지난 5일 연행, 긴급구속한 정헌백(40, 성균관대)교수 등의 예를

벌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긴급구속요건 미비 대부분 법원, 당연히 영장기각해야 한다. 긴급구속 이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최

근 부처 놓고 있는 긴급구속장으로 인신 구속을 당한 피의자의 인권은 현실적으로 보상 받을 길이 없음

## 전북지역 학생 국보법 4명구속 영장제시등 공식절차를 밟지않는 한건을리기식의 강제연행

전북지방경찰청은 17일 '단기청년학생동맹'이라는 단체에 가입한 박미영(21·여·원광대 사회복지4)씨 등 여대생 4명에 대해 국보안법위반(이적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미영양등 본인과 주변사람들에 의하면 박양은 2학년까지는 학생활동을 한적은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다음해 4월까지 <노동자의 철학> 등 이적도서를 학습하고 조직원 자격 시험을 치른뒤 이적단체인 '단기청

년학생동맹'에 가입한 혐의로

다. 한편 기무사 전북지부도 이날 강유복(22)씨 등단기동 여대생 4명에 대해 국보안법위반(이적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미영양등 본인과 주변사람들에 의하면 박양은 2학년까지는 학생활동을 한적은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다음해 4월까지 <노동자의 철학> 등 이적도서를 학습하고 조직원 자격 시험을 치른뒤 이적단체인 '단기청

이 지적되었다.

민교협, 학단협, 한교협 인권위등 6개단체가 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한 '긴급토론회-교수의 인권마져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세경 변호사는 이날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긴급구속제도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재관적 혐의, 긴급성, 구속의 필요성등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법구속"이라고 지적했다.

로 조직사건을 무리하게 조작하는 과정에서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편, 경찰당국은 연행하는 과정에서 영장도 제시하지 않는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의하는 부모형제들에게 구속되지는 않을테니 걱정말라, 별문제가 있겠느냐고 말하는 등 앞뒤가 맞지않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건을리기식의 조작수사로 의심 받고 있다.

## 공명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주제 전국 여성대회 열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영순)가 주최하는 제31회 전국여성대회가 14일 오전 서울 정동 이화여고 튜관순기념관에서 열렸다.

<공명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를 주제로 한 이날 대회에는 김영삼 대통령 내외를 비롯 권영자 정무제2장관 등 각계 인사와 여협 산하단체 대표 및 회원 등 3천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대회에서 참가 여성들

은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참여 50%를 목표로 하되 우선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의석 20% 확보를 위해 모든 여성이 힘을 합쳐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등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남녀평등 정신에 위배되는 호주제도 및 동성등본 금혼제도를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등 7개항의 건의문도 채택했다.

한편 이날 대회장에서는 대

## 여성문제 전문가 양성교육

전북여성의 전화 제5기 상담인 교육이 지난 10월부터 시작 오는 27일까지 전주 대한관광 세미나실서 계속된다.

'전북 여성의 전화'가 마련한 이번 제5기 상담 교육인 공개교육 역시 이성문제 해결에 큰 몫을 담당하는 상담원들의 올바른상담태도와 사명감, 상담과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할 법률등 실질 문제를 교육함으로써 양질의 상담권을배출해 내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열흘동안 진행되는 이번 상담원 교육에는 관계기관이나 여성단체에서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종교인, 강의취위 희망자등 총 26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받게 된다.

# 민교협 교수의 인권 긴급 토론회 '학문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같이 인정돼야'

최근 현직교수에 대한 안기부 연행 사태와 관련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는 주제의 긴급토론회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6개 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문 요지이다.

◇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박세경 변호사)=개정된 안기부법에 예전에 비해 안기부의 수사관련 직무 범위를 줄이고 직권남용죄 등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검찰도 안기부 전담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임의연행이 여론의 비난과 사법부에 의해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아 긴급구속을 남용하면서 안기부 등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 긴급구속의 남용을 막으려면 처벌규정을 마련해 현행 영장청구기간 48~72시간을 48시간으로 줄이고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왜곡된 언론보도와 인권(김남석 경남대 신문방송학 교수)=안기부의 현직교수 연행조사와 관련한 보도는

현직교수가 간첩단에 연루된 혐의로 안기부에 연행됐다는 흥미요소에 치우쳐 연행 사유 등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빠져버렸다.

또한 입증되지 않은 사실(박홍 서강대 총장의 '북한 장학금 교수' 발언 내용)이나,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연행된 교수 개인의 인적 사항) 등을 섞어 보도함으로써 사건 관련 교수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뉴스 정보원으로 안기부의 발표가 유일한 것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야 한다. 언론이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를 배타적으로 수집해 배포하는 관행은 없어야 한다.

◇ 교수의 인권과 시민의 인권(강경선 방송대 법학 교수)=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다"고 '교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연구·발표·강학의 자유를 모두 포함하는 학문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성격이 인정돼야 한다. 학문연구자가 누구의 지시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견

해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경상대 교양교제나 유초하 충북대 교수 사건 등도 이런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사태이다.사랑의 전화

## 노인병원 폐업 부당노동행위 판결

지난 7월 27일 적자로 폐업, 언론에 대대적 홍보를 한 사랑의 전화 무료 노인병원이 적자가 아닌 노조탄압을 위한 폐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랑의 전화 노동조합(위원장 최문희)이 지난 8월 11일 병원폐업과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낸 바 이에 따라 "사랑의 전화 무료노인병원 폐업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사랑의 전화를 재개원할 경우 해고된 12명의 의료진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등의 판결문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판결문에서 "사랑의 전화 이사회가 경영합리화의 방안을 마련하고도 이를 시행하지도 않은 채 2개월만에 병원을 폐업한 사실은 적자로 인한 폐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노조설립후 노조위원장 및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임금체불 등을 인정한다"라고 밝히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나열할 때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부당노동행위의사에 의한 폐업조치"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랑의 전화 운영상의 문제들과 사회복지기관의 후원금 모금과 운용, 사회복지기관의 정부보조금 전용문제, 사회복지기관 대표의 자질과 도덕성 등에 관련해 질의된다.

한편, 사랑의 전화에서 해고된 노조원들은 노인병원을 폐업함에 따라 주로 탑골공원에서 매주 화,목요일 무료로 노인들을 위한 "건강교실"을 마련하고 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 국제사면위원회(AI)조사단 활동 양심수 가족 인권단체등 방문 실태 조사

지난 9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국인 권상황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사면위원회(AI)는 20일 청소년단체 '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양심선언 가족등을 만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AI 조사관 클리어 맥베이, 페에르 로베르트와 유카안자코씨는 10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13일 법무부, 19일 외무부등

정부기구를 찾았다. 또한 민가협, 사형제도폐지위원회, KNCC 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등 인권단체와 유서사건 강기훈씨, 정현백교수등 양심수, 사노맹사건 가족, 전부간첩단사건의 이화춘씨 가족을 만나 인권실태를 조사했다.

AI 조사단은 25일까지 머물 예정이며, 22일에는 영등포교도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 평화와 인권

준비 14호(94.10.31)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규현  
주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화 : 0658-44-0152 팩스:0658-45-0152

## 외국인 취업 연수생 인권실태 토론회

### 각종혜택에서 제외 현대판 노예로 전락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외국인 노동자피난처, 참여연대 인권운동 사랑방, 경실련 불교시민연합등 12개 노동, 인권, 종교단체는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 토론회"를 27일 2시 종로 성당에서 열었다.

김제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사무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취업연수생 정책으로 2만여명의 10개국 노동자가 금년 6월부터 입국하였으나 이들은 한국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노예 같은 처지로 전락한다. 취업연수생의 평균임금은 15만 9천 2백원에 불과하며 이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외국인노동자보다 심각하다"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7일 토론회에서는 김제오 사무국장이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보고와 개선방향'을, 윤우현(전노협 고용정책부장)씨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를 발표한다.

최근 정부는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사태가 심각해지자 합법적인 외국

인 인력을 수입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취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들은 1년을 기한으로 기술을 배우는 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 하지만 이들의 통상임금은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또는 삼분의 일이하이고 산재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보험에서도 제외된다.

전북지역 단기학생동맹 사건 - 연이들간 잠안재우고 감압적 분위기 속에서 심문 지난 17일 긴급구속된 이른바 단기학생동맹사건 관련자들은 이 사건이 지역 학생운동조직가운데 하나인 전북지역 학생연대 외장인 정현중(야,경영 4)군을 좀더 큰 권으로 잡아넣기 위한 조작수사가 분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회대학학생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구속자 9명중 대다수인 6명이 사회대학생들이며 경찰이 조직사건의 주모자로 파악하고 있는 정현중군이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속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몇몇 책자를 근거로 조직활동을 하였다고 경찰측이 주장하고 있으며 그 책자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자들이라는 점 고백 남, 김종운, 김명환, 김종섭,

## 12월 10일 『평화와 인권』 드디어창간

군부통치시절 자행되었던 인권유린이 문민정부 출범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의평화센터에서는 이러한 취지아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고발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인권소식지인 『평화와 인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준비호로 시작한 『평화와 인권』이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창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창간하게 될 『평화와 인권』이 부족한 역량으로 인하여 인권소식들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였으나, 지역 인권을 담당하는 매체 『평화와 인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창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충고와 격려문을 기다립니다.

김경환 등은 구속당시까지 충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다수가 전역을 한두달 남겨놓은 상태였고 박미영, 임현주, 박수진, 단은경등 4명의 여학생은 지난 1-2년전부터 학생회나 동아리활동에도 적극적이지 않은 성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의무를 두었다는 점이다. 현재 가족이외의 민회가 완전금지된 상태이다.

한편, 기무사에 연행된 남학생들의 상황은 거의 파악되지않고 여학생들의 경우

는 강압적인 수사분위기 속에서 연이들 동안 잠을 안재우고 심문을 계속하여 비봉사공간에 진술했다고 한다.

현재 부모님들 중심의 가족대책위는 김영복 변호사를 여학생 4명에 대한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며 기무사에 연행되어 구속된 5명의 남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몰라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한다.

편집사정으로 인하여 14호는 한면만 발행 합니다.

# 평화와 인권

준비 15 호(94.11.6)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0658-45-0152

## 한국경찰 미국범죄에 대해서 허위보고와 굴욕적 태도 일관 지난 3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전 우섭,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는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초경찰서 소속형사 채학식, 박찬식, 최병일씨를 미군병사에 의한 김국혜씨 강간치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했다.  
채학식씨 등은 지난해 5월 29일 발생한 미군병사 존로저 살트릭스 병장의 김국혜(53)씨 강간치사 담당 수사팀이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이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강간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미군범죄를 처리하는데 있어 한국정부의 굴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찰에서 강간치사상으로 된 사건을 운정석 담당검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으로 기소했고, 재판과정에서 조영선 공판검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묵살했다.

10월 26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판결의 강간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심 징역10년을 파기하고, 폭행죄만 받아들여 최고형인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김씨는 2차례나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강간에 대해 증언하는등 고통을 당했다. 사건 당시 김씨는 뇌를 크게 다쳐 후유증으로 1년이 지난 지금 후각장애, 청신장애 등을 보이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의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범죄의 한국 재판권 행사 비율과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 사건 처리 결과는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월말 '한미행정협정의 문제결과 개정방향' 공청회에서 배금자 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주한미군범죄 재판권 행사비율은 91년 발생한 1천3백57명의 범죄인 중 18명, 92년(1-8월) 발생한 6백55명의 범죄인 중 6명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행사해 행사비율은 1%를 기록했다. 또한 형사사건 처리결과는 징역형이 90년엔 3백33건 중 30건, 91년에는 7백33건 중 8건, 92년에는 3천3백35건 중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월 10일 『평화와인권』 드디어 창간

김영삼 정권 출범후에도 인권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인식아래 「정의평화정보센터」에 인권하루소식의 도움을 받아 전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알리기 위해 「평화와인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준비호로 시작한 「평화와인권」이 그동안 독자들과 소식지의 유용성에 대한 많은 격려를 해왔고, 취재 및 편집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어 '세계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창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식으로 창간하게 될 「평화와인권」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바라면서 아울러 따끔한 충고도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제출 '의문사는 권력기관의 개입이 없이는 발생할 수 없어'

전국민주주의 민족통일유가협회의(회장:박정기)는 4일 오전 11시 소개의원 이부영 의원의 91명의 의원서명과 1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서명, 국제인권단체, 재 캐나다 동포들의 서명을 위함하여 국회에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 하였다.

또 지난 3일 유가협회의 회원 13명은 국회의사당 앞 시위와 민자당 정책 1국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 밖에도 민자,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유가협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계속 항의방문을 벌일 것임을 밝혔다.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요지)  
1. '의문사'는 국가권력기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발생한 참혹한 인권유린행위입니다.

니다. .... '의문사'는 다른 인권유린 범죄와는 달리 인간의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그간 의문사로 죽어간 이들은 고문이나 그외의 가혹행위에 의해 죽어간 역력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의문사'사는 분명 권력기관의 부당한 개입이 없이는 발생할 수 없었던 사건들입니다.

2. 의문사의 전면재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모든 의문사 사건을 전면 재조사 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의문사'의 책임자를 색출하고 엄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국회내에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전북연합고문 강희남 목사님 재판 -10월28일 서울지방법원- 방북이유등을 당당하게 밝혀

지난 10월 28일 오후 3시 강희남 목사님(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고문)재판이 재판이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있었다. 7월 16일 이복의 김일성

주석 영결식에 이남대표로 향하시다 문신에서 구속되었다.  
재판에는 전북연합 고문인 신 최형, 류종완 선생님과 이석영지도위원, 목사님의 가족을 비롯하여 30여명이 함께 참석을 하였다.  
건강한 모습으로 재판정에 들어서신 목사님은 모두진술을 통해 당신의 재판부에 대한 생각과 방북에 대한 결심등을 피력하였다.  
방청인은 물론 재판부까지 숙연하게 만든 목사님은 재판부에 대해 당당하게 재판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가족들과 변호인단의 간곡한 부탁으로 모두진술만은 진행하시고 재판을 마쳤다.  
같은날 2시에는 전국연합 황인성 집행위원장의 재판이 있었다.

6공 초기에는 5공 청산을 위해서 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의문사는 5공 청산특별위원회내의 인권스위에서 다루어졌고, 청문회도 열리도록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 6공하에서도 의문사는 근절되지 않았고, 다시금 그 수를 더해만 갔습니다. 국회내의 의문사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필수적이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의문사가 철저히 조사되고 다시는 이땅에 의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10월 27일 전북농민대회

UR 비준저지와 추가 협상 정취, 수매제도 개선을 주요 슬로건으로 하여 전농전북도연맹이 주최하고 전북연합이 후원한 "UR 국회 비준 저지와 추가협상정취를 위한 전북농민대회"가 지난 10월 27일 오후 1시부터 공설운동장 앞 주차장에서 개최되었다.  
대회 사전부터 진행된 행정직원들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1,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도단위 집회라는 상징성으로 하여 대회전부터 많은 이목을 받은 대회였다.  
특히 전북도 경찰청장의 남독하기 힘든 강경책은 서울, 경인지역에서 1,500명의 병력과 헬기 2대를 지원받아 대회를 봉쇄하려 하였다.  
각군에서 관의 방해를 뚫고 전주에 진입한 200여대의 농민차량이 운집함으로써 대회의 성공리에 마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 행사안내

- ▲ 강기훈 초청강연회  
(유서대필관련 수감후 출소)  
일시: 1994년 11월 10일 목, 오후 7시  
장소: 원불교 전주교구청 소법당 3층  
주최: 인간다운사회실현을 위한 시민회
- ▲ 민주노총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1994년 11월 13일  
장소: 경희대학교  
주최: 민주노총건설 추진위
- ▲ 강희남 목사님 재판  
일시: 1994년 11월 1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 평화와 인권

준비 16 호(94.11.14)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주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화 : 0658-44-0152 팩스:0658-45-0152

## 『강기훈 초청강연회』전주에서 열려 전주시민회주최 시민들 진지한참여 ‘역사는 진실의 편에 서있고 도전하고 싸우는 사람의 몫’

지난 11월 10일 오후 7시, 원불교 전주교구청 4층 강당에서 유서대필조작사건의 주인공인 강기훈씨의 초청 강연회가 있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을 평소 표방해온 전주시민회(준) 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회는 “박홍 총장님, 제발 침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인가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진지하고 차분하게 설명해나가는 강기훈씨의 이야기에 150여명의 시민들이 진지하게 경청했다. 강기훈씨는 지난 91년 5월 당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분신한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당국이 ‘김기설 분신에는 배후가 있다. 수사를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뒤 바로 다음날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신문기사가 나오면서 당시 전민련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였던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한 것으로 언론에 의해 지목되어 여론재판을 받은 뒤 기소되어 실형을 구형받은 바 있었다. 3년여 형기를 마치고 지난 8월 17일 출소하여 3개월이 채 안된 강기훈씨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 절대로 사실이

아니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서대필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면서 “한마디로 과거 30년동안 정권이 위기에 처할때마다 만들어온 수많은 조작사건의 결정판”이라고 표현하였다. 강기훈씨는 “솔직히 지난 3년전 처참한 지경을 당하면서 민족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던 시기도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수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자리에 설 수 있었다. 진정으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 하였다. 강기훈씨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명예와 인권이 드레퓌스사건처럼 12년이 걸려 회복될지 아니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명예회복운동이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땅에서 다시는 정권의 희생양이 되어 억울한 구속과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사태를 예방방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속적인 ‘운동’을 다짐했고 시민들은 열렬한 박수로 강기훈씨를 격려하면서 이날 강연회를 마쳤다. - 뒷면에 강연요지 -

## 12월 10일 『평화와 인권』 드디어 창간

김영삼 정권 출범후에도 인권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인식아래 『정의평화정보센터』에 ‘인권하루소식’의 도움을 받아 전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알리기 위해 『평화와 인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준비호로 시작한 『평화와 인권』이 그동안 독자들이 소식지의 유용성에 대한 많은 격려를 해왔고, 취재 및 편집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어 ‘세계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창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식으로 창간될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바라면서 아울러 따끔한 충고도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 (강연요지)

강연이라고 했지만 강연이라기 보다는 91년에서부터 94년에 이르는 기간에 대한 증언이라고 생각해달라. 대전에서 출소한지 3개월이 채 못되었다. 아직은 출소자의 위치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느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출소직 후에는 도대체 뭐가 달라졌느냐고 감정적으로 대답하였다. 문민정부라고 말하지만 인권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이 나아진 것은 없지않은가. 그러나 이제보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유서대필이 사실이야 아니냐” 하는 식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힘되는 말들만 하신다. 그것은 이미 유서대필사건이란 것이 정권안보차원의 사건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만큼 사회가 건강해졌다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 돌이켜보면 당시 사건은 여론재판에 의해 이미 범인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대학 1학년때 드레퓌스 사건에 대해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책에 나오는 암암적인 정치인이나 운동가들처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다짐을 하긴 했어도 내가 드레퓌스 본인처럼 될지는 몰랐다. 강경대군 타살사건에 대한 전국민적인 항쟁이 일어나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5월 8일 박홍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연쇄분신에는 배후가 있다. 죽음을 부추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한 이후 5월 9일 청와대 당정회의가 끝난 직후 당시 정구영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분신의 배후가 있다.수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5월 10일 국민일보 석간에 분신한 전민련 김기설의 유서가 전민련 총무부장 K모씨에 의해 대필되었다는 기사가 실리면서 내가 이사건에 말려들었다. 그때만 해도 며칠이면 끝날줄 알았다. 그러나 언론은 이미 나를 단죄했다. 이미 촛점이 언제 구속될 것인가로 넘어갔다. 검찰에게 일말의 양심이나마 기대했던 것이 안이했다. 재판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으나, 6월 24일 검찰 출두성명에서 후시나하는 심정으로 “검찰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겠지만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을 했을 때 나는 이제 법원에 대한 기대는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 초기부터 이 기대는 무너졌다. 검찰은 철저히 나를 잡범으로 취급했다. 인격을 초라하게 만드는 모욕적 수사가 자행됐다. 그때 나는 시국사범들보다 일반잡범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유린을 경험했다. 잡범에게 ‘인권’이란 없다.

검찰은 철저한 상명하복의 관계를 유지한다. 팀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검찰이 양심있고 소신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본다. 저든 테두리에서 일하다보면 어느새 권위주의체제의 보루가 되는 것이다. 결국 유서대필조작사건은 과거 30년동안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만들어온 수많은 조작사건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판계 언론과 그외의 모든 기관이 함께 몰아간 사건이다. 유서대필을 확증한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다. 그때 내 필적을 검증한 사람이 김형렬인데 이 사람이 92년에 대규모문서위조단과 공모하여 필적과 인장을 위증해주고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당시 진행중이던 나의 항소심에 영향을 주게 도리 것을 우려해 검찰에서는 유아무야 끝내고 말았다. 언론을 생각해보자. 안경에 빨간 칠을 하고 보면 모든 것이 빨갱게 보인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걸려져야 할 이야기를 보도할 뿐 아니라 과장하고 뻔뻔하기 하는 언론이 있다. 지극히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책임도 안지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우리 역사상 잘못된 사람이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비극을 만들었다. 친일파, 12·12, 5·18등 역사에 죄짓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결국 검찰의 탈법수사와 법원의 왜곡판결로 실형을 구형받았지만 법의 집행자들이 법을 어긴 이러한 사건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드레퓌스 사건은 12년 걸렸지만 나의 경우는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역사는 진실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나는 지난 몇년만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 솔직히 유서사건을 피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지만 이제에는 아니다. 역사는 도전하고 싸우는 사람의 몫이다. 우연히 희생양이 되었지만 누군가도 지금 이시간에 죄없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힘은 구조적이고 너무나 크기에 완전히 한사람의 힘으로 없앨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력하면 줄일 수는 있다. 그럴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일을 하려는 것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당연한 소임이자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한다. 사건이전에 수행하던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겠다. 관심가지고 성원해달라. -끝-

### 민주노총준비위원회 발족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건설을 위한 1994 노동자대회가 3만여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희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양규현(전국노동자대표회의공동의장)은 대회사를 통해서 민주노총준비위원회가 정식발족됨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준비위원회는 결의문에서 “95일. 단투와 사회개혁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여 민주노총을 힘있게 건설하고, 복수노조금지조항 등 노동악법개정을 힘차게 전개하고, 전국의 많은 노동조합이 참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며,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별 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전북지역에서는 각단위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회단체 등 180여명이 참가했다

전에 앞서서 원전직업병문 제대책위 주최로 ‘산재추방 결의대회’가 열렸다. 양규현(전국노동자대표회의공동의장)은 대회사를 통해서 민주노총준비위원회가 정식발족됨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준비위원회는 결의문에서 “95일. 단투와 사회개혁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여 민주노총을 힘있게 건

전주교도소 재소자  
지난 8일 단식풀어  
지난 3일(한겨레 11월 6일) 시국사건으로 전주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들이 12.12군사무테타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항의하면서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외치며 집단단식농성을 벌였다. 가족들에 따르면 단식소식이 알려지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하여 보안과장 면담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고 한다.

# 평화와 인권

준비 17 호(94.11.21)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0658-45-0152

## 강희남목사 2차공판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려 통일운동의 대의, 당당하게 밝혀

지난 11월18일 오전 10시 서울지법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희남목사님에 대한 2차공판이 있었다. 이날, 강희남 목사님은 재판장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재판을 기본적으로 거부한다는 정신은 여전히 자신이 법률적인 차원의 자기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재판절차에 응하는 것"이라면서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담당검사는 논고요지에서 범민련활동은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 9기 5차회의에서 결의된 바 있는 '전민족통일운동 10대강령'을 범민련 자료집에 실었고 일본에 있

는 범민련공동사무국을 통해 팩스로 교신하는등 명백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그것이 우리가 해외일부에 보낸 것이 들어간 것이지 북과의 연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하였다. 검사의 논고중에서 [노동운동] 7,8월호에 '무엇이 된다고 야단들인가'하는 제목으로 실린 자신의 글을 공소사실로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는 7월 16일조문단사건과 무관한 이 글이 이 법정과 무관한 관계가 있는가 대답해달라"하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날 공판은 검사의 논고와 강희남목사님의 답변만으로 일단락되었다.

## 전북지역 여성단체연합 성폭력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성폭력 예방 위한 전문기관 필요'

지난 11월 19일, '성폭력에 방치로센터(대표:박상희)에서 '전북여성운동연합'이 주최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상희목사는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던 '김부남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김부남 후원회가 지난 3년간 활동해 오면서 성폭력피해의 중대성과 성폭력을 무엇보다 예방되어야 하며 이를 전달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했다는 요지로 <성폭력예방치료센터>를 개설하게 된 경과를 보고하였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의

12월 10일  
『평화와 인권』  
드디어 창간

김영삼 정권 출범후에도 인권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인식아래 「정의평화정보센터」는 '인권하루소식'의 도움을 받아 전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알리기 위해 『평화와인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준비호로 시작한 『평화와인권』이 그동안 독자들이 소식지의 유용성에 대한 많은 격려를 해왔고, 취재 및 편집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어 '세계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창간을 하게 됩니다.

창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격려문을 기다립니다.

개소식은 11월 25일 세계성폭력추방의날에 맞추어 26일 오후 1시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대표:박상희) 팔달로옆 국제화재빌딩 4층 (87-1658)

## 전주시민운동연합 결성 환경운동연합등 9개단체

전북환경운동연합등 9개 단체들은 18일날 각시민 단체장과 시민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시민운동연합'창립대회를 갖고 대표에 전봉호 환경운동연합의장을 선임했다. 시민운동연합은 선언문에서 "우리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부조리와 우리들 손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인

식에서 출발된다며 '단순한 연대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시민연합은 특히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우리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어야 하고 지역의 민주발전과 자치는 지역민의 의지로 이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며 전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 제소자에게 따뜻한 겨울을 한교협인권위, 재소자겨울나기후원사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6만여명에 이르는 재소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제소자겨울나기후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로 네 번째이며 교도소내 재소자들의 인권상황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재소자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교협 인권위에 의하면 의하면 교도소내에 겨울에는 월동용품이 제대로 공급되거나 독감등 질병에 걸

려 출수후에도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교협 인권위는 '제소자겨울나기후원사업'을 통해 전국 38개 구치소와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영치금, 보온물품, 담요, 성서보내기등 운동을 전개하여 성탄절과 설날에 보낼 예정이 다. 모금기간은 94년 11월 15일 -12월 31일 까지이다.

## ● 행사 안내 ●

- <우리농촌살리기도 농 잔치마당>  
주최: 우리밀살리기운동 전북협의회  
가톨릭농민회  
장소: 전 동 성 당  
기간: 1994년 12월 2일(금)-4일 (3일간)  
<조작간첩사건 이화춘공판>  
일시:1994년 10월 27일 토 오전 10시 전주지법  
<강희남 목사님 재판>  
일시:1994년 12월 2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성폭력 예방센터 개소식>  
일시: 1994년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 <창간준비 특집 대담> '전북지역 인권운동의 산실' 전북인권선교협의회(NCC)를 찾아

이번호는 창간을 맞이하여 '인권선교협의회'를 찾아 사무국장인 박창수님과 대담을 하였습니다. 인권선교협의회(NCC)의 역사에 대해 말씀해주시요. - 대략 15년정도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야말로 시국관련 집회용으로 만들었지요. 당시에는 운동공간이 전혀 없었어. 공식적 사회단체가 NCC에는 없었으니깐요. 고유사업으로는 양심수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전북지역 목사님들, 신상목사님, 백남운 목사님같은 분들이 주축이 돼 16명의 발기인이 모여 만들었어. 한창 활발하던 87-88년에는 회원이 150-200명이나 된 적도 있었어. 지금은 대략 70-80명 정도 되구요. 목회자가 그중 80%가량되지요. - 인원이 줄었다는 것을 위축되었다고 볼수 있을까요. -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좀더 정확히 보면 부문단체들과 제 역할을 찾아 전문화되어가는 것이라고 봐요. 말하자면 제 방향을 찾아가는 거지요. '조작간첩대책위'나 '의문사대책위'등은 인권운동이 전문화되어가고 있고 사회적 조건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 인권운동의 전문화의 주장과 앞으로의 인권운동방향과 관련하여 한 말씀하신다면? - 인권문제는 5,6공포보다 악화되었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분위기로 대략 느끼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말하

면 부문국가에서는 인권문제의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분단을 빌미로 인간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양심수로 불리우는 사람들의 80%정도가 국가보안법으로 잡혀들어갔고, 이런 의미에서 인권운동은 통일운동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권운동이 보다 전문화되고 대중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운동의 발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등 통일운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해야 할 인권운동의 과제가 있다면? - 인권운동은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적극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인권문제에 관련한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마치 달라진 것처럼 호도하는 사회적 불감증, 개인주의를 깨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가장 아쉬운점은? - 제작년까지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국회청원과 철야농성등을 계속하며 싸웠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9년당시 국가보안법개폐가 막 이루어지려는 시점에서 3당합당을 주도해 결국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게 만든 김영삼정권이 인권을 개선할 수는 없고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평화와 인권

준비 18 호(94.11.29)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0658-45-0152

## 김남석남매 무죄입증 위해 귀국할 각오 되어있다.

백홍용씨 김씨남매에게 편지

지난 10월 29일 안기부 프락치로 활동하면서 김삼석, 김은주씨 남매의 간첩단 조작에 참가했다는 양심선언을 한 백홍용(28, 일명 배인오)씨는 "김삼석, 은주씨의 무죄입증을 위해 들어올 각오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백씨는 24일<인권하루소식에> 보낸 '김삼석, 은주씨와 가족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김삼석, 은주씨의 무죄 입증을 위해 국내에서 할 일이 있다면 공항에서 안기부에 잡혀가는 일이 생긴다해도 (한국에) 들어올 각오가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김삼석, 은주씨의 간첩조작행위와 안기부의 비인간적인 면들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진술서에 서명을 거부

하던 김삼석씨에 비해 저런 안기부 비밀안가에 앉아 안기부원이 불러주는 대로 김삼석씨와 은주씨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진술서를 썼다"고 반성했다.

또 백씨는 "안기부는 언론사들에게 보이지 않은 압력을 가해 폭로 기사를 못내게 하고, 나에 대해 온갖 거짓 선전들을 해대고 있다"며, 그 예로 ▶백씨가 자발적으로 찾아갔고 ▶김씨남매는 백씨 제보로 구속됐으며 ▶94년초에 백씨와의 관계는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 등을 들었다. 백씨는 해외에서 양심선언을 한 이유로 안기부는 ▶비밀을 폭로할 경우에 대비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안기부원이 불러주는 대로 자술서를 쓰게하고 월급주는 장면을 사진촬영을 하며 ▶배신할 경우 죽게 된다는 위협대문이었다고 밝혔다.

## 「전북청년노동자장」이리 송학동 성당 가족, 동료등 150여명 참석

11월 26일(토) 오전 9시, 이리 송학동 성당에서는 고이정님 청년노동자장례위원회(위원장:이수금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상임의장)가 주관하는 장례식이 가족들과 동료들의 오열 속에서 이루어 졌다.

고이정님씨는 11월 24일 오후 5시 40분경 자신이 다니던 (주)쌍중섬유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중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졌다. 고이정님씨는 전남광주출신으로 전북대 상과대학 회

12월 10일

## 『평화와 인권』

드디어 창간 열흘앞으로 !!!  
많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삼 정권 출범후에도 인권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인식 아래 「정의평화정보센터」는 '인권하루소식'의 도움을 받아 전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알리기 위해 「평화와 인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준비호에서 18호를 마지막으로 준비호를 마무리하고 이제 막바지 창간작업에 임합니다.

좀더 완성된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창간호에 힘이 되어줄 여러분의 격려문을 기다립니다.

계학과를 졸업한 후 이리에 정착하여 1년전 쌍중섬유에 취업하여 노동자로 살아오면서 쓰러진 당일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 11시30분경 고이정님씨가

다니던 회사앞에서 동료들이 오열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노제가 이루어 졌으며 곧이어 전북대를 거쳐 고향인 광주 망월동 일반묘역에 묻혔다.

## 조작간첩사건 이화춘씨 1차공판 열려 공작금 받은 사실 전면 부인

지난 11월 26일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화춘씨에 대한 1차 공판이 가족과 친지, 그리고 본지 발행인 문규현신부 및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 신부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화춘씨가 지난 1974년 울릉도간첩단사건과 연관된 숙부 이좌영씨를 일본에서 만나고 그로부터 받은 오천여만원이 공작금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화춘씨는 '그것은 안기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작성된 진술내용에 근거한 것일 뿐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검찰은 이화춘씨가 타인의 명의로 외환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은 일종의 공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검사의 억지주장에 대해 청중들이 웃음을 터트리는 가운데 이화춘씨는 자신이 숙부에게 돈을 요구했을 때 그것은 생활비를 보조받기 위한 것이었고 구체적인 액수를 지정해 요구한 적은 없으며 자신의 장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은 이미 그 통장이 있었으며, 당시 익산군농민회에서 농민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불만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에 가서 자신의 숙부에게 남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소식을 보고하고, 재야인사의 명단을 보고하였거나 성명미상의 북한공작원을 만나서 토론을 하였다는 등의 기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자신이 민중정당활동을 하던중 「노동해방문학」 등에 나타난 박노해등의 입장에 지지의사를 가지고 있다가 92년 <사노맹>가입을 권유받아 후보조직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는 기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검찰측의 기소사실에 대한 심리만을 마쳤는데 12월3일 오전10시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개소식

-성폭력 상담과 쉼터마련등에 주력할 계획-

11월 26일 오후 1시 원불교 전주교구회관 3층 소강당에서 「성폭력예방치료센터」(공동대표:박상희 목사 박창신 신부 백남운 목사) 개소식이 있었다. 지난 10월 15일 현관문을 마친 뒤 1달여의 준비끝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회원들과 지역여성운동 관계자들을 비롯한 시민 80여명이 참석하였다.

공동대표인 박창신 신부는 개회사를 통해 이날 행사의 의미를 '하느님의 제일 귀중한 선물인 성을 제대로 들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은 희망과 기쁨이

되는 것'이라며 '이운동은 전적으로 전시민운동, 전사회운동으로 발전되어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센터」를 실질적으로 준비해온 공동대표 박상희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며 시작된 것'이라며 '뜨거운 격려를 보내준 피해자들과 소중한 정성을 모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의 전화' 이근우 대표와 '성폭력상담소' 최영애소장의 축사와 방

송인 오숙희씨의 강연에 대하여 청중들은 공감을 표시하였다.

공동대표 백남운 목사의 소개로 「센터」에서 일할 실무자들을 소개할때마다 박수로 격려하였다.

이날 「성폭력예방센터」는 앞으로 성폭력 상담과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 마련, 그리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강연과 호신술 강좌등 다채로운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9-10 국제화재 4층  
전화 87-9647

## 사형제도 문제점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지난 1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마련한 '90년대 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가 김제덕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지존파' 사건중 김기환씨와 강동은씨의 변론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이진록변호사등 시민 1백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김제덕 형사과장의 검거경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신고자의 보호와 경쟁.공로수 사형제에 대한 토론자와 참석자의 비판이 있었다.

이현희(사회학 박사)씨는 "사회지도규범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존파의 범죄는리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규범적 혼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차병직 변호사(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집중심리제도의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오용은 즉속심판의 위험을 남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형을 비롯한 모든 형벌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목적에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형벌의 제법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쓸것인가, 행위후보적 수단으로 쓸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고은태 부지부장은 사형제도가 범죄억제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며 "한국은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수가 1백여개가 되고, 매년 9명에서 15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되고 약 50여명의 수인들이 사형대기중"이라고 밝혔다.



□장기수 선생님과 대담□

평화와 인권은 장간을 맞이하여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출옥장기수 한분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권문제의 현주소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장기수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장기수 선생님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인권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어떻게 해서 운동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구속당시 검사기 왜 좌익이 되었나하는 것을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한적이 있었어요. 일제식민지하에서 이민족에게 고통받았는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만 바뀌었지 가혹한 제도는 여전히 남아있고. 진정한 독립을 위해 미국의 반대편에 서서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나의 경우 평생 가난했고 일본에 가서 살면서 일본인 아래서 모진 고생을 한데다가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었던 것이 계속 운동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다른 장기수 선생님들의 근황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30년 넘게 단안(감옥)에서 살다 나와보니까 '우리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 친구들은 다 죽었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지. 우리는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쩔때는 단안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편안하니까요. 담밖은 거칠 것이 많아요. 통장이 감시하고 경찰들이 집적거릴 때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 평생에 가장 오래 산 때가 형무소이다보니 거기가 고향이 되어버린 거죠. 전주 평화동 형무소를 어쩌다 가게되면 증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그집(감옥)이 오히려 다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1년이 넘어서야 기차, 지하철, 버스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익숙해진 다는것은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순수성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 사회와 제도를 반대하는 내가 이속에서 산다는 그것이 씁스럽고 그럴 때가 많아요. 이세상은 완전히 가치관이 전도된 사회예요. 어련에 얻은 사람이 차를 타면 일어서야 하잖아요. 나는 얼른 일어나 비켜 주는데 다른 이들은 그게 이상하다고 말들을 해요. 애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말리고 쓰레기가 있으면 주우려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하는게 낫다고 하거든요. 이러니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이 혼동되는 겁니다. 나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있어요.

△ 장기수 선생님을 생활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랜 기간동안 장기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야 다 알고 있는거구. 빨리 통일이 진전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지요. 단안에서 나온 분들은 고생도 많이 하

고 그러긴 하지만 오래 있다보면 다 자리를 잡고 살아요. 단안 사람들보다는 생활이 편하하지요. 이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성을 체험하는 것이기도 하니 통일이후도 대비할 수 있고... 뭐 좋지요. 모르면 지는거니까. 단안에 있는 동지들도 옛날과 비교해보면 참 잘사는 거지요. 영치금도 들어오고, 주부식도 좋아지고, 운동도 하고, 신문도 다 들어오고. 적어도 이제는 배고파서 죽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80년 박관현씨 죽은 뒤부터 단안에도 민주화가 실천되었지요. 박관현씨의 죽음은 1인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되는가를 실감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통일만 되면 죽어도 좋아요. 통일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고 통일이후가 더 힘들다는 것이야 독일만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들(장기수)의 과업은 통일로 일 단락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미국의 조선반도에 대한 밸런스가 잡히면 통일은 진전될 거라고 봅니다. 내나라 내민족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념을 떠나 내나라 내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력한다면 가능합니다. (운동을) 급하게 하지 말고 진실되게 힘에 알맞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살아야 100살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와 내나라 내민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발전합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인터뷰를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사 안내 ●

- △ 제3회 연합공개토론회 한국사회의 정신적 황폐화  
주최 : 전북민교협, 호남사회연구소  
일시 : 1994년 11월 28일 오후 2시(전북대합동강당)
- △ 우리농촌살리기도 농 잔치마당  
주최 : 우리밀살리기운동 전북협의회 가톨릭농민회  
장소 : 전 동 성 당  
기간 : 1994년 12월 2일(금) 4일(3일간)
- △ 감희남 목사님 재판  
일시 : 1994년 12월 2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 △ 조각간첩 이화춘공판  
일시 : 1994년 12월 3일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감방에는 사상이려없는 장기수와 양심수들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복역하고 있는 장기수와 양심수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마음기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 전북지역 복역중 장기수 현황 □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적용법규	구속날짜	형량	만기일	수감지
최수일	장		남 파	국보	65.03.04	무기	30년복역	전주2041
김창원			남 파		69.06.12	무기	26년복역	전주2063
진창식			행방불명자가족사건		79.07.15	무기	16년복역	전주2679
최수열		군인	월북기도		87.06.22	15년	2002.6	전주2014
석달운		농업	행방불명자가족사건		80.10.06	무기	15년복역	전주2120
손유형		사업가	채일교포		81.04.15	20년	2001.4	전주2039
장의균		서강대,출판인			87.07.05	8년	95.7	전주2006
신광수		서울보성중졸	남 파		85.02.16	15년	2000.6	전주2053
최해보		원양어업	일본관련		85.03.30	15년	2000년	전주2056
문철태		전고교교장	개별국보		85.08.13	무기	10년복역	전주2019
방양균		전국회의원비서	방북사건		89.06.28	7년	96.6	전주2125
함주명		회사원	월남자사건		83.02.18	무기	12년복역	전주2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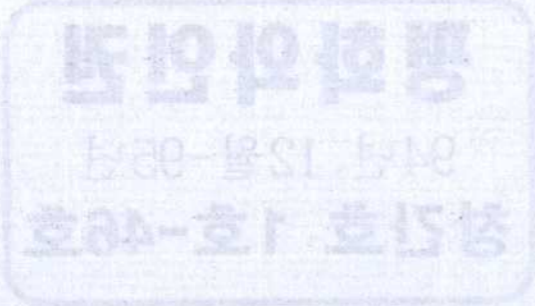
□ 전북지역 장기수 외 양심수 현황 □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적용법규	구속날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김효섭	계		일본관련	국보	92.00.00	5년	97년	전주2036	
이화춘		구이리민중당			94.08.26	미결		전주 324	
김현찬		서울대졸	남한조선노동당		92.09.11	3년	95.9	군산 986	
김정호		서울대졸	사노맹(3차사건)		92.04.29	3년	95.4	군산 958	
이경섭		인천대졸	남한조선노동당		92.09.15	10년	2002.9	전주2037	
손병선		전민중당	남한조선노동당		92.09.28	무기	2년복역	전주2141	
박현철	학	부산대	사노맹	집시,폭력	92.11.10	2년	94.11	전주2091	
태재준		서울대	전대협		92.08.10	4년	96.8	군산 989	
김현철		원광대	범민족대회		94.08.18	미결		군산 953	
송정훈								군산 968	
김선기								군산 978	
김용운								군산 984	
강홍석								군산 987	
하현기		한양대	사노맹		국보	92.04.29	4년	96.4	군산 955
박미영		원광대	단기학생동맹				미결		
박수진									
임현주									
단은경									

# 평화와인권

94년 12월-95년

창간호 1호-46호



# 평화와 인권

창간호 (94.12.10)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규현  
편집인 : 유경은  
주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창간사>

## 영원히 지켜야 할 '인권'을 생각하며

모든것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도 오직 '인권'의 가치는 영원한 것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영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 귀중히 여기기를 한낱 티끌보다 못하게 여기던 군부독재가 끝나고 이른바 문민정부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성수대교의 붕괴, 인천, 부천의 세금도둑과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건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가 어느 지경에 와있는지를 말하여 줍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의 소금역할을 할 사람들, 우리들 자신이 바로 서서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평화와 인권」은 영원한 가치, '사람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저자씨만큼의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평화와 인권」은 우리들 자신이 어디에 서있는 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한조각 밑받침이 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평화와 인권」은 인권단체들이 지금까지 해온 수많은 일 가운데서 인권문제에 대한 소식을 정기적으로 보급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선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권소식지와 전북 지역의 인권운동에 힘입어 시작되는 「평화와 인권」이 자리를 잡아 우리 지역의 양심적인 모든 분들이 인권소식을 빠르고 소상하게 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편집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평화와 인권」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진심어린 조언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충고와 조언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열아홉번째의 소식지를 내놓으면서 「평화와 인권」 창간호라 이름합니다. 창간호가 나오기까지 예씨준 실무팀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애정어린 비판 보내준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994년 12월 10일 인권주간에 문규현

### 제호의 글씨체가 바뀌었습니다.

창간준비 1호에서는 제호의 글씨가 궁서체였으나 중간에 생물체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창간호 부터 다시 제호를 궁서체로 환원합니다. 창간을 앞두고 그동안 발행해온 준비 1호부터 준비 18호를 다시 살펴본 결과 제호에 궁서체를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데 편집진의 의견이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았던 오자와 탈자, 그리고 맞춤법이 틀리는 실수를 창간준비 시절보다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알찬 기사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평화와 인권」 -편집진-

### 양심수의 겨울나기를 돕기위한

#### 「평화와 인권」 캠페인

「한점 물방울이 큰 강물을 이루듯이」

창간준비 마지막호인 18호에 전북지역에 수감중인 양심수 명단이 실려있습니다. 이 분들을 비롯하여 지금도 수없이 많은 양심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모두가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화와 인권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정성을 모아 양심수들의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성금보내실 분은 다음 계좌번호로 보내주시요.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0967

예금주 문규현

### 구국전위사건

#### 안재구씨 무기정역 선고

한국가단체 「구국전위」를 결성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안재구(61, 전 경희대강사)씨에게 무기정역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사지법 합의 21부(주심 윤강렬 판사)는 30일 "구국전위가 반국가단체이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등 검사의 논고를 대부분 인정하며 이와같이 선고했다. 이와함께 공작금으로 받은 2억7천6백여만원을 추징한다고 판시했다. 또 '구국전

위 결성축하문이 조각되었으며 구국전위는 북한 조선노동당과 무관한 조직이다'는 피고인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씨를 제외한 3명에게도 선고가 내려졌는데, 구국전위 조직원인 정화려(30, 무기구형)씨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공작금으로 받은 1천 5백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 나홀간 잠안제우고 각목으로 구타 조작간첩사건 이화춘 3차 공판

12월 3일 오전 10시 전주 지방법원에서 조작간첩 이화춘씨에 대한 2차 공판(재판장:백영엽)이 가족과 전주 교구신부님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측(변호사:양상렬,김한주)심문이 진행되었다. 변호인 심문에서 이화춘씨는 연행직후 발가벗겨진 채로 4일동안 거의 잠을 재우지 않았고 각목으로 구타했을 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해 거명된 사람들을 모조리 집어넣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그들이 요구하는 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후에 안기부 직원이 진술서를 만들어서 베끼도록

한 뒤 수없이 반복수정하여 마지막 남은 진술서에만 지장을 찍게 만들었는데 9월 14일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에도 안기부에서 겪은 충격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작성한 공소내용에 대해 부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화춘씨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 수사팀장 최형오가 구국전위사건 수배자 이광철을 못잡아 며칠전 구속이 결정되었다고 발언하는등 수사관들의 언동으로 불매 박홍총장 발언이후 공간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안기부 전북지부가 조작한 간첩사건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 심문만으로 끝났다. 취재 - 조 문 익

#### 강희남 목사 3차 공판 - 변호인 심문 진행

12월 2일 오전 10시 강희남목사에 대한 3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다. 결심공판은 12월 23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 “한국사회의 정신적 황폐화”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호남사회연구회  
제 3 회 연합토론회

11월 28일 전북대학교 합동강당에서는 「한국사회의 정신적 황폐화」 '인성이 문재인가 제도가 문제인가'에 대한 연합공개토론회가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와 호남사회연구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인 김의수교수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잇달아 발생한 엽기적이고 정신분열증적인 살인사건은 한국사회전반의 인간성 상실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최근의 일어나고 있는 대형사건들은 우리사회 전체가 썩어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이고 우리사회가 어떻게 든 건강성을 되찾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취지에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하였다.

#### 일본군 위안부문제 국제증제 재판소로 보내야

UN 자문기관이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법률가협회 가 지난 22일 최종보고서에서 희생자들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할것을 촉구한 가운데 25일 일본의 「위안소문제소위원회」는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 지급안을 수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국제증제재판소(PCA)한일변호인단은 변호사회 별관에서 첫 세미나를 갖고 PCA에 의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김교수는 한국사회의 정신적 황폐화는 역사적으로 식민지통치와 군부독재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지배세력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사로 인한 병든사회제도 때문이고 그러므로 정부차원에서는 보수세력에 대한 물갈이가 국민적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 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위 행복교수(전북대 중문과)사 사회를 보는 가운데 신대균 목사(경실련상임집행위원) 이미영 교사(전교조 전북지부장) 전봉호 변호사(전북시민운동연합대표)등 각기 다른 분야의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발제자와 함께 한국사회의 건강성을 찾기위한 방안에 대하여 열띤 주장을 펼쳤다. 취재 - 조 문 익

####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방한

자카르타 APEC 정상회담에서 동티모르의 인권상황이 국제문제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는 시점과 발맞추어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고영구)는 로케 로드 리게스 씨를 초청했다. 로드리게스씨는 동티모르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여만명이 학살등으로 숨진 사실들을 증언하고, 동티모르의 인권보장과 독립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 ◎ 행사 안내 ◎

- ▲12월 17일 오전 10시 이화춘 3차 공판
- ▲12월 23일 오후 2시 강희남 목사님 결심공판

# 평화와 인권

제 2 호 (94.12.19)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 스 : 0658-45-0152

### 제46회 세계인권의 날 각 단체들 기념행사 전북지역에는 인권행사 없어 아쉬움 남겨

12월 10일 전국 인권단체들은 제 46주년인 이날을 기념하여 성명을 내고 대체로 행사를 가졌다.

#### 민가협,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성황

올해로 6회째 맞는 민가협의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10일 오후 5시 한양대 올림피아체육관에서 8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의 44번째 겨울을 극화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민가협은 12월 6일 현재 모두 436명의 양심수가 있다고 발표했다. 94년 한해 구속된 양심수는 총 736명으로 작년 195명에 비해 약 3.8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KNCC 인권위 20주년 기념행사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 목사) 8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회협 인권위 20주년 기념식과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제 8회 한교협 인권상은 한국 정신대 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윤정옥씨

와 이효제씨에게 돌아갔는데 인권위는 시상이유를 "정신대문제의 정의롭고 조속한 해결이 민족의 자존성을 세우고 일본의 사회와 배상만이 과거청산의 길임을 양국 정부에 촉구하는 등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선언일 기념 가두캠페인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대구백화점 앞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권주일 성명서 발표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12월 4일 대립 2주인 인권주일을 맞이하여 '고난받는 이들에게 다함없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불교 인권위, 양심수 겨울나기 펼쳐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는 12월 10일 46회 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양심수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성금을 모으고 있다.

### 격려사

「평화와 인권」의 창간을 보며

모든 사물이 움츠려 들고 처참하기까지한 계절 한가운데 우리가 서있습니다.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에도 감옥에는 아직 수많은 양심수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갇혀 이 추운겨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권에 의해 계속자행되고 있는 조작사건 등으로 죄없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간첩도 되고 그리운 사람들과 헤어져 초보적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예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전북지역에서 인권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한 모임이 벌써부터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기쁘고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창간호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우리 전북지역의 인권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의 인권이 개선될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수많은 양심수들이 한겨울의 추위를 가족과 함께 고통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앞당겨 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평화와 인권」의 발전은 곧 우리 민족과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창간을 위해 몰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 상임의장 이 수 금

### 양심수의 겨울나기를 돕기위한 「평화와 인권」 캠페인

“한점 물방울이 큰 강물을 이루듯이”

전북 지역에는 수많은 양심수들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화와 인권에서는 이러한 정성을 모아 양심수들의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성금보내실 분은 다음 계좌번호로 보내주시지요.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0967  
 예금주 문 규 현

### UR국회비준 저지와 12·12 반란자 처벌을 위한 전북도민대회

민주주의민족통일 전북연합(의장 이수금)은 12월 10일 오후 2시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시민과 농민 학생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UR 국회비준 저지와 12.12 반란자 처벌을 위한 전북도민대회」를 가졌다.

홍겨운 땀물가락에 맞추어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산하 회원들이 경찰의 저지망을 뚫고 속속히 도착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북연합은 'UR비준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농업과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이행법안과 농업정책을 마련한 뒤 비준하자고

주장하였다. 또 12.12 반란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오천년 민족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김영삼 정부가 진정으로 세계화를 원한다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삼정부가 '문민정부'이기 위해서는 군부독재정권의 과오와 유산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라북도노동조합연합회 이송준의장의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대회를 마친 농민들과 시민, 학생들은 팔달로를 따라 다가공원까지 행진하면서 요구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였다.

취재 - 조문익

### 겁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라도 연행은 불법

현행범일지라도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 및 구속사유, 변호사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연행했다면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 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유주운전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법관의 영장에 근거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연행하는 것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조작간첩사건 이화춘재판 증인신문 연기

12월 1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이화춘씨 사건에 대한 공판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검찰측이 요청한 증인이 출두하지 않아 추가증인을 채택한 뒤, 95년 1월 6일 오후 2시로 연기 하였다.

### 전국연합 이창복의장 정역 10월 선고

지난 9일,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 북한 통일 방안 찬양 등의 이유로 정역 10개월이 선고 되었다.

### ◎ 지역 소식 ◎

- ▲강희남 목사님 재판 12월 23일 서울 형사지법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 송년회 1994년 12월 22일 저녁 6시 30분 목원한식가든

### UR국회비준 저지와 12.12반란주범 처벌을 위한 전북 도민대회 결의문

갑오농민전쟁 100주년이 되는 1994년은 엄청난 재앙과 사건, 사소,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한 해였다. ... 더이상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 누구와 함께 이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여 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을 비롯한 모든 애국세력은 작년 12월 UR협상 잠정 타결 이후 국회비준 상정을 연기하고 UR협정문에서 보장해주는 권리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협상결과를 수정하기 위한 후속협상을 벌일 것을 정부당국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UR국회비준을 날치기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전북연합은 200만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를 정부당국에 제기한다.

하나, 정부는 미국의 UR 이행법안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UR 이행법안을 제정하라.

둘, 정부는 UR협정문에서 보장해주는 권리를 찾기 위하여 미국과의 후속협상을 벌여야 한다.

셋, 정부는 우리의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농업보호법을 제정하라.

넷, 남북간의 거래를 민족 내부간의 거래로 인정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12.12반란주범에 대한 처리이다.

12.12는 명백히 군사반란이었다. 검찰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력소모와 국가안정을 저해한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소리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원래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기소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그 범죄를 인정하고 누우치는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12.12반란주범인 전두환, 노태우 등은 이 사실에 대한 죄를 누우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을 다시 고소하는 후안무치의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런 자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대다수 국민의 뜻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사실을 검찰은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하여 12.12반란자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역사적 책무에 대한 방기이며 권력형 부정부패와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인정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대통령과 검찰에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천명한다.

하나, 검찰은 12.12반란자에 대한 즉각적인 기소를 해야 한다.

둘, 12.12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 12.12반란자에 대한 공직배제 및 서훈 박탈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994.12.10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

###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좀더 많이 배포되고 좀더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요. 정기구독해주시는 만큼 가능해집니다. 1년 구독료는 3~5만원입니다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0967  
예금주 문규현

# 평화와 인권

제 3 호 (94.12.26)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계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 강희남 목사 선고에 앞서 최후진술, 재차 재판거부의사 밝혀 우리나라 법 적용, 없는자에게는 가혹 있는자에게는 관대

12월 23일 오후 2시 서울 형사지법 311호 중법정에서는 민가협, 범민련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희남 목사님에 대한 결심공판(재판장:고항식판사)이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게 된 강희남 목사는 법과 정치에 대해서 비판한 뒤 재판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그동안 재판에 임해온 것은 단지 사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였으므로 이제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재판에 임하는 것이 이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제 최후진술에서 강희남 목사는 우리나라의 법 적용이 있는 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면서 12.12 반란자들에 대한 처벌이 기소유예로 끝나고 박태준씨의 40억 뇌물수수가 무혐의처리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기협 철도노동자들을 수십명 구속하고 UR 시위농민들을 억압하며 상계동 빈민들을 거리로 내몰은 것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법의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운동에 대해서도 분단의 지속은 곧 예측의 심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단을 끝내고 통일하자는 인사들에 대해 탄압하는 것은 민주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희남 목사는 "역사속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은 정의이며 정의의 바윗돌만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재판거부가 옳다고 믿어온 자신의 양심에 더이상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재판거부의 원칙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취재 - 조문익 -

### 「UR반대투쟁보고와 구속자 석방촉구대회」 대전역과 각 군에서경찰 원천봉쇄로 무산

WTO체제 출범에 대한 충분한 사후대책없이 WTO동의 안이 통과 됨에 따라 농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12시 대전역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UR반대투쟁보고와 구속자 석방촉구대회」가 경찰의 집회 불허 방침과 철거한 원천 봉쇄로 무산되었다.

이날 대회를 준비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북 도연맹과 충남북도연맹 소속 농민들은 각군 단위로 원천봉쇄하는 경찰병력에 의해 대회 참여가 불가능해 해지지역단위로 집회를 가진 뒤 가진 해산 하였다.

한편 지난 13일 전북도연맹 산하 농민회원들이 차량 50여대를 이용 논산부근에 있는 가운데 23일 12시 대전역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UR반대투쟁보고와 구속자 석방촉구대회」가 경찰의 집회 불허 방침과 철거한 원천 봉쇄로 무산되었다.

한편 지난 13일 전북도연맹 산하 농민회원들이 차량 50여대를 이용 논산부근에 있는 가운데 23일 12시 대전역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UR반대투쟁보고와 구속자 석방촉구대회」가 경찰의 집회 불허 방침과 철거한 원천 봉쇄로 무산되었다.

### “한점 풀방울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이”

전북 지역에는 수많은 양심수들이 수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화와 인권에서는 이러한 정상을 모아 양심수들의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성금보내실 분은 다음 계좌번호로 보내주시요.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0967  
예금주 문규현

### ◎ 재판 안내 ◎

- ▲강희남 목사님 재판 1월 6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 ▲이화춘 공판 1월 6일 오후 2시 전주 지방법원
- ▲범민족대회관련 원광대생 5차재판 1월9일 군사지법

### 국민의 알 권리,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 자의적인 정보공개 제한 가능성도 있어

총무처는 21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시안은 누구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및 공공기관이 보관중인 문서와 전자자료 등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등에 각각 5-7명의 위원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정보에 식견이 풍부한 민간인이나 3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 경력자중에서 임명, 위촉토록 했다. 또 시안은 국가안보나 외교상 이익, 개인생활 보호, 법인과 기업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등 9개 항목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거부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실련, 참여 연대등은 18일 공청회를 갖고 정보공

개대상이 될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비공개사유를 여덟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나 불확정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지나치게 많아 정보공개 거부의 빌미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공청회에서는 또 비공개 결정에 구제를 담당할 정보공개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성재)는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란 주제로 심포지움을 15일 오후 3시 정립회관에서 장애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발제자로 나온 김중영 교수(계명대 건축공학과)는 "접근권은 국가나 사회가 장애인에게 베푸는 특혜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시민들을 위해 마땅히 확보해 주어야 할 권리이다"라고 말하며 "현재 우리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도시, 건축시설에서 부딪치는 물리

적인 장벽과 사회의 편견, 정책상의 불합리로 겪는 사회적 장벽등 이중적 고통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장애인 편의 시설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제상의 미비점과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것을 지적하며 법의 강제적 적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본의 장애인 복지모델 도시만들기 운동을 예로 들며 "시민의 공감대 확보를 기초로 하여 상상화된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전문기구의 설치"를 주장했다.

준비호부터 이번호까지 「평화와 인권」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사드립니다. 1994년 한해 잘 마무리 하고 1995년도 기쁘게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 노력하는 「평화와 인권」이 되겠습니다. 새해준비로 인하여 1월 첫 주는 휴간합니다.

### 불교인권위, 공동대표선출 사형제도위,노동위등 본과신설

불교인권위는 19일 총회를 열어 한상범 동국대 교수, 진관스님을 공동대표, 지원스님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사형제도 폐지위원회, 노동위원회등, 통일위원회 신설하고 여성분과등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불교인권위는 90년 11월 22일 창립, 사회의 민주화와 불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왔고, 장기수, 양심수 돕기운동, 교도소에 경전보내기 운동등을 전개해왔다.

### 천주교 조작간첩 대책위 조직협의 장기수 면회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공동대표:김승훈신부등5명)는 지난 19일 일본관련조작간첩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전교도소를 방문 강희철 씨등 장기수 7명을 만났다.

### 노동부, 여성근로자 50세 넘어도 유급생리휴가 인정

50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라 하더라도 연령에 관계없이 유급 생리휴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 법민족대회 관련 원광대 학생 4차 공판 학생들 복일동 파출소 사건 무관 주장

23일 오후 2시 군산지법에서는 법민족대회참가와 이리 복일동 파출소습격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김현철 군의 4명에 대한 4차공판이 있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측증인들은 김현철군등이 복일동 파출소 습격사건과 무관함을 증언하였고 피고

인들 또한 수사중의 강압적 분위기와 고문으로 인해 기소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음 공판은 1월 9일 속개될 예정인데 검찰측 증인 가운데 출두하지 않은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한 뒤 곧바로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좀더 많이 배포되고 좀더 다양한 취재 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정기구독해주시는 만큼 가능해집니다. 1년 구독료는 3~5만원입니다.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0967 예금주 문규현

# 평화와인권

제 4 호 (95.1.6)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규현  
 편집인 : 유경은  
 주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 도내 작년 한해 시국사범 크게 늘었다. 시위마다 강경대처 93년 비해 10배 이상

94년 한해 WTO비준 저지 투쟁과 신공안정국 반대등의 각종 시위와 관련 도내에서 경찰차 연행되거나 구속된 사람이 93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정부 들어서 경찰이 「불법시위 엄단」이란 원칙만을 강조, 집회때마다 강경 대처로 시국사범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양산된 풀이어서 새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전북 경찰청에 따르면 94년 10월까지 시위와 관련 연행된 사람은 모두5백76명이고, 이는 연행자가 52명이었던 93년보다 11배나 증가한 것이며 구속자는 여섯 배이상 늘어난 숫자다.

특히 지난 8월 16일 새벽에 서울 법민족대회에 참가하고 귀향하던 전북대등 대학생 4백 13명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한꺼번에 연행, 전북경찰 사상 최단시간 최다 연행이라는 신기록을 세워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또 11월 이후 WTO국회 비준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농민들의 시위도 거세져 지난 12월 13일 도내 농민 회원들이 호남고속도로를 점거한채 시위를 벌이다 이중 58명이 충남·충북 경찰에 연행돼, 이중 7명이 일 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구속되고 11명이 불구속입건된 것등을 포함하면 시국사건

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4년 10월까지 시위와 관련 연행된 사람은 학생이 4백67명, 농민 12명, 무직자가 16명등이다. 이 가운데 19명이 구속되고 61명이 불구속 입건 즉심 2백58명 2백38명이 훈방됐다.

## 조작간첩 이화춘 사건 안기부, 거짓 진술서 작성케 한 사실 드러나

조작간첩사건으로 구속된 이화춘씨에 대한 제4차공판(재판장:백영엽)이 1월 6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에서 문규현, 박병준 신부와 친지가족등 70여명의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 가운데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증인들 가운데 박의순씨와 이순덕행, 전북경찰 사상 최단시간 최다 연행이라는 신기록을 세워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박의순씨는 안기부전북지부가 지난 1993년 국가보안법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집

행유예기간인 박씨에게 접근하여 이화춘씨가 일본에서 북한공작원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진술하도록 강요하였고,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를 적용하여 재 구속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화춘씨의 처인 이순덕씨의 경우도 일본의 숙부 이확영씨가 보내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안기부직원이 이화춘씨의 진술서를 보여주며 진술하도록 강요하여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따라 적었다는 것이

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 가운데 참석하지 않은 최갑선씨외에 이병일, 문성섭, 정정덕씨를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한 뒤 증인신문을 마무리 하였다.

## UR반대투쟁 구속전북농민 전원 구속취소로 풀려나

지난해 12월 13일 논산부근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혐의로 구속된 전원이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거나 구속이 취소되어 풀려났다.

전북도연맹에 의하면 농민들이 구속된 이후 즉각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23일에는 「구속자석방촉구대회」를 개최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공주교도소에 수감되어있던 소기섭, 반현수, 유기홍, 엄대용씨등 4명은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12월 26일 풀려났고,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조진권, 김종진, 이경규씨등 3명은 구속이 취소되어 12월 28일에 풀려났다는 것이다.

한편 전북도연맹은 UR이행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UR이행법안이 실제로 농촌현실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싸워나갈 예정이

## 강희남 목사 집행유예로 풀려나

법민련과 방북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강희남 목사가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에서 선씨외에 이병일, 문성섭, 정정덕씨를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한 뒤 증인신문을 마무리 하였다.

### “한점 물방울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이”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80여만원의 성금을 모아 전국교도소에 있는 양심수 및 장기수 분들께 보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김영삼 대통령 '킹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 인권침해자, 세계적인 인권운동가로 둔갑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지도자 마틴루터 킹 목사를 기념하는 '비폭력 사회변화를 위한 마틴루터 킹 센터'(소장 스코트 킹, 킹목사의 미망인)는 지난해 12월 30일 '킹 평화상'의 18번째 수상자로 김대통령을 선정했다. 김소장은 "김대통령의 생애와 활동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데 있어 결코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비폭력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수상이유를 밝혔고, 또 김대통령이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이끌었고 언론자유와 사회개방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이 '킹 평화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자 국내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각계반응**  
고영구(58, 인권협대표)변호

는 "이런 상을 받는 사람이 상존하는 제도적인 폭력을 말끔히 해결하지 못하면 수상자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남(46,한교취 인권위사무국장)목사는 "김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에는 이런 상을 받을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다"면서 "이 상을 계기로, 화해의 정신을 발휘, 500여 양심수를 석방하고, 북에 가족과 친지를 두고온 장기수들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규업(43, 전국연합정체위원장)씨는 "킹 목사는 평생을 흑인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다 희생된 분으로 변절한 김대통령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김대통령은 인권문제에서는 과거의 독재자보다 더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원 고한 광부들 9일째 갱안농성 폐광에 따른 생계대책 마련 요구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중앙개발 광산 노동자들의 갱안 농성이 5일로 9 일째를 맞았다. (주)삼척 탄광의 채탄도급업체 정리에 따른 중앙개발의 무단해고에 맞서 65명이 시작한 농성은 탈진한 사람들을 빼고 현재 60여명이 농성중이다.

농성중인 광산노동자들과 가족들은 5개월치 평균임금과 이사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갱안이 워낙 습기가 많고 단진이 많은 열악한 환경이라 매우 힘들게 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강원도내의 채탄업체 40 - 50%의 강원계획을 세우고 있어 올해에도 광산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채탄량을 감산하는 기업에게 정부는 톤당 2만1천 8백여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 자리를 잃은 광산노동자들에게는 통상임금 4개월 이상의 지급만을 정해놓고 있다.

### 재판안내

- ▲ 이화춘 5차공판 1월 16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 ▲ 범민족대회관련5차공판 1월9일 오후2시 군산지법

# 평화와 인권

제 5 호 (95.1.16)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 스 : 0658-45-0152

## 네팔노동자들,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항의농성 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 정식 발족

지난 94년 6월 취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여권을 압수당하고 장시간 감금 노동에 치친 네팔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요구하며 9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항의 농성을 시작하였다.

네팔인 목타지움씨등 13명은 호소문을 통해 △기술연수 실시 △장시간 노동에 △감시감금노동철폐등을 촉구 했다.

네팔인 목타지움씨등 13명은 호소문을 통해 △기술연수 실시 △장시간 노동에 △감시감금노동철폐등을 촉구 했다.

네팔인 목타지움씨등 13명은 호소문을 통해 △기술연수 실시 △장시간 노동에 △감시감금노동철폐등을 촉구 했다.

행과 구타, 여권 압수등 밤 인권적인 행위를 엄중처벌하고 취업연수생 제도를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에는 '외국인 산업 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민주노총(준)등 32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정식 발족되었다.

공동대책위는 주요 정부기관 방문,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에 대한 종합조사단 구성, 국제기관에 제소 및 헌법소원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강희남 목사님 석방행영회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전주 성광교회에서는 범민족과 방북사건으로 옥고를 치루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계기로 강희남목사 석방행영회가 열렸다.

이날 환영회에는 박창신 신부 백남운 목사, 신산석 목사, 이수금의장, 이석영 교수 등을 비롯한 많은 민주인사들이 참석하여 강희남목사가 무사히 석방된 것을 축하하였다.

강목사는 이 자리에서 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신념을 피력하였다.

## 죽도록 일해주고도 도망자로 쫓겨

그리스도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땅에서 종이 된 것 같이 우리들도한국땅에 팔려와 종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들은 이땅을 위해 수십억원의 이윤을 남겨 주었지만  
 이 땅의 백성은 우리가 땀흘린 만큼의 노임조차 지불 하지 않으며,  
 공장밖으로조차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감금을 합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것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다니며  
 온갖 매를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도, 시민단체도, 노동조합도, 학생도, 정부도 아무도 우리를 위해 신원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사회는 우리를 도망자라 부르며 경찰을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죽도록 일해 주고도 범죄자가 되어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께 호소하노니 우리의 신원을 들으사 이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노예생활에서 구원주소서,  
 아멘  
 (이 시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이 대자보를 쓴 것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범민족대회 관련 원광대생 5차공판 사회부조리 개선위해 노력, 최후진술

1월 9일 오후 2시, 군산 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범민족대회와 북일동 파출소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현철군의 4명에 대한 제5차공판이 있었다.

김현철 군등은 범민족대회와 관련하여 상경한 것은 사실이나 북일동파출소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제차 주장하였다.

김선기군등은 북일동파출소 사건이 났던 당시 그자리에 없었고, 범민족대회와 관련하여 끌려간 뒤 눈짐작으로 몇 명을 추려내어 전경속소로

끌고가 구타하면서 범죄사실을 강요한데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김사는 강홍석군에게 형 3년에 벌금 50만원, 나머지 4명에게 형 2년과 벌금 30만원을 구형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의 부조리와 법적용의 부당성에 대해 더욱 절감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사회의 부조리한 측면을 개선해나가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 연말 연초 전국 인권소식

### 비전향장기수 송환요구

일본에 도쿄에 있는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들의 송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회'(회장 최일수)는 김인서등 3인 장기수들 고향인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집회를 갖고 지난 12월 27일 대한적십자사(총재 강영훈)앞으로 "민족의 화해, 단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비전향장기수를 무조건 시급히 송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석방요구 목요일집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대표 서경순)는 지난 12월 29일로 '44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을 위한 제67회 목요일집회'를 가졌다.

민가협은 "현재 4백 35명(12월 16일 현재)의 양심수가 감옥에 갇혀 있으며 44년째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를 비롯해 20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장기수가 26명에 이르고 70세 이상의 고령자 10여명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용모제한고발 무혐의 처리 "남녀고령법"원리 그르친다

서울지검 공안 2부(이호철)

###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좀더 많이 배포되고 좀더 다양한 취재 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정기구독해주시는 만큼 가능해집니다. 1년 구독료는 3~5만원입니다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0967  
 예금주 문 규 현

김사)는 여연, 전교조등이 여사원 채용시 용모를 제한한 44개 기업을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12월 28일 3개 기업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기업은 무혐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민우회, 전교조등은 성명서에서 "검찰이 여성간의 차별론을 내세워 여사원을 채용할 때 용모를 제한한 대부분의 기업을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빠져 남기고 용평등법 원리를 그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 고문방지협약 유보조항 조속한 가입등 촉구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경수 신부)는 5일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가입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제22조와 제21조의 가입을 유보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조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의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할 것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개정 △국민인권기구의 설치 △초중고등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채택할 것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의무적인 인권교육의 실시를 촉구했다.

### 박종철 열사 8주기

### 고문책임자, 국회의원 변호사등 사회지도층으로 활약

1월 14일은 박종철 열사의 8주기가 되는 날이다. 14일 오전 11시에는 모란마석공원에 '민주열사 묘역'에서 추모식을 갖고, 오후 3시부터는 대학로 홍사단 강당에서 제8주기 추모식과 기념강연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승훈 신부와 안상수 변호사가 참여하여 당시 상황을 증언하였다.

은 6공 때 제7대 안전기획 부장과 청와대 비서실 정치 담당 특보를 지냈고, 현재는 동서법률문화연구소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고문 사실을 은폐, 축소토록 지시한 책임자나 지휘책임자를 지고 있던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변신에 성공하여 다시 사회의 지도급 인사로 활약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65) 유가족 회장은 "역대 정권이 고문책임자들에게 대해 너무 관대하게 대했기 때문에 많아지고 고문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직접 고문을 행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책임자들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시위 덕적면 주민 사망!

지난 1월 13일 경찰의 삼엄한 통제 속에서 서울 사직공원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굴업도 핵폐기장 결사반대 집회"를 마친 덕적면 주민 가운데 김제월씨(여 62)가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중 쓰러져 즉각 인천길 병원으로 옮겼으나 22시 40분 바로 사망했다.

이날 덕적면민 3백명은 인천으로 이동하여 "덕적면민의 70%가 핵폐기장을 찬성한다"는 13일 오전 TV보도에 대한 옹진군측의 보도 확인을 요구하고 주민의 반대 의사를 다시한번 표명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 용진군청에서 17시 30분에서 21시까지 항의 농성을 벌인 바 있다.

김제월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대책위측은 함께 시위를 벌인 서포 1리의 홍금숙, 김정숙, 서경금, 장석선, 김광배씨 등 주민들의 증언을 근거로 경찰과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심장마비 쇼크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폭력진압을 자행한 인천경찰청과 이를 방관한 옹진군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김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6일 경찰과의 장시간대치등으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함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정부,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 인권협, 고문방지협약 청원권 유보철회요구

외무부는 9일 정부가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의 관한 협약" (이하 고문방지협약)에 가입을 위해 가입서를 9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994년 1월 1일 현재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86개국으로 우리나라는 87번째 가입국이 된다. 또, 가장 문제가 되는 선택조항인 제22조(개인청원권)가입국은 35개국만 가입하였고, 51개국이 미가입한 상태다. 이는 각 국가의 정부가 자국내에서 발생하는 고문사건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국

민의 청원권 보장을 기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9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고영구, 이하 인권협)는 지난 7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문방지협약의 핵심인 개인청원권 유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협은 성명에서 "(개인청원권)을 유보하는 것은 고문에 대한 국민청원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고문이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고문피해자의 보상과 고문범죄자의 처벌을 국내법에 보장할 것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좀더 많이 배포되고 좀더 다양한 취재 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정기구독해주시는 만큼 가능해집니다. 1년 구독료는 3~5만원입니다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0967  
예금주 문규현

### 재판안내

△ 이화춘 제6차공판 26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 범민족대회관련 원광대생 선고공판 27일 오전 10시 군산지방법원

# 평화와 인권

제 6 호 (95 1.23)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규현  
편집인 : 유경은  
주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 부산지법, 국가보안법 위헌 제청

### 현행 국가보안법, 죄형법정주의 표현의 자유 침해주장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박대범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 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서 위헌제청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 활동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정은경(전대우정밀노조 여성부장, 26) 피고인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보류하고 직권보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 전복을 유도 선동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같은 사상 의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존재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표현에 대해서 형벌을 과할 수 있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 뿐더러 의사표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띄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입증된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 7조 1,3,5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표

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 규정 등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월성을 바탕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넓히면서 사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 세계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과거와 달리 사상의 포용성을 넓혀도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이 위협받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91년 개정된 국보법이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해다 한다'는 90년 4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한편 불교인권위(공동대표:진관)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부산지법의 위헌제청신청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했다.

### 헌재, [12.12] 내란, 반란 법적판단 또 회피하다

헌법재판소가 20일 12·12 사건과 관련해 내린 결정은 이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내리지 않은 채 내란죄라든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반란죄라든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요지여서 또다시 '판단 회피'를 했다는 비난을 사게 됐다.

헌재는 "이미 지난해 12월12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비켜 나갔고 또 이 사건이 반란죄라는 평가도 내리지 않은 채 기소유에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의 경우 과거 청산, 장래에 대한 경고, 정의회복과 국민들의 법 감정 충족 등 기소 사유가 갖는 의미도 중대하지만,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장기화, 국력 낭비, 국민의 자존심 손상 등 불기소사유가 갖는 의미 또한 가볍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 둘 사이의 가치의 우열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않은 결정을 내리겠다"고 여러차례 말해왔다. 그러나 헌재가 이처럼 애매한 정쟁에 대해 자구 적극적인 판단을 회피하는 한 '최후의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헌재의 위상과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조작간첩사건 이화춘 제 6차 공판 숙부에게서 받은 금액 공작비와 무관입증

1월16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이화춘사건에 대한 제6차 공판이 있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일(전 사노맹전북조직책)씨는 이화춘씨의 일본방문시 북한 공작원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은적도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박의순씨에게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정덕(이화춘씨의 큰 고모부)씨는 이화춘씨가 방

좌영씨를 만나기 위해 방일한 사실이 있으며 송금관계로 통장을 여러개 개설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이화춘씨가 좌영씨에게서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등 증거라고 몰아부치는 검찰측의 기소는 억지라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증거물을 확인하고 아직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계속하기로 했다.



### 94년 산재사망자 사상최고 작년한해 2천3백18명 사망

노동부는 20일 지난해 11월까지 산재 사망자는 2천3백18명으로 93년의 같은 기간보다 16.7%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업현장의 재해증가는 사망한 근로자가 9백83명에서 1천5명으로 2.2% 소폭증가한 반면 교통사고나 고혈압 심장병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성인병에 의한 사망자는 각 20.2%, 13.2%씩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직업병에 의한 산재 사망자는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전폐증 다발지역인 탄광이 많이 폐광되면서 오히려 15% 감소했다. 작업환경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나 근로자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산재사망은 지난 93년의 경우 전체의 40.5%였으나 94년에는 45%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작업중 재해는 별로 크게 늘지 않았으나 과로로 인한 성인병 사망과 출퇴근 또는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 산재 사망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산재 사망은 근로자 1만명당 3.44명꼴로 92년 기준 미국의 10배, 일본의 7배, 싱가포르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 인권단체, 서강대 총학생회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 규탄시위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연합 인권위등 인권단체 회원 15명은 17일 오전 서강대 정문앞에서 서강대 측이 신입생들에게 좌경거부 서약서를 강요한데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날 8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서강대의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고발한다"면서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각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19일 오후 3시에는 학내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문제와 서약서 파문에 대한 규탄대회를 서강대생 2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갖고 서약서 되돌려 받기 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17일 서강대 총학생회 서강대총학생회는 17일 학교측에 공문을 보내고 서약서의 무효화와 이번 사건으로 '서강의 명예'를 실추시킨 총장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학교측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학교측은 19일까지 답변을 회피했다.

#### <서약서 내용>

2. 본인은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계급투쟁을 통한 좌경폭력혁명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담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995.1.13  
지원자 (서명)

### 불교 인권위 비전향 장기수 송환위한 서명시작

17일 2시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는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비전향 장기수 고향방문을 위한 불교인 서명운동'을 대각사에서 가졌다. 불교인권위는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의 물길을 바로잡는 길이다 라고 밝히며 "그러

나 정부는 세계화를 부르짖을 뿐 북한과의 화해와 공존의 통일시대를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분들의 고향방문이 인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차원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굴업도 김계월씨 가족장

지난 13일 핵폐기장 반대투쟁 후 사망한 굴업도 주민 김계월씨에 대한 장례가 유족의 반대로 노제등을 생략한 채 17일 오전 10시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편으로 굴업도로 옮겨져 가족장으로 치뤄졌다.

#### 고 박종철 열사 8주기 추모식

지난 14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마석묘원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는 재야인사와 학생등 약 100여명의 추모객이 박종철 열사의 묘역에 모여서 그의 뜻을 기렸다. 박종철 기념 사업회는 지난해 연말에 지속적인 반공문운동을 전개, 박종철 열사 추모관의 건립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당시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인사들을 적극 영입하고 회원을 다시 모으기로 하였다.

####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좀더 많이 배포되고 좀더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요. 정기구독해주시는 만큼 가능해집니다. 1년 구독료는 3~5만원입니다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0967  
예금주 문 규 현

# 평화와 인권

제 7 호 (95.1.30)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 스 : 0658-45-0152

## 인권협, 김대통령 킹상 수상 반대시위 킹 여사 "한국의 인권상황 잘 모른다"

김영삼 대통령에게 킹 평화상을 전달하기 위해 킹 여사가 입국하는 것에 맞춰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고영구, 인권협)소속 회원 20여명은 김포공항에서 피켓을 들고 30여분간 항의 시위를 벌였다. 킹 여사는 25일 오후 5시 30분경 대한항공 편으로 공항에 도착하자 귀빈실 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킹 여사는 "아름다운 나라 한국에 와서 기쁘다"며 "한인과의 친목도모를 위해 김대통령에게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에 양심수가 4백명 이상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는 물음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대답해 한국에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또 킹 여사는 "평화상을 수여하는 것에 대해 인권단체가 반대하는 것을 아느냐?"는 물음에 "희미하게 알고 있다."고 했지만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기자회견장에는 인권협을 대표한 이덕우 변호사가 참석하여 킹센터에 보내는 인권협의 항의서한을 킹 여사에게 전달했다

이 서한에서 국가보안법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김선명씨등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가 4백35명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점 고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등을 들어 "김 대통령에게 킹 평화상을 주는 것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인권협 회원들은 경찰의 제지 속에 1층 공항 출입구에 모여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주는 것은 평화, 인권신장에 생애 바친 킹 목사의 정신을 훼손하는일", "양심수를 0.75명 독방에 45년간이나 가둬둔 채 평화상을 받을수 있는가" "45년 세계최장기수가 자유되는 날, 국가보안법과 노동약법이 폐지되는날, 고문종식을 선언하는날, 그날이 진짜 평화상을 받을수 있는 날입니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 국제사면위,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제조사요구

국제사면위원회가 25일 법무 장관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피에를 사네 엠네스티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수인들이 수사과정에 대해 제조사를 해야 하며 지난해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재구씨의 경우 양심수인만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사형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94년 한국에서는 15명이 사형되었고 이 숫자는 92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사면위원회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세계적으로 벌였고 사형제도에 폐지를 결의한 아시아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 일본과 같이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라고 밝혔다.

실낱연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평화와 인권은 한주만 쉽니다.

### 박홍총장 사퇴 촉구

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등 7개단체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협생의 약한 처지를 악용해 좌경혁명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한 서강대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박총장이 합격에 매달려야 하는 수협생의 인격을 무시하고 메카시즘적인 편견을 강요한 것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켜야 할 사제의 본분을 저버린 처사"라고 밝혔다.

### 이화춘 재판, 범민족대회 관련 원광대생 재판연기

조작간첩 이화춘씨에 대한 6차 공판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2월 2일 오후 2시로 연기되었다. 한편 범민족대회관련 구속자 4명에 대한 재판도 검찰측의 요청으로 2월 6일 오후 2시로 연기되었다.

##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후원을 위한 밤」 이리 2월 9일 목요일 오후 7시

이리익산지역의 민주단체들이 모임을 갖고 오는 2월 9일 전북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와 조작간첩 이화춘대생원광대학생과 단기학생동맹 관련 구속자대책위가 주최하는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후원을 위한 밤"

에 함께 하기로 하였다. 2월 9일 오후 7시에 북래원 예식장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이리익산지역의 양심수 및 전북지역 장기수를 후원하기 위한 것인데 민주주의 민족통일 이리익산연합등의 민주단체들이 후원할 예정이다.

### 중국 교포들 인권문제 심각하다.

#### '불법체류' 올라가며 인권유린 빈번

내팔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사태는 정부의 외국인력 수급 정책에 대하여 전반적 재평가와 반성의 계기를 가져왔으나 일부 언론과 정부는 내팔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고 여권을 돌려받았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태도를 표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내팔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중국교포들의 문제해결에는 방관하는 상태이다.

그동안 중국교포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활동해온 '중국인노동자센터'에 의하면 국내 사업주나 용역업자들이 중국교포 노동자들의 '불법체류문제'를 악용, 임금체불은 물론 금품갈취, 폭행 등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지적은 이미 3,4년 전부터 계속돼 온 것으로 이 문제가 최근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국 흑룡강성에서 온 김학철씨 등 8명의 중국교포 노동자들은 지난해 한 용역업체(대표 홍준표)에 소속돼 경기도 일대 등 전국을 순회하며 건설일용공으로 일했으나 홍씨의 잠적으로 6개월치 임금 총 1,500만원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수진씨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대전에서 건설일용공으로 일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도중 이씨는 입주측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수감,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 지난 12월6일 '한판'의 임금'도 손에 쥐지 못한

채 중국으로 강제퇴거 당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업 천진지사 파견노동자 이덕용(21. 중국인)씨가 최근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왔을 때 체결한 취업계약서는 '황견계약'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어 충격을 주고있다.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외국인 연수생제도를 전면 재검토, 대안이 없을 경우 이 제도를 폐지할 것과 또 같은 민족을 '불법체류'라는 이유 하나로 인권유린을 가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반인륜 작태'는 이제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의문사 청원심사소위 구성, 국회법사위

국회법사위(위원장:박희태)에서는 23일 '의문사 전면 재조사와 진상규명 특위구성'을 위한 청원' 건등 3가지 안건을 다뤄 처리했고 의문사 관련 청원이 청원심사소위에 넘겨졌다. 그러나 국회청원 심사소위는 구성되지 않았다. 유가협은 지난해 11월 4일 박계동 의원(민주당)등 91명의 국회의원의 서명과 10만명의 시민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을 제출했었다.

####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좀더 많이 배포되고 좀더 다양한 취재 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요. 정기구독해주시는 만큼 가능해집니다. 1년 구독료는 3~5만원입니다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 규 현

#### 엘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엘네스티 한국지부는 22일 총회를 갖고 95년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올해사업은 2, 5, 8, 10월에 인권공개강좌개설, '여성의 날' 캠페인과 여성과 인권관련채자를 발간하는등 많은 계획을 확정했다.

또 1-3월에는 한국의 사형제도 폐지캠페인을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 조작의혹 짙은 피의자에 사형구형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 조작과 진술번복 시비로 관심을 끌고 있는 부산 국교생 강주영(8)양 유괴살인사건의 피고인 4명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검찰의 논고문에 의하면 "지존파사건을 모방해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 살해하고도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전혀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에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왜곡하려는 이피고인의 거짓 자백에 농락당해 피고인들에게 고문, 허위자백을 받아냈으며 피고인등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통화기록, 학교영문타자시험 지등 증거가 수없이 나오자 모든 조작됐다는 상식을 벗어난 주장을 폈다"면서 무고함을 주장하였다.

# 평화와 인권

제 8 호 (95.2.13)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 2월 8일 고문방지조약 효력 발생 고문 피해자들 고통의 삶 계속돼

지난 1월 9일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유엔 고문방지조약이 2월 8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87번째 가입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로써 고문방지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항목에 의해 규제 받게 된다.

하지만 과거의 고문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은 끝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문 후유증으로 가장 먼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인 문국진씨는 지난해 4월 10개월간의 치료후 퇴원 하였다가 지난 1월 29일 재입원하였다.

86년 경찰 연행과 구치소 생활후 고문 후유증을 보여 8차례나 병원을 드나들던 김복영(31)씨는 집에서 계속 우울증을 보이며 식사를 거르다가 지난 3일 돌연 가출 하였으나,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김씨의 누나 김효숙(34)씨는 "정신 문이 기억을 떨치지 못하고 추운 날에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스럽다. 언제나 고문을 아픔을 이기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매우 안타까와 하고 있다.

86년 신길동 시위 사건으로 연행 구치소를 다녀온후 정신분열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강환웅(31)씨는 지난 겨울에 경북의 어느 절에 요양을 한다며 집을 나갔다. 가끔 그의 동생들이 강씨를 만나고 오지만 강씨의 상태는 썩 좋지 못하다고 한다.

화성연쇄살인사건 혐의자로 몰려 93년 7월 서대문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한바 있는 김종경(44)씨는 지난해 부터 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김씨의 부인 오윤자씨는 "가세는 기울고 언제 집을 쫓겨날지 모른 형편이다. 장사로 겨우 생활은 하는데, 민사소송이 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가장인 김씨가 계속 고문의 기억을 떨치지 못하고 폐인이 되는 것 같다고 하

소연했다. 이외에도 81년 인천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던 최영미(34)씨, 86년 민청련 간부를 지낸 윤아무개씨, 현재도 감옥에 있는 방양균씨 등 많은 이들이 과거의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가정 형편은 날로 어려워 지고 있다. 이들은 병세가 악화되면 병원에 입원 하지만,

#### 이리서민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후원을 위한 밤』 강희남 목사, "실천운동으로 민족의 역사 바꿔나가자"

2월 9일 밤 7시, 이리 복래원 예식장에서는 180여명의 이리익산지역 시민들과 민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후원을 위한 밤'이 성황리에 열렸다.

강희남 목사는 석방소감에서 "사람들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고 하는데 자신은 작은 감옥에서 큰 감옥으로 옮겨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돌아가기 전과 달라진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면서 "민족 살리는 혁명, 민족 살리는 통일은 말로만이 아닌 실천운동으로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나가기를 민족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오경숙 전북 민가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심수들이

1년이 안되어 다시 재발하고 하여 재입원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고문방지조약은 제 14조에서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으며, 가능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함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의 권리를 향유하도록 자국의 법체제 내에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문방지조약은 광의의 고문 개념, 고문에 의한 자백의 불인정, 고문 미수범도 고문가해자와 동일한 처벌을 할 것등을 규정하고 있다.

만들어지는 사회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전북 민가협은 국가보안법철폐가 이루어지고 양심수 석방이 이루어지는 날 해체될 수 있는 것"이라며 "모두 함께 일하자"고 말했다.

이리익산연합 상임의장 전병생 목사는 격려사에서 "이러한 행사를 자주 열어야 하는데 정말 기쁘다"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모든 민주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하며, 그레야만 민족통일과 민중생존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구속 양심수 15명의 근황이 보고되었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구속양심수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 ○ 행사 안내 ○

- ▲민중노동준비위의 재정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일시 : 1995년 2월 18일(토) 오전 12시~오후 12시  
장소 : 엘가호프(이리역 광장)  
주최 : 민주노동준비를 위한 전북 추진위원회
- ▲조작간첩사건 이화춘 선고재판  
일시 : 1995년 2월 20일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

### 조작간첩 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 천주교 인권위, 교도소 불법행위 고발할 것

안동교도소측이 '조작간첩 사건'의 재심청구등 준비중인 장기수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하여 이들의 재심청구 활동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난 4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김형태 변호사)는 장기수 유정식씨등을 접견하기 위해 안동교도소를 방문했으나 교도소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변호사들의 방문은 간첩죄로 복역중인 유정식씨등이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따라 재심청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천주교 인권위는 5일 성명을 발표하여 "형사소송법 31조에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피고인과 무제한적으로 접견할 수 있다"고 밝히며 "변호사들의 피고인 접견을 제한한 안동 교도소측의 접견 거부는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변호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안동교도소 당국을 변호사 업무방해등으로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등 법률적 내용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업에게 장애인 부담 감면 혜택 장애인 고용촉진법 개정안 장애인 단체 반발

노동부가 '작년 11월 개정해 내놓은 장애인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장애인 단체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지방자치시대의 영역별 장애우 복지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상당수의 토론회자들은 "노동부가 개정한 장애인 고용촉진법 중 '이배수 고용제'와 '연계 고용제'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보다는 기업주들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줄여주는 처사이며, 결국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분리, 호호하려는 고용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이배수 고용제한 1, 2급 수준의 중증 장애인을 기업에서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한

다는 것이며, 연계고용제한 기업이 중증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작업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면 그만큼 기업의 장애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91년부터 상시고용 3백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나 실제 고용증가는 미미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우문제연구소는 "이번 노동부의 개정안은 장애인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시혜적인 처사 중의 하나이며, 장애인 고용법 제정 본래 취지는 장애인의 노동권리 확보제도가 아닌 복지서비스적 차원의 법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 정읍 태인여중교사 성폭행 사건 여성단체 조속 해결 촉구

전주 성폭력예방치료센터(대표 박상희)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등 6개 여성단체는 7일 서울 강중동 '여성 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 정읍 태인여중 교장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태인여중 김아무개(26)교사는 교장인 은아무개(49)씨가 상사임을 빙자해 성폭행을 일삼아왔으며 93년 9월 전주지방법원에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은씨를 고소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항소해 3월 9일 6차 항소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 조작간첩 사건 이화춘 7차공판 검찰,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구형

1995년 2월 2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재판장:백영업)에서는 조작간첩 이화춘 사건 제7차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증인심문과 변호인의 변론 이화춘씨의 최후 진술이 있었다.

이화춘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사건은 철저히

안기부가 박홍총장의 주사파 발언을 빌미로 조작한 것이며, 이번 사건으로 평범한 농부로 살고자 했던 소박한 소망이 무참히 깨졌지만, 안기부와 검찰덕분에 수많은 노동자 농민이 잡혀간 이자리에 서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용산미군기지 인간사슬로 포위하기로 18일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 미군규탄집회

지난해 11월4일부터 용산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가해미군 소환촉구 집회를 벌여온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2월 10일 까지 미당국측이 가해미군 소환을 거부함에 따라 오는 18일 대국민 집회를 서울역

광장에서 갖기로 했다.

서울역 집회뒤 용산미군기지를 인간사슬로 포위, 항의할 계획이며, 설은주씨등 세 모녀 폭행사건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0일에도 제7차 규탄기도회가 있었다.

####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널리 읽혀지고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요.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 규 현

# 평화와인권

제 9 호 (95.2.20)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열려 27일 서울, 북한 정신대 할머니등 3명 참가 예정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가 '전후 5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라는 주제로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 문제되어온 일본당국이 종군위안부 문제를 민간 위로금으로 해결하려는 부분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반대입장을 밝히고,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을 피하게 된다. 특히 북한의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측과 정신대할머니등 3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각국 상황과 정대협의 수요시위가 소개되어 필리핀으로 확산되는 등 그간 사업의 경험을 나누게 되었다. 1차 회의는 연대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뒤 아시아연대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차 회의는 93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열렸으며 이때는 연대회의의 중간 점검을 갖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각국 상황과 정대협의 수요시위가 소개되어 필리핀으로 확산되는 등 그간 사업의 경험을 나누게 되었다. 1차 회의는 연대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뒤 아시아연대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차 회의는 93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열렸으며 이때는 연대회의의 중간 점검을 갖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 전남 경찰청 보안수사대 지속적으로 광주 사회운동단체 탄압

93년 11월 전남도경 직속 기구로 설치된 보안수사대가 광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재야 및 사회운동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을 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이 16일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보안수사대는 93년 11월 2일 발생한 남총련의 '광주미문화원 타격투쟁' 직후 전남도경 산하에 전국 배태량급 수사관들을 차출하여 구성

한 약 50여명의 경찰 수사관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자료에 의하면 보안수사대는 광주지역에서 공안, 시국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전담을 하고 있으며, 각 경찰서는 보안수사대에 적극 협조토록 되어 있다고 한다.

남총련에 의하면 다른 지역과는 달리 광주 지역에서는 단순 시위나 유인물 배포에도 경찰은 보안수사대를 앞세워 강력한 진압작전과 연행을 되풀이 하여 피해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 파업 회사에 통보한 노조간부 구속

16일로 파업 4일째를 맞고 있는 부천 대흥기계 노조는 지난해 부터 공장이전문제와 관련하여 회사측과 수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였으나,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아무런 합의를 얻지 못했다.

노조는 1월 27일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하여 찬성결의,파업을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날 저녁에 부천중부경찰서는 노조위원장등 2명을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혐의로 집에서 연행, 구속하였고, 노조 사무실에 경찰 30명을 동원하여 컴퓨터와 디스켓등을 압수해갔다.

건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광주지역에서는 지역단체장 선거 전에 보안수사대가 간첩사건을 대대적으로 조작하지 않았느냐는 소문이 돌고 있을 정도로 이런 소문만으로도 재야, 사회운동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맞아 남총련은 수배자 보호를 위해 수배자와 학생들이 집단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고, 구속자가 있는 대학의 학과별로 경력이 있는 이들을 조직사건으로 구속하거나 재야 단체와 남총련을 연계하여 사

### ● 행사 안내 ●

#### ▲ 전북여성의 전화 제 5차 정기총회

일 시 : 1995년 2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여성의 전화 사무실

### 국가보안법, 인권실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 총론

한국은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직선 및 비례 대표로 구성된 단원제 국회로 통치된다. 집권 민자당은 정치제도 및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아직 과거의 권위적인 잔재를 일소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내 치안 유지는 국가안 전기획부, 경찰청, 국군기무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국회는 6월, 치안 기구들을 독자적으로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 위원회를 설치했다. 93년에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내 정치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테러행위, 간첩행위와 국제범죄 조직에 관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93년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 침해를 제시한 보고서에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고, 새로 재판관, 검찰 그리고 경찰을 임명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가기 위해 몇가지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에 의한 긴장고조와 과격학생 운동의 고양, 끊임없는 노동 운동 등으로 그 개혁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이미 계획

된 노동법 개정도 보류 상태에 놓여 있다. 남한의 노동법과 소송절차는 아직도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변호사 조력권을 박탈하고, 수사 과정에서 폭언과 잠안재우기를 통해 피의자를 굴복시키는 근거를 담은 내용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있다.

여성들의 법칙, 사회적 차별과 관련된 신체적 학대 역시 계속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관해서 효력있는 법적 근거가 여전히 없는 상태다.

정부는 석방된 정치범을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사회안전법(보안관찰법)을 근거로 경찰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받고 있는바, 정부는 과거 정부에 의해 조작되어 오랜 기간 동안 형을 살았던 무고한 정치범의 사면과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정치범 중에는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하였으며, 공정성도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비록 직선 정부의 언론 매체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는 사라지기는 했지만,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구속될 가능성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방해 받는다.

####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널리 읽혀지고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 규 현

###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국내 노동문제와 함께 해결, 근본적인 대책필요

노동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올해안에 '고용허가제'를 법안으로 마련하기로 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대책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의 보호, 인권침해의 소지 근절, 최저임금제의 적용, 산재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산업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이 지침을 이기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과 감독의 강화와

아울러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출국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무영 구리노동상담소소장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국내 노동문제와 함께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출국보다는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고, 산재율이 높은 3D업종에 취업하게 될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노동계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 범민족대회 원광대생 선고공판

13일 오전 10시 군산지방법원에서는 가족과 동료학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민족대회 관련학생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 김현철군등 4명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20만원씩을 선고하였다. 한편, 총학생회 부회장이었던 강홍석군에 대해서는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 이화춘 사건 선고공판 징역7년 자격정지 7년

20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이화춘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재판장 백영업)는 숙부 이좌영씨가 울릉도간첩단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좌영씨가 가입한 한통련은 반국가 단체로 판명 되었으므로, 4번씩이나

일본에 간 것은 숙부와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간첩활동의 증거는 없지만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금품수수,이적표현물소지등의 혐의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

# 평화와 인권

제 10 호 (95.2.27)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 스 : 0658-45-0152

## 한국, 세계로부터 '인권침해국' 낙인 유엔인권위, 정부대표 인권개선의지 표명

지난 16일(목)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위)에 공식 제출된 4개의 보고서 가운데 한국은 자의적 구금, 고문, 의사표현의 자유등 3개의 보고서에서 문제국가로 지적되어 지난 93년 문민정부 등장 이후 개선된 국제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 보고서에 황석영, 이근희, 최진섭씨등 3명의 이름이 올랐다. 특히 한국은 92년부터 3년째 계속해서 자의적 구금 대상국가 명단에 오르는 기록을 달성하여 인권침해로 오랫동안 국제적 비난을 받아온 페루, 모로코,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여전히 '인권후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94년 한 해동안 29개 국가 관련 모두 293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는데 중국이 89건으로 가

장 많고, 한국은 13건으로 스리랑카(37건), 페루(25건), 모로코(18건), 알제리(16건)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93년의 경우 모두 181건이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에 접수되어 전년도에 비해 60%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20일 한국정부는

####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정부는 유엔의 무대에서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옹호하고 나서 세계의 비난을 샀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 대표는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1일 처음으로 반박권을 행사하여 "국가보안법은 오직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는데 더 나아가 한국정부는

"일부 구금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의제안건 10"의 발언에서 "자의적 구금, 고문 및 의사표현의 자유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국내 인권문제의 개선의지를 밝혔다.

#### 민중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구속중)은 19일 오후 2시부터 동국대 중앙당에서 대의원 6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철폐'등 95년 전국연합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전국연합이 선정한 10대 과제는 이외에도 평화협정 체결쟁취운동,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결의하였다. 대회 참석자들은 특별성명서를 채택하여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행위의 중단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인 석방, 수배조치 해제 △장기수에 대한 비인도적인 장기구금 중단, 즉각 석방 △국가보안법, 노동악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김선명씨를 비롯한 장기수 문제에 대해서도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실재 게릴라 전투원이었으므로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조약'에 따른 포로로 간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김인수, 함세환, 김용태 3명의 송환을 주장한 일본인 권정보센터의 아키라 마에다교수는 "한국정부의 태도는 자의적 구금, 고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안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된다"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 국가보안법 철폐등 결의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민중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구속중)은 19일 오후 2시부터 동국대 중앙당에서 대의원 6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철폐'등 95년 전국연합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전국연합이 선정한 10대 과제는 이외에도 평화협정 체결쟁취운동,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결의하였다.

대회 참석자들은 특별성명서를 채택하여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행위의 중단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인 석방, 수배조치 해제 △장기수에 대한 비인도적인 장기구금 중단, 즉각 석방 △국가보안법, 노동악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 불법이탈 외국인 연수생 검거자 포상제 백지화

불법 이탈한 외국인 연수생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제기 백지화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연수생을 신고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5만원의 상금을 주기로 최근 발표했으나 이 방안이 인권유린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자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 박복실(요안나)동지 3주기 추모미사 ●  
"노동자의 새 세상을 위해 싸워 나가자"던 박복실(요안나)동지가 우리 곁을 떠난지 4년이 되어 갑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노동자의 집에서는 동지를 아끼셨던 분들과 후배들의 정성을 모아 3주기 추모식을 거행합니다.  
▶일 시 : 1995년 3월 11일 오후 6시  
▶장 소 : 여러 노동자의 집

### 미군범죄 규탄 미군기지 '인간 띠잇기' 무산 '미국과의 외교 마찰 고려' 경찰력 동원 원천봉쇄

18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되기로 했던 '세모녀 폭행 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는 "미국과 외교 마찰을 고려하여 집회허가를 불허한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통보로 원천봉쇄되었다. 이날 서울역 주변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백여명 경찰과 전경이 배치되어 오후2시부터 예정된 대회를 봉쇄했다.

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전우섭씨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던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미군범죄가 외신을 타고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결과"라며 경찰의 처사를 비난했다. 또한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항의 시위를 조직하여 △한국의 감금 주한미군 사관 △미군범죄 규탄 △한미행정협정개정 △한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12일 미 34단 지원단 마이클 팬터게스크 미국군사령관은 김금순, 설은주, 설은하씨에게 편지를 보내어 사의표명과 함께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문화적 차이를 따른 것이므로 이는 교육을 통해 시정하고 검거된 피의자의 이송은 한국경찰과 협

조를 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등, 운동본부)는 21일 서울시지방경찰청이 18일 집회금지 통고취소를 한데 대해 '이의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당초 운동본부는 16일, 옥외집회신고를 했으나 서울시지방경찰청은 집회 2시간 30분전에야 집회금지 통고를 보내왔었다. 서울시

지방경찰청은 "한총련의 참여로 폭력시위의 개연성이 명백하다"면서 '세모녀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원천봉쇄했다.

운동본부는 이의신청서에서 "한총련등은 회원단체로 94년 12월부터 모두 7차례 집회에 참여해왔으나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벌여왔다"면서 폭력시위의 개연성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국가안보 핑계로 인권유린하는 태도 여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문서에서 파업지지 성명서 배포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이 확인돼 여전히 '국가안보'를 인권을 유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전노조위원장 손종규씨가 92년 "제3차 개입 협의에 대한 유죄 판결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9조 위반"이라며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건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손씨는 시위에 참가할 것을 선동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데 참가했다. 또 폭력시위에 참가하고, 시위대에게 거리로 나가라

고 선동하여 공공질서를 위협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인권이사회에게 보내는 '답변'에서 "노동쟁쟁의조정법상의 제3차개입금지 조항은 피고용자와 고용주간의 독립적인 분쟁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강변했다.

손씨의 대리인인 조용환 변호사는 지난 22일 제출한 '반대 의견서'에서 "연대회의 성명서가 국가 안보를 침해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가안보가 얼마나 많이 남용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하고, 따라서 "손씨의 처벌은 규약 제 19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손씨의 제소는 정부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제출된 것이며 이 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예로 볼 때 올해 안에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 사법개혁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23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의 방향과 방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민변은 "사법개혁 논의는 사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이번 사법개혁논의에 법원, 교수, 법률전문가등 모든 유관기관 및 종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라고 보았다.

###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

고문조작 논란 속에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부산 국교생 강주영양 유괴 납치 사건 1심 재판이 검경의 고문조작을 인정하고 끝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의 자백에만 의존한 '유죄확신'은 재판부에 의해 전부 부정되었고, 증인과 물증을 제시한 변호인측의 주장은 거의 모두 수용되었다.

이 재판의 결과로 변호인측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고문경관들에 대한 고발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 지존과 사건의 모방범죄를 신속히 처리하였다고 하여 지난해 경찰의 날에서 표창을 받고 진급한 경찰관의 문제에 대한 처리도 주목된다.

아울러 강주영양 살해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예로 볼 때 올해 안에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 평화와 인권

제 11 호 (95.3.6)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 “일본정부는 지금 그 남자와 똑같은 일을 하려 하고 있다” 아시아 4개국 연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반드시 해결

제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가 27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종로5가 여전도회관에서 일본 대만 필리핀 참석자 58명을 포함해 4개국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전후 5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의 주제로 열린 아시아연대회의 첫날에는 "왜 민간위탁금을 반대하는가?"는 주제로 열린 아시아연대회의 첫날에는 "왜 민간위탁금을 반대하는가?"는 주

제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가 27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종로5가 여전도회관에서 일본 대만 필리핀 참석자 58명을 포함해 4개국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전후 5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의 주제로 열린 아시아연대회의 첫날에는 "왜 민간위탁금을 반대하는가?"는 주

제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가 27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종로5가 여전도회관에서 일본 대만 필리핀 참석자 58명을 포함해 4개국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전후 5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의 주제로 열린 아시아연대회의 첫날에는 "왜 민간위탁금을 반대하는가?"는 주

이시자와 이지코씨는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넘어야할 장애물으로써만 보고, 이외의 강제연행피해자와 유족에의 배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로 개인배상을 하지 않는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러한 일본 정부에 대해 그

이시자와 이지코씨는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넘어야할 장애물으로써만 보고, 이외의 강제연행피해자와 유족에의 배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로 개인배상을 하지 않는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러한 일본 정부에 대해 그

이시자와 이지코씨는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넘어야할 장애물으로써만 보고, 이외의 강제연행피해자와 유족에의 배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로 개인배상을 하지 않는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러한 일본 정부에 대해 그

● 박복실(요안나)동지 3주기 추모모임 ●  
"노동자의 새 세상을 위해 싸워 나가자"년  
박복실(요안나)동지가 우리 곁을 떠난지  
4년이 되어 갑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노동자의 집에서는  
동지를 아끼셨던 분들과 후배들의 정성을 모아  
3주기 추모식을 거행합니다.  
▶일 시 : 1995년 3월 11일 오후 6시  
▶장 소 : 미려 노동자의 집

### 세계여성회의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세계교회회의는 23일 일본 정부가 2차대전중 일본군대를 위한 성적 노예생활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에게 직접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세계교회회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한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종전 및 유엔 창설 50돌인 올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문제는 여성에게 자행되는 폭력에 대한 인권위의 1차 보고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다.

스리랑카 출신 법률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 여성특별검사는 이 보고에서 여성에 대한 강간, 가정내 폭력, 성희롱 등의 최대 원인은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계교회회의는 로마가톨릭교를 제외한 세계 3백개 교회를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다.

### 별지산 비전향 출옥 장기수 윤기남씨 위암 사망

28년간 비전향 장기수로 수형생활을 하다가 89년 석방되었던 윤기남(70)씨가 24일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윤씨는 한국전쟁 때에 전남 보성지구 유격대 사령관으로 활동하다 53년 체포되어 15년간 복역하였다.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널리 읽혀지고 다양한 취재기사를  
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 규 현

### 사북 고한 개발촉진지구 우선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수립

건설교통부는 정부의 석탄 감산정책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과 고한읍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주기로 했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제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상반기중 각 도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지정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일괄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탄광지역의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선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

정해 달라는 강원도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강원도는 늦어도 이달 중에 필요한 조사작업을 거쳐 건교부에 사북읍과 고한읍에 대한 개발촉진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건교부는 관계서류를 검토한 뒤 이르면 4월중에 다른 지역에 앞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이 수립, 시행되며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해 정부의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제출한 정부 보고서 고령자,여성,장애인 취약계층의 고용확대

정부는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문제는 대체로 해결했으나 사회복지부문의 발전은 미흡해 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세기 말까지 전국민에게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령자,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확대 △노동과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의 확대 △고용보험,산재보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지원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급

여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며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계층 지역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을 높여 나가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6월 1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개발정상회의(WSSD)에 맞춰 유엔에 제출하는 '한국의 사회개발' 국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정경제원과 보건복지부, 외무부, 청와대 경제수석실등의 공동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정부차원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의 사회개발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경찰청, 미군범죄 미군당국의 동의 후 공개 "미군 당국의 하수인 노릇 자처하는 배신행위"

경찰청이 주한미군 당국의 협조 요청이 있는 바로 다음날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에 '미군 범죄 비공개 지시'를 하달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경찰청은 '한미연합사령부 협조사항시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 장병, 미국인, 한국인 군무원등의 인적 정보를 어떠한 보도매체가 요청하더라도 주한미군공보실에 문의한 후 제공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또 공문에서는 △미군등의 이름, 계급, 부대명, 나이, 인종, 몸무게등 개인정보 △사건, 사고 당시의 주한미군 및 한미연합사요원의 임무나 활동 △사건, 사고의 원인을 추정 명시하는 것등을 언론매체에 공개할 때의 유의사항으로 적시하

고 있다. 이 지시는 한미연합사령부 보도처장 짐 클스 씨가 24일, 경찰청장 앞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온 바로 다음날 미군당국의 협조요청을 거의 여과없이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산근등)는 27일 성명을 내고 "미군당국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미군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미군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미군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한국경찰에 미군범죄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한 것"이라며 이는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찰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고 주한미군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 근로자 단결권 위협하는 직장폐쇄 위법 판결

적법하게 직장폐쇄가 이루어졌다 해도 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근로자의 단결권 자체를 위협한 경우에는 위법으로 이 기간중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직장폐쇄 기간중 무노동 무임금과 관련한 최초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전지법 제 3민사부(재판

장 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 2월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노동조합 부위원장등 노조원 31명이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상대로 낸 시한부 전면파업 및 직장폐쇄 기간중의 임금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직장폐쇄기간 중임금을 지불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널리 읽혀지고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규현

# 평화와 인권

제 12 호 (95.3.13)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규현  
 편집인 : 유경은  
 주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 3.8 세계 여성의 날 행사 및 기념식 여성의 정치참여와 인권보장요구

### 여성단체연합 '여성유권자 한마당'

12일 오후 2시 이화여자대 대강당에서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한국여성단체 연합이 주최한 제11회 한국여성대회 '남녀유권자 한마당'이 열렸다.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해 열린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여성단체회원과 시민 학생등 1천여명이 참

석하였다. 한편 3월 8일 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이날 성명서에서 △할당제등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특별조치를 취할것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할것등을 촉구했다.

### 국제사면위원회 여성인권운동 개시

국제사면위원회는 6일 여성을 "90년대의 보이지 않은 희생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의 인권유린 사례를 조명하기 위한 국제적 운동을 시작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엠네스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여성은 어린이들과 함께 전쟁의 최대 피해

자이며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난민과 유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빈곤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은 전쟁과 무력분쟁, 뿌리깊은 차별의식, 여성운동에 대한 억압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준비위 세계여성의날 기념식

민주노총 준비위(공동대표: 권영길, 양규현, 권용목)는 11일 오후 3시, 연세대 상경대 강당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87주년 기념 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건설로 여성의 평생평등한 일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 여성의 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족

3월 9일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족식이 있었다.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족식'에서 박인제 변호사는 "법을 잘몰라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에게 법적으로 도움을 주고 여성차별의식과 제도개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씨 분신사건 비상대책위, 격렬항의 시위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37)씨의 분신사살과 관련해 장애인 단체와 전국노점상연합회로 구성된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씨 분신사건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학생등 300여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청 앞에서 폭력단속반해체와 관련자 처벌을 외치며 2시간여동안 한 특별조치를 취할것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할것등을 촉구했다.

16일 「분칠노점상단속반대 집회」를 가지기로 하고 해산하였다. 최정환씨는 부모에게 버림 받은 고아로 15년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는 절단되고, 척추장애인이 되어 노점상으로 연명해 오던중 94년 6월 단속반원들에게 얻어맞아 좌측 발마저 심하게 다친바 있다.

이들은 구청 현관앞에서 집회를 갖고 건물안으로 들어 가려다 경찰이 막자 계속 1시간여동안 시위를 벌인뒤

그러다가 지난 3월 8일 또 단속반원들에게 스피커를 빼앗긴 뒤 이를 되찾으려다 분신하였다.

## 94년도 아내구타 2천1백26건 여성의 전화 상담 통계 발표

최근 「한국여성의 전화」(대표:신혜수)가 발표에 따르면 94년 한해동안 여성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중 아내구타가 31%(2,216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부갈등이 19.2%, 외도가 17.1%를 차지했다. 구타의 경우는 남편의 구타가 98.36%, 외도는 남편의 외도가 92.5%, 자신의 외도가 6.89%를 차지해 배우자에 의한 여성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의 피난처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 특징으로는 한달이상의 장기 이용자가 33%로 늘어난 점을 들 수 있다. 쉼터 이용 후 진로를 보면 귀가하는 내담자가 매년 50%를 넘었는데 94년에는 39%로 독립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춘숙(상담인권국)부장은 "쉼터 이용자가 귀가 한 뒤 1-3년이 지나 다시 남편의 구타로 도망쳐 나온다. 가해자 교정, 교화, 처벌등 남편의 구타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숙(상담인권국)부장은 "쉼터 이용자가 귀가 한 뒤 1-3년이 지나 다시 남편의 구타로 도망쳐 나온다. 가해자 교정, 교화, 처벌등 남편의 구타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 13 호 (95.3.20)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평화와 인권

인권문제 이해증진
목적 사진전 열어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장수 신부)는 오는 3월 20일 부터 서울 신세계 동방플라자 갤러리에서 '세계인권사진전'을 갖는다. 이 사진전에는 남북한을 제외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난민, 양심수, 정치적 살해, 대량학살, 고문 사형제도에 관한 사진을 80여점 전시하게 된다. 이사진들은 국제 엠네스티가 3차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비롯하여 AP, AFP통신등 세계의 유수한 통신사들이 국제사면위원회에 기증한 작품들이다. 이와함께 매일 2회에 걸쳐서 유엔 인권선언, 마틴 루터 킹 목사 일대기 비디오, 고문방지를 위한 슬라이드를 방영한다.

노동부 해외 선전용
ILO 조약 비준 계획 발표

노동부는 올해안으로 국제노동기구(ILO)조약 3개를 비준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비준 예정인 조약은 노동자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노동자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제19호), 모든 종류의 광산 항내 작업에 대한 여성의 고용에 관한 조약(제45호), 고용이 허용되는 최저연령에 관한 조약(제385호)이다. 조약비준 계획 발표의 배

경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이 어느정도 개선되었다는 판단하에 '한국이 더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나라가 아님'을 국내외에 알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인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김재오씨는 "정부의 비준 발표 계획은 해외선전용"이라고 비판하였다.

시민단체들 일제히 반대 표명
군산월명공원 파괴하는 (주)대우 토취장 허가계획

전북 군산시가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월명공원 자락에 (주) 대우가 신청한 대규모 토석채취장을 허가해주려 하자 시민들이 공원보존을 주장하며 일제히 허가계획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주) 대우가 군장국가공단 자동차 건설에 필요한 흙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월명공원의 남쪽 산자락인 미룡동 산 57-2번지 일대의 1만9천 8백여평 남짓한 규모의 토취장 건설을 신청해 와 이달안으로 허가해줄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산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고 "대우측이 유독 공원 일대에 토취

장을 조성하려는 속셈은 토취가 끝난 뒤 나대지 개발에서 생기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데 있다" 며 "시는 눈앞의 개발만을 쫓다가 패착한 생활공간을 파괴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군산 경실련, 기독교청년회등 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군산 월명공원보존 시민대책협의회(위원장 김영기)회원 2백여명과 군산대생 200여명은 지난 14일과 15일에 뒤이어 18일에도 잇달아 '토취장 허가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시에 허가계획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군산대의 경우 대상지역이 바로 군산대 캠퍼스

인근이기때문에 정상적인 학교활동에도 지장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월명공원보존대책위원회는 월명공원 한 자락을 파괴하여 흙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군산 인근의 야산을 개발하면 흙도 마련하고 인근 지역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등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야산을 소유한 뜻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군산시는 "(주)대우에 대한 토취장 허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이달안으로 허가해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생존권 보장 외치다 분신한 최정환씨
16일 장애인복지제도개선 규탄 집회

지난 8일 서초구청 로비에 노점상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분신한 최정환(37)씨가 현재 강남시립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그는 전신에 3도의 화상(88%)을 입었고 기도절제 후 산소 호흡기를 통해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전국노점상연합회」는 '살인단속 분쇄 및 장애

노점상 최정환씨 분신사건 규탄대회'를 16일 정오 12시부터 중묘공원에서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월거민연합회, 전국장애인 한가족 협회 소속 회원 5백여명이 참가했고 장애인복지제도 개선과 민중생존권을 요구하며 정부당국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

고 윤기남 선생 통일 민족장
집행위원장 기세문씨 구속

지난달 26일 광주망월동.18묘역에 안장된 비전향장기수 윤기남(70)씨의 장례식과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에 나선끝에 장례대책위원장 기세문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검사 문성호)는 8일 윤씨의 장례를 민주주의 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등 재야단체들이 '애국투사 고 윤기남 선생 통일 민족장'으로 장례를 치른것에 대해 윤씨의 활동을 찬양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에 들어 간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 지역의 재야 인사들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민주세력

을 탄압하려는 음모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시청에 근무하는 안아무개(37)씨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한국에서 죽은 사람의 장례를 문제로 수사를 벌인다는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2월 28일 이례적으로 윤씨의 장례식 기사와 함께 사설을 실어 윤씨의 장례식을 비난한 바 있다. 윤씨는 28년간 복역후 89년 비전향 장기수로 출옥, 위암을 앓아 오다가 지난 2월 24일 사망하였다.

안기부 반국가단체 성원 회합 알고도 1년간 방치
구국전위 사건, 안재구씨 항소심 2차 공판

구국전위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안재구(62, 전경희대 강사)씨 항소심 2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유현)심리로 9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 부 수사관 오광택등 2명이 채택되었다. 증인으로 나온 정화려씨는 "안기부는 지난 93년 6월에 어떤 사람(제보인)으로부터 내가 생명불상의 반국가단체성원과 만난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 안기부는 그때 나와 제보인을 잡지않고 1년동안 그냥 두었다. 이것이 의문스럽다. 이것은 최

밀한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다"고 증언했다. 김재완 변호사는 "정화려씨의 접선인이 반국가단체구성원인가 아닌가 밝혀야 하고 안기부가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1년동안 이들을 체포하지 않았던 의문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변호사는 "이것은 국가보안법 제 8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신죄가 성립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숙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안기부 직원의 출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복실(요안나) 3주기 추모미사
전북지역노동자들, 당당하게 살았던 고인의 뜻 기려

3월 11일, 오후6시 이리노동자의 집에서는 박복실(요안나) 3주기 추모미사가 열렸다. 문규현신부와 장상원신부가 집전한 이날 미사에는 전국노동사목협의회 회원과 80년대 초반부터 함께 활동하던 옛동료들을 비롯하여 전북지역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가신님의 뜻을 기렸다. 이날 미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계속 남아 당당하고 씩씩하게 활동했던 고인을 생각하면서 사람은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복실(요안나)은 서슬퍼렇던 5공때 전북지역 최초로 데창메리야스 노동조합을 민주노조로 만들었고, 해고 이후에도 복직투쟁과 블랙리스트 철폐투쟁을 전개하였으며 7번 해고와 투쟁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왔다. 이후 천주교 전주교구 전주노동자의 집에서 일하면서 전북노련 지도위원으로 위촉받아 한참 일할 나이에 37세에 위암에 걸려 사망하였다. 위암 투병시에는 곳곳한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 바 있다.

전북지역 산재관련 '노동자
설문조사 보고서' 발간

천주교 전주교구 노동자의 집에서는 94년 7월 산재의 달을 맞이하여 전북지역 작업환경 및 산재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 작업을 정리하여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리, 군산 노동자의 집에서는 전북지역의 산재실태 및 작업환경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산재를 현장에서 추방하는 근거가 될 자료집을 전북지역의 노동조합들과 단체들에 배포할 예정이다.

전북 태인여중교사 성폭행사건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

정읍태인여중 교사 성폭행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9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고 23일 오후 2시에 속개될 예정이다. 태인여중 김아무개(26)교사는 교장인 은아무개(49)씨가 상사임을 빙자해 성폭행을 일삼아왔으며 93년 9월 전주지방법원에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은씨를 고소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었다.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널리 읽혀지고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요.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 규 현

###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의 주체 선언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결성

「공동육아연구회」, 「ACPR 서울평화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등 15개 단체가 주관하는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오덕·한승헌의 2명)가 15일 결성식을 가졌다. 홍사단 강당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결성식에서 연대회의는 사업계획과 일정을 밝히며,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민간단체 보고서 집필방향에 대해 밝혔다.

연대회의가 진행할 사업으로는 △민간단체보고서 작성△정부와 민간단체간의 토론회 제안 △정부-민간보고서 비교, 분석한 자료집 발간 △아동의 권리위원회 보고서 심사진행에 대한 것 등이다.

연대회의가 밝힌 민간보고서의 목적은 첫째, 정부 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둘째, 그 실태와 개선방안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셋째, 국내에 권리 조약의 홍보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일반원칙과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리보호(입양, 시설 보호 아동)△복지와 보건(경제적 착취금지, 장애아동의 권리보장 등) △교육과 문화(입시위주의 교육등) △특별보호조치(아동학대)등 5개 부분으로 나뉜다.

### 민가협 10차 총회 국가보안법 철폐 최대 과제로

「민주화실현가족운동협의회」는 10일 제10차 총회를 가져 새로운 상임의장으로 안옥희씨를 선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기본으로 하는 95년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안옥희씨는 취임사에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직도 감옥에 있는 3백여명의 양심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며 "국가보안법등 사회악법 폐지운동에 노력하며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살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 민

주 단체와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95년 사업계획으로 민가협은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맞이하여 대표적인 인권침해인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피해자 조사활동 △토론회, 공청회 △국제연대 활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했다.

또한 △양심수 전원석방 및 사면복권 투쟁 △장기수 석방, 조작간첩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감옥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반공문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비전향장기수 장례 파문 확산 조짐 전남경찰청, 장례식 관련자 12명 출두 요구서

비전향 장기수 고윤기남(70)씨의 장례식과 관련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11일 장례집행위원장 기세문씨(60)를 구속한데 이어 12일에는 한청협 부의장 이경률씨를 국가보안법상의 고문·친양동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비전향장기수 고윤기남씨의 장례식과 관련하여 윤영규(전국연합 공동의장), 강신석 목사등 12명에게 13일 출두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과 관련한 구속자가 더 늘어날 것을 예상된다. 출두 요구서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의 상층간부들이므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의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13일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상복)은 성명을 발표하고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의 탄압이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며, 반인륜적인 행위를 확인하며 즉각적인 탄압중지와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했다.

성명은 "전남경찰청이 장례식 명칭과 절차, 그리고 5.18묘역에 안장한 것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것은 인륜을 짓밟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지 장례식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5.18문제 처리를 앞두고 높아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보안수사대를 폐지하고 인권탄압의 구실이 되고 있는 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조작간첩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요구 전주교 인권위원회

「전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의 김승훈 신부등 5명은 16일 오후 4시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 소속 조홍규, 강신욱 의원등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태 변호사는 국회진상조사 특위구성, 사건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 불교인권위, 장기수 장례식 재야인사 구속 비난 성명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진관,한상범)은 16일 "광주민주인사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전향 장기수 장례식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광주지역 민주인사 탄압즉각중지 \*구속인사 석방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색출 구속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

### ○ 재판 안내 ○

정읍 태인여중 여교사 성폭행 사건 항소심 공판  
1995년 3월 23일 오후 2시 광주 고등법원

# 평화와 인권

제 14 호 (95.3.27)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 박총장 발언, 제2공안정국의 전주곡인가 법정진술 내용달라 '암살지령'에 대한 진위 논란

서강대 박총장은 자신을 암살하라고 지령받았다는 유학생 자수간첩 한병훈(32)과 함께 23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하게된 동기에 대해 한씨는 "22일 박 총장의 법정 진술이 왜곡되었고 있다고 판단해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심했고 더 이상 나 같은 사상의 희생자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모든 것을 알리고자 참회하는 심정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북한이 박 총장을 암살하려는 이유에 대해 △주사파 발언으로 한총련 역할 파괴 △북한의 대남 작업의 어려움 △공안정국 조성 △박 총장에게 신분노출등을 들었다.

한공작원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9월 자수한 뒤 안기부와 검찰에서 세밀한 수사를 받았으나 박 총장의 암살지령과 관련된 어떠한 진술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씨는 부인 박소형씨와 함께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유학중 지난 87년 3월 김용무(57)씨와 만나 북한에 4차례 입국했고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하다 지난해 9월 안기부에 자수했다. 현재 한 씨는 도덕성 회복국민운동본부의 총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신공안정국의 피해자중의 한 사람인 「한국사회이해」의 저자 이상호 교수(44.경상대)는 암살 설과 관련한 박 총장의 법정 발언과 한씨의 기자회견에 대해 "제2의 신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한 전주곡"이라고 단언했다.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은 이미 권력자이기 때문에 기득권층을 대변하며 메카시즘을 마치 국민 전체의 정서인양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기(65,유가협회장)씨도 "지자제를 앞두고 박 총장이 야구경기처럼 타자노릇을 자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지난 90년 한씨의 간첩활동에 대해 들

은 뒤인 92년 국내에서 한씨를 다시 만났는데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음으로서 국가보안법상 불고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 금호지구 철거민 침묵시위 '세계인권사진전'서 직접 인권탄압 현실 고발

금호 1-6 재개발지구 철거민 20여명은 20일 오전 11시30분경 세계인권사진전이 열리는 신세계 동방 갤러리 전시장 한 가운데 흰 무명 끈으로 인간사슬을 엮은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상인(47,수배중)위원장은 "세계인권탄압에 대한 사진전을 하는 이 자리에서 김영삼정부의 인권탄압을 알리고자 한다. 사회발전정당회의에 참석해 김 대통령의 인권옹호 발언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리려고 주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철거민원과 전두경의 강제철거에 16미터 철타아래로 뛰어내리며 분신한 박근백(33)씨는 뇌수술을 마친 상태이나 두눈을 실명한 것은 물론 살아난다 하더라도 언어장애를 가져오는 등 중태인 상황이다.

이상인 위원장은 "살인철거를 끝장내자며 목숨 내놓고 싸운 박씨의 사례는 앞으로도 더 생길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씨의 말에 따르면 16일 이후 고공농성장 주위에는 전투경찰 3개 중대가 둘러싸고 있고, 사복경찰은 3미터 간격으로 에워싸 주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농성하는 12세대 50여명의 주민들은 불시에 경찰들에게 연행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외출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

###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널리 읽혀지고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요.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 규 현



### 직장내 성폭행사건의 전형

#### 태인여중 여교사 성폭행 사건 항소심 공판시작

지난 3월 23일 오후 4시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권남혁) 301호 법정에서는 징용태인여중 은모(50)교장의 김모(27)교사 성폭행사건 8차 공판이 있었다.

증인신문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김교사 성폭행사건 공동대책위, 전북대총여학생회, 광주여성의 전화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교사와 같이 근무하였던 여직원은 증언에서 "평소 은교장은 김교사에게 공문이나 기안결재를 미루었고, 교장이 나타나면 창문으로 넘어갈 정도로 무서워했다"고 말했다. 또한 늦은 시각에 학교 여직원들을 불러내거나 술자리에 합석을 요구하면, 여직원들은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거절하지 못했다 한다.

김교사는 교장인 은씨가 상사임을 빙자해 성폭행을 일삼아왔으며 93년 9월 전주지방법원에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은씨를 고소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김교사 성폭행 사건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

공동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은 직장내 상사에 의한 전형적인 폭행 사건으로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 목적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며, 직장내의 성폭행 사건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판례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다음 재판은 4월 20일 오후 4시 광주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23일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대상으로 추가신문을 할 예정이다.

### 군산시, (주) 대우 토취장 다시 물색 시민단체들 대체 토취장 제의

군산 시가 군산 월명공원 줄기인 자연녹지 지역(주) 대우측에 토취장으로 허가하려다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후보지 물색에 나섰다.

군산시는 미룡동 자연녹지 지역 7만2천2백98㎡를 (주) 대우측이 군산국가공단에 조성중인 자동차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한 토취장으로 허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월명공원 줄기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또한 대우가 이지역을 토취

장으로 고집하고 있는 것은 토취 후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2천억원상당)을 쟁기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하면서 군산시에 토취장허가 방침 철회를 요구해 왔다.

경실련은 시당국의 허가 방침이 알려지자 지난 14일 이 지역의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대체 토취장 제의에 나섰으며 이 해 현재까지 모두 7명이 소유업자를 대체토취장으로 내놓겠다고 제의해 왔다는 것이다

### 네팔노동자 피난처에서 연행돼

지난 1월 명동성당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했던 네팔산업연수생 지반 버자(22)씨가 20일 서울 출국관리소 직원 8명에 게 연행되었다.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김재우 소장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오전 9시경 피난처에 전화를 해 「조사를 하고 싶다」며 피난처 방문의사를 밝힌 뒤,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일방적으로 연행을 시도 몸싸움 끝에 지반 씨를 연행했다.

김소장은 "피난처에는 지반씨 외에도 다수의 불법 체류노동자가 있었으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은 그들을 연행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명동성당에서 농성했던 특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보복성 연행을 한 것이 임의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 분신 장애인 노점상 장례식, 빈민장으로

지난 8일 노점상 장애인 생존권을 외치며 서초구청에서 분신한 최정환(37)씨가 21일 오전 1시50분경 강남 시립병원에서 13일 만에 숨졌다. 최씨는 8일 노점상 단속 반들의 무차별한 단속에 항의, 온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사망직전까지 그는 전신경 피난처에 전화를 해 "조사를 하고 싶다"며 피난처 방문의사를 밝힌 뒤,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일방적으로 연행을 시도 몸싸움 끝에 지반 씨를 연행했다.

한편, 「최정환씨 분신사건 비상대책위는」는 21일 밤에 회의를 갖고 「장애노점상고 최정환 열사 장례위원회, 위원장 김도현)을 구성하였다.

25일 경찰과 시신 줄다리기를 벌인 대책위는 경찰반대로 노제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없이 영결식을 치렀다. 장지는 용인 천주교 묘지.

### ● 행사 안내 ●

- △ 「성폭력에방치로센터」에서는 제2기 성폭력상담 기초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일시: 3월 17일/23/31 4월 7일(오전 10:30-12:00)
  - 3월 31일(금)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나?
  - 강사: 이미경(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 4월 7일(금) 7가지 여성용품의 역사
  - 강사: 손덕수(효성여대 여성학 강사)
- △ 전북시민운동연합 제1차 포럼
  - 일시: 1995년 3월 31일 금요일 오후 7시
  - 장소: 신협 전북연합회 3층 강당
  - 내용: 4년 동안의 지방의회 평가
- △ 전북여성의 전화 일일호프
  - 일시: 1995년 4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11시
  - 장소: 전주 레지스탕스(종합경기장 건너편)
- △ 전주 시민회(준) 제 6회 초청강연회
  -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 '김대중 죽이기'의 전북대 강준만 교수
  - 일시: 1995년 4월 6일, 목요일 오후 7시
  - 장소: 원불교 전주교정 대법당

# 평화와인권

제 15 호 (95.4.3)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 스 : 0658-45-0152

##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공안당국의 국보법 위반 이적성 감정이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5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서울시경 산하 보안문제연구소 직원(정관영(49)씨에 대한 변호인 증인신문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418호 법정(서울형사 합의 1부)에서 열린 이 재판에 전국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제3기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제5차 범민족대회 자료집을 직접 감정,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이씨의 변호인 이덕우 변호사는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과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의 내용이 뒤바뀌어 있고, 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의 쪽번호가 모두 2쪽씩 앞으로 당겨져 있다고 지적, 감정의 기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정씨는 "착오에 의한 실수"임을 인정하였다.

또 정씨는 "전국연합이 북한의 혁명노선인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고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증거는

대지 못했다. 또, "선동은 소극적인 피선동자에 대한 선동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전국연합대회 자료집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 스스로 모순된 답변을 했다. 또, 북한의 혁명노선에 대해 전국연합이 알고 있다고 보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증인신문에 이어 진행된 검찰논고에서 1심보다 구형량을 절반을 줄여 징역 2년 5차 범민족대회 자료집을 직접 감정,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검찰과 경찰의 잘못된 관행이 바뀌어지기 바

란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전국연합 관계자는 "30여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주로 대북심리전등을 담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정씨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적성 여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일한 증거인 보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가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인신구속을 시키는 검찰과 경찰의 태도를 비난했다.

지난 24일 재판 2차공판에서 리영희 교수(한양대 신방과)는 "검토결과 이적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 전북시민운동연합 「지자체를 위한 시민토론평장」 지역에 맞는 다양한 지방자치 연구 필요

전북시민운동연합(YWCA, 전북여성의전화등 9개단체)은 제1차 「지자체를 위한 시민토론평장」을 열었다. 유영진 전주시의원과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열린 이날 행사는 「4년동안의 지방의회 평가」와 토론을 벌였다.

고영자(YWCA, 회장)은 인

사말에서 "한 사회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이 발전해야 하고, 지방자치제의 발전은 시민운동의 역량에 달려있다" 말했다.

홍미영(인천시 부평구시의원)은 주제발표에서 지방자치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 통일염원미사 시작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안중근의사 순국 85주년 추모 민족통일 염원미사"를 27일 7시 30분 명동성당에서 가졌다. 이날 미사는 성직자, 수도자, 신도 등 5백여명이 참석하여 통일에 대한 의지를 높였다.

사제단은 이번 미사의 의의에 대해 "안중근 의사의 겨레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진정한 민족화해와 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미사를 봉헌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제단은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맞이하여 △거레의 하나됨을 위한 전진적 노력과 운동전개 △남북이산가족 상호방문 △남북상호교합적 통일 △제단체 기구와 연대 협력할 것을 밝혔다.

공무원들의 관행, 주민들의 저조한 참여로 인하여 풀뿌리 보수주의 정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4년동안의 지방의회활동의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의 모색과 의원들의 자질개선, 선진자치국과의 활발한 교류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지역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또 그 지역에 대해 잘알고 봉사할 참일꾼을 선택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 집회등 계속

지난 3월 20일 외국인 노동자피난처에서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강제 연행된 지난 버자가이(22,네팔)씨는 22일 사업장이탈을 이유로 강제 출국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은 "지반씨는 사업장이탈로 체류허가가 취소된 불법체류자이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그의 사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므로 본인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 통지도 없이 조사를 이유로 교회에 침입하여 강제연행한 것은 명백한 주거침입 및 불법체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간사 조문숙씨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극단적인 저항을 할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29일 외국인 노동자인권공대위는 향린교회에서 공대위 '소속단체와 함께 지난 20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난입사건에 대한 경과보고와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공대위는 명동성당 농성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여권 본인 소지등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에 공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항의전화, 항의 집회와 기도회, 감시단 발족, 고소고발운동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 평화·인권·민주주의 아태지역 네트워크 결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창립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차인석)는 유엔이 정한 '세계관용의 해'를 맞아 관용 및 평화의 문화진작을 위해 아태지역 사무처와 공동으로 29일 부터 31일까지 '평화·인권·민주주의 교육 증진을 위한 아태지역 전문가 네트워크 설립 창립회

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94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44차 세계 교육회의'의 결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구러시아, 일본,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등 아태지역 8개국 교육전문가가 참여한다.

### "월명공원 파괴는 절대로 안된다"

#### 군산시, 시민단체가 제시한 대체토취장 부적격 판정

월명공원 2만 1천평에 대한 (주) 대우토취장허가문제와 관련하여 군산시가 지난 달 29일,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대체토취장은 경제성등에 있어서 부적격이라고 발표하자 군산환경시민회의등 월명공원보존 시민대책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월명공원을 훼손하여 시민들의 휴식처와 환경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30일 성명을 통해 발표하였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주)대

우가 공장조성과 군장국가공단 입주업체에 필요한 토석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의 여러 업체에서 토석채취장으로 지목이 지정되어있는 토취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학의 토목전공 지질조사 전문가들은 토취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미용토취장 계획에 대해 명확한 포기선언을 하지 않는 것은 미용토취장에 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 명백하다고 보고 하루속히 포기선언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4.19기폭제, 김주열열사 추모각 초라한 준공식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김주열열사의 추모각 준공식이 면장등 50여명만이 참석하여 치루워졌다.

이번에 준공된 추모각에는 총2억8천만원이 투자돼 김주열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건립된 뜻과는 달리 국가적 지원을 하지않고 행사 자체를 축소해곡하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 전라북노동조합연합회 제7년차 대의원대회

4월 3일 오후 2시 이리 장인동 성당 소강당에서 대의원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임원진 개편과 94년 사업보고 95년 활동계획이 있었다.

전북노동조합연합회는 95년도 사업계획에서 '민주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확대 강화' 하기로 하였다.

# 평화와 인권

제 16 호 (95.4.10)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규현  
편집인 : 유경은  
주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씨 석방

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에 대해 재판부가 '전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지법형사상소1부(재판장 이신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국보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판결, 이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넓게 해석 적용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음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작성하도록 지시한 자료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위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90년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 심판결정을 인용, "개정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에도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협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자유민주 체제를 비판하거나 복한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반국가 활동성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기 전

인 90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려 "적용대상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런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은 91년 국가보안법 개정 때에 반영되었다.

이씨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리영희교수의 증거자료에 대한 감정서가 제출되었으며, 보안문제연구소의 이적성 판단이 매우 비전문적이고 졸속적임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 전북시민운동연합 「지자체를 위한 시민토론폰광장」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4월 7일 오후 7시 전북신협회관에서는 전북시민운동연합 주최 제2차 시민토론폰광장 「지자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진행 되었다.

주제발표에서 민인기(해남 YMCA 총무)씨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속에서 세계화와 분권화를 통합시켜야 하고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행정은 민주적 절차를 위한 지방경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원(전라북도 도의원)씨는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입법화 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정당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폰에서는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폰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행정은 민주적 절차를 위한 지방경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폰에서는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폰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행정은 민주적 절차를 위한 지방경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석하기로 했던 민자당과 민주당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음으로서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 행사 안내 ○

- △ 「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서는 제2기 성폭력상담 기초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7일 (금)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나?  
4월 14일(금) 7가지 여성콤플렉스
-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좌담회  
4월 11일 화요일 오후 4시
- △ 전주 시민회(준) 제 6회 초청강연회  
'김대중 죽이기'의 전북대 강준만 교수  
4월 6일(목) 오후 7시 원불교,전주교청 대법당
- △ 전북시민운동연합 2차 포럼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4월 7일(금) 오후 7시 신협 전북연합회 3층 강당
- △ 법률가 모임  
[사법제도 개혁토론회]  
4월 10일 오후 3시 전북신협강당 3층
- △ 전국농민회 지방자치제 교육  
4월 10-11일 부안 원대 임해 수련장

### ○ 행사 안내 ○

- △ 군산시민의 총치예방을 위하여 불소화를 추진하는 모임  
4월 15일 오후 5시 군산그랜드 예식장
- △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북추진위  
'희망의 노래' 꽃다지 공연  
4월 15일 오후 5시 30분 원광대학교 노천극장
- △ 태인여중 여교사 성폭행 사건 9차공판  
4월 20일 광주고등법원 301호실 오후 4시
- △ WTO 이행특별법 조기실시와 통합의료보험  
정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4월 23일 오후 1시 서울대학교(강소변경가능)
- △ 법률가 모임  
[사법제도 개혁토론회]  
4월 10일 오후 3시 전북신협강당 3층
- △ 「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서는 제2기 성폭력상담 기초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14일(금) 7가지 여성콤플렉스
-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좌담회  
4월 11일 화요일 오후 4시

### 여성장애인 공청회

#### 장애로 인해 집중적인 차별에 시달려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우 문제와 해결책'을 논하는 공청회가 장애우권민문제연구소 주최로 4월 7일 오후 2시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강당에서 열렸다. 신혜수(전주한일신학대학) 교수는 '한국사회의 여성, 여성장애인의 차별구조'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그동안 여성계의 여성장애우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여성차별중에서 노동, 정치참여 그리고 성폭력이 가장 문제시된다고 밝혔다. 장애우 권의 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여성

장애우는 50% 이상이 중증 이하로 취업(고용률 37.2%), 결혼(결혼적령기의 73.7%가 미혼)등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고, 많은 장애때문이라고 대답해 교육과 재활치료가 매우 시급함을 보여줬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발표한 '뇌성마비장애인 강간 사례'에서는 일반여성보다 장애인이기때문에 수용된 시설에서 주로 그들을 돌보는 종사자로부터 일어나는 성폭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일 정신건강의 달 정신질환자의 인권 문제 공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월간 (청년의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금 당신의 손길 이'행사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연세대 동문회관 등지에서 열렸다. 4일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한 정신건강의 날로 우리사회에서 천덕꾸러기로 치부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문제를 한번쯤 모두의 문제로 생각해보는 날이다. 국내의 정신질환자수는 정확한 수를 알 수 있는 통계는 없는데, 대략 정신분열증환자 12만명, 조울증환자 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알콜 중독자는 무려 3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 민주세력 탄압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재야단체 성명 발표, 지속적인 선거 참여 주장

검찰이 5.18기념사업회장 조비오 신부와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전 의장 정동년 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발표 이후 재야 단체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18광주민중항쟁연합과 광주전남연합등은 7일 성명

서를 발표, 조사방침 철회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의장 정관훈등5명)은 "선거는 국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이며 누구라도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검찰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라며 "선거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

고 선거의 국민적 참여를 위하여 사회단체의 선거에 대한 참여보장"을 요구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논평에서 "진정으로 검찰이 해야 할일은 재야단체에 대한 내사보다는, 각종 불법 행위에 적극 대처, 국민이 정확히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분신 철거민 박균백씨 취재기) 영선이의 꿈을 빼앗아간 이 땅의 철거문화 (고상만, 인권위원회 간사)

금호 1-6지구 재개발 지역 철거민 박균백(33)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16m 아래로 몸을 내던진지 20여일이 지났다. 중환자실에 입원치료중인 박씨는 화상과 투신당시 부상으로 척추가 골절되고 눈은 실명된 상태이다. 그는 이제 막 재통을 부릴 귀여운 두딸을 가진 가정으로 지금은 생명의 사선에서 힘겨운 삶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박씨의 투신당시 철거 강패를 동원, 살인철거를 자행한 용역회사와 성동경찰서, 재개발 건설회사인 한진건설측은 박씨의 치료비를 거절하고 있다. 또한 한양대 병원에서는 밀린 치료비를 내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하늘같이 믿고 의지하던 한 가장을 잃어버린 두 딸과 부인은 강제철거 속에서 그들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잃었고 지금은 중환자 보호대기실에서 살아가고 있다. 4살난 막내딸 영선이는 지금도 남아어린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며 운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지난 6일 철거반원의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겪고 난 후부터 라고 한다. 7살난 진영이는 조금은 커서 사랑하는 아빠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는 듯하며 말도 없고 밥도 잘 먹지 않는다.

그 아이들의 눈빛을 읽으며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잔인한 어른들과 사랑하는 아빠가 무슨 이유인지 불을 붙이고 떨어졌던 그 날의 일들을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참으로 아이들의 눈빛을 보며 부끄러움과 죄스러움과 고개를 들 수 없다. 맛난 음식과 따뜻한 방 안에서 인형을 가지고 다투는 평범한 아이들의 생활을 진영이와 영선이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신 어른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영선이와 눈물을 지으며 한숨쉬는 엄마를 보며 말이 없어진 진영이가 있을 뿐이다. 병원 한 구석에서 만들어진 콘테이너 박스의 보호자 대기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 아이를 보며 지금 우리가 무슨 희망을 줄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두려워해야 하는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다시금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평화와 인권

제 17 호 (95.4.17)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 장애인 10%공천, 비례대표제 참여 촉구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정책제안집을 통해 의사반영

### 전북노동자 임단투 전진대회

장애인계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공동대표 조일묵등 7명,공대협)는 4월 11일 오전 10시 홍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에 대한 장애인계 입장을 발표했다. 공대협은 각 정당은 후보공천시 '장애인 10% 공천'과 '비례대표제 장애인'을 공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복지 정책과제로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구성할 것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강화하고 시·도 교육청에 장애인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 △장애인편의시설확

보를 위한 건축위원회의 활동 강화와 시·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전담 부서 설치할 것을 내세웠다. 또한 의료재활 종합적 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기능 강화, 장애인에 대한 지역별 기초조사 실시, 장애인 복지관련 조례 제정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광역의회, 기초의회를 포함해 19명의 장애인이 정계진출을 했는데, 공대협의 주장대로라면 88명의 장애인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김성재 상임대표는 "비례대표제와 10%공천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자치 선거에 장애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고"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대협은 각정당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26,7일 있을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자체에 대비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정책대안집을 마련해 전국 후보에 보내는 여론형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15일 오후 6시 원광대 노천극장에서는 '민주노동 건설과 95임단투 승리 및 사회대개혁을 위한' 전북노동자 전진대회가 노동자 시민 학생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95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와 꽃다지 공연 "뮤직디큐멘타리로 본 투쟁과 희망의 노동운동사"가 있었다.

##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는 21.1% 늘어 "5인 미만 사업장등 포함하면 두배는 될 것"

산업재해는 점점 감소 추세에 있지만, 산재로 인한 사망등, 중대재해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의 최근 통계발표에 따르면, 94년 산업재해는 8만 5천 9백 48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2천6백78명이다. 93년사망자수가 2천2백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21.1%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재 보상금등 5조원의 경제손실을 감안할때 유아시절부터 모든 국민에게 무의식적인 안전생활이 정착되도록 산업현장은 물론 범국민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노동자가 사소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안전수칙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김학기(한국산업재해 노동자협의회사무국장)씨는 "노동부는 산재원인을 노동자의 부주의로 꼽고 있지만 오히려 안전시설의 미비와 장시간 저임금이 더 큰 원인이다. 또한 정부 통계는 5인미만의 사업체를 제외하고 있어 5인미만의 사업체와 외국인 노동자들, 해외노동자들의 산재사고까지 포함하면 현재 통계의 2배는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사망자는 광업 3백 17명, 제조업 7백33명, 건설업 7백43명, 전기·가스 1백32명, 운수·창고·통신 4백13명, 기타 산업 4백53명으로 나타났다.

### ○ 행사 안내 ○

- △ 김주열열사 묘소 참배  
4월 19일 오전10시 시청민원실앞 집결 남원출발
- △ 환경운동연합 행사  
\*제25주년 지구의 날 기념 자건거 대행진  
4월 22일 오후 3:00 - 오후 5:30  
\*토론회 4월 29일 오후 3시 신협전북연합회 3층 '지방자치시대에 전북의 환경문제 개선될 것인가'
- △ '전북여성의전화, 4월 여성학교' 실시  
주제 : 여성운동의세계화와 지방화  
4월 27일 오전 11시 신혜수(한일신학대학교수)
- △ 태인여중 여교사 성폭행 사건 9차공판  
4월 20일 광주고등법원 301호실 오후 4시
- △ WTO 이행특별법 조기실시와 통합의료보험 정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4월 23일 오후 1시 서울대학교(장소변경가능)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운영 간담회 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교육 필요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방을 위한 운영 간담회가 4월 11일 오후 4시에 「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서 열렸다.

신혜수(한일신학대학교수) 교수의 사회로 차종선변호사(성폭력특별법등 현재 법적인 문제점의 극복과 대책), 이혜숙선생(성폭력의 예방 및교육을 위하여), 김임박사(성폭력 상담소로서의 기능), 전경숙교수(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치료의 문제) 김성천교수(사회복지사로서의 기능)에 대한 주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혜숙 선생은 "성폭력범죄는 개인차원의 범죄가 아닌 우리 사회의 향락산업의 비대화 현상, 남녀불평등 구조, 가부장적 남성문화의

도덕적 타락, 이중적성규범 등 사회문화적 요인을 포함한다"고 바라 보았다.

이날 토론자들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시절부터 올바른 성문화를 가질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지위개선, 남녀평등의식, 인간존중가치관의 확립을 위한 성의식 개선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폭력 예방치료센터」의 과제로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전문인의 육성과 자원봉사자를 통한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과 활발한 연계를 통하여 성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검열 시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심의규정마련

컴퓨터 통신, 700서비스등의 내용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법정기구로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데이콤 빌딩 현판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그러나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세우기 위해 발족했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속한 민간 자율기구였으나, 설립근거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일 발효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정기구로 조직되었다.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널리 읽혀지고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요.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 규 현

### 군산시 미룡동 토취장 전격허가 군산시민단체 강력 반발

시민단체들의 반대투쟁에 부딪히면서 (주)대우에 대한 미룡동토취장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던 군산시가 지난 10일 갑자기 토취장 허가를 결정하면서 군산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대책위원회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들의 반대투쟁에 부딪히면서 (주)대우에 대한 미룡동토취장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던 군산시가 지난 10일 갑자기 토취장 허가를 결정하면서 군산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대책위원회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까지 토취장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던 군산시가 갑자기 시민단체가 제시한 대체토취장이 부적합하다는 근거를 내세워 (주)대우에 대해 미룡동에 대한 토취장 허가를 승인하자 대우상품불매운동등을 비롯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고 있다.

특히 미룡동 토취장과 인접해있는 관계로 토취장 허가와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군산대학교는 총장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투쟁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 군산시민의 충치예방을 위하여 상수도 불소화를 추진하는 시민모임 출범식

상수도에 적정량의 불소를 투입함으로써 치아를 건강하게 하자는 취지의 시민모임 출범식이 15일 오후 5시부터 군산에서 있었다. 군산불소화 추진모임은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군산

경실련, 환경시민회의, 진포문화마당, 군산 YMCA 등 대다수의 시민조직들을 비롯하여 군산치과의사회 보건 의료인들이 모두 참여해 구성되어 있다

### 경비교도대원 김성철씨 구타 호소, 자살

마산교도소 경비교도대원인 김성철씨가 휴가중이던 4월 9일 새벽, 한강 양화대교에서 투신 자살했다. 김씨는 서울대 경제학과 2년을 휴학하고 군에 입대하여 경비교도대원으로 차출되어 근무해왔다. 김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교도소내의 구타와 비리에 대해 호소해왔다.

### 정치적 탄압중지 민정련 성명 발표

민중정치연합(대표 김철수)은 11일 경찰이 9일 민정련 회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데 대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민정련은 "최근 진보정당 결성과 다가오는 지자체 선거에 공동대응하려는 계획과 진보정치세력과 노동자들과의 연계고리를 끊기위한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 평화와 인권

제 18 호 (95.4.24)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 경찰, 해고노동자 무차별 폭행, 입원중 환자 강제 연행 노동절을 맞아 전국적인 복직투쟁 저지위해

경찰이 병원에 가지 병력을 동원 연행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국해고노동자들이 노동법 개정과 복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장관 면담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듣기 위해 노동부 사무관을 만나러 가던 중에 발생하였다.

4월 18일 오후 4시 30분경 해고 노동자 장영길(전해투 대표)씨등 40여명이 과천 노동부를 방문하던 중 경비대 2706부대 소속 전투경찰에게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고노동자들은 1백 50여명의 전투경찰에게 둘러싸여 곤봉과 방패로 머리, 얼굴 등을 집중구타 당해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실신하는 사태까지 이르러 인근병원으로 긴급 호송되었다.

「민주노동(준) 전국 구속 해고자 원상회복 특별위원회」(「민주노동해고자특위」)는 4월 19일 성명을 통해 93년 문민정부의 출범직후

그해 3월 10일 노동부는 "사면복권된 해고노동자 1천3백명과 해고노동자 3천9백명등 총5천2백여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부장관 면담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듣기 위해 노동부 사무관을 만나러 가던 중에 발생하였다.

한편 20일 새벽 03시 30분 과천 방배경찰서 소속 경찰 4백여명은 사당의원으로 난입하여 입원, 치료중인 민주노동총 해고자 특위 선전국장 나현균씨를 긴급구속장으로 연행했다.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김동연, 김영균 씨등 다른 해고자들도 연행하고자 했으나 병원 측의 거센 항의로 실패했다.

이번사태에 대해 「민주노동총해고자특위」는 "임투와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의 해고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작태"라고 말했다. 사당의원과

해고자특위는 황인용 과천경찰서장을 불법난입과 폭력 행위로 구속할 계획이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20일 논평에서 "경찰의 무차별 폭력행위는 헌정권의 반노동자적 정책의 연장선상에 조차 무시하는 자본가들의 횡포 속에 3천여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유아 9백71명중 68명 학대, 방임 당해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3회 세미나, 설문보고

13회를 맞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회장 박명윤) 정기 세미나가 '아동학대 및 방임대책'을 주제로 4월 18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김동춘(총신대 유아교육학과)교수는 "유아학대 및 방임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란 주제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3월 6일-18일까지 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가정유형은 편모가정(32.4%), 편부가정(10.8%) 순이다. 또한 방임의 원인은 경제적빈곤, 가정불화, 무관심 무책임,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아동학대신고 제도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현행신고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27.9%에 불과했다.

김동춘 교수는 아동학대와 방임예방을 위해 "국가는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아동과 그 가족을 국가정책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경제·사회적 정책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널리 읽혀지고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요.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 규 현

### 태인여중교사 성폭행사건 9차 공판 여관종업원 검찰 진술서 번복

4월 20일 오후 4시 광주고  
등법원 (부장판사:권남혁)  
301호 법정에서 정읍태인여  
중교사 성폭행사건 9차 공  
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은교장으로부  
터 "이사건의 증인은 편하  
지 못할 것이다"는 협박을  
받은 서무과직원 김모씨와  
여관종업원 강모씨의 증인

으로 진행됐다.  
강씨는 "은교장과 같이 여  
관에 들었던 사람이 김교사  
가 아니고 비슷한 사람이었  
다"면서 검찰에 제출한 진  
술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  
을 증언했다.

다음 재판은 4월 25일 오  
후 4시 광주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손해소송 선고 연기

고문후유증으로 피해를 당  
하고 있는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  
송 1심 선고공판이 두차례  
에 걸쳐 연기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  
부(주심판사 최혜리)는 20일  
오전 10시 문국진씨 손해소  
송 재판 선고심을 지난 6일  
에 이어 또다시 연기 오는  
5월 4일 오전 10시 서울지  
방법원 559호에서 갖기로  
했다.

문씨의 부인 윤연옥(34)씨  
는 "사법부가 고문근절의지

만 투철하다면 선고에 망설  
일 이유가 없다.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을 생각한  
다면 헌법과 고문 방지조약  
의 정신에 입각해 빨리 결  
론을 내려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다가 무혐의  
로 풀려난 김종경(42)씨가  
제기한 손해소송도 1년8개  
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고문후유증으  
로 생활무능력자가 되었다

### ● 행사 안내 ●

- △ 태인여중교사 성폭행사건 10차공판  
4월 25일 오후 4시 광주고등법원 301호실
- △ 세계 노동절 105주년 기념행사  
4월 29일 오후 3시 전북시청앞 광장
- △ 「전북여성의전화」 4월 여성학 교실  
주제 : 여성운동의세계화와 지방화  
4월 27일 오전 11시 신혜수(한일신학대학교수)
- △ 여성운동연합 주최 「여성후보정책토론회」  
4월 28일 오후 1-5시 원광신협3층
- △ 전북 환경운동연합 환경포럼  
4월 29일 오후 3시 신희전북연합회 3층  
「지방자치시대에 전북의 환경문제 개선될 것인가」

###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0.54% 장애인에 대한 편견, 고용기피등

장애인 고용이 점차 증가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무고  
용률은 2%에 훨씬 못미치  
는 0.43-0.65%에 불과한 것  
으로 집계되었다. 노동부  
직업안정국은 20일 '장애인  
고용현황과 대책' 발표를  
통해 3백인 이상 사업체는  
2%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94  
년 12월 현재 0.43%에 그친  
9천97명이 고용되었다고 밝  
혔다. 이는 91년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당시 7천7백58명  
에 비하면 17% 증가한 숫  
자다.

한편, 장애인공무원현황을  
살펴보면 94년 8월 장애인  
공무원은 2천1백81명으로  
93년 1천9백87명에 비해 1  
백9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의  
무고용 의무인원이 5천5백  
80명인데 비해 3천3백99명  
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이  
유에 대해 노동부는 민간부  
문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편의시설부족등 사  
회여건 미비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부족  
△장애인 고용기피 등을 들  
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에서 장애인 의무고  
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채  
용의지가 부족하고 공개채  
용 시험제대상 불이익이 있  
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공개채용인원의 2%이상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  
으나, 실제채용비율은 93년  
에 1.2%에 머물렀다.

### 5월 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방한 일본군 중군위안부 증언과 조사활동 위해

유엔인권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인 라디카 코마라스와미씨  
가 군 위안부 문제를 조사  
하기 위해 5월 17일 부터  
20일 까지 한국을 방문한  
다. 라디카씨는 생존해 있  
는 군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을 듣고 정대협등 민간단체

와 정부 대표를 만나 조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정대협 윤미향씨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인 조  
사활동을 통해 한국을 방문  
함으로써 군위안부 문제가  
유엔 문서에 기록으로 남겨  
지게 될 역사적인 사건"이  
라고 평가했다.

### 김주열 열사 묘소 참배 지구의날 행사 무기한 연기

4.19 35주기를 맞이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  
강희남(상임교문) 박창신(공  
동의장) 민가협회원과 시  
민 40여명은 김주열열사와  
이석규 노동열사의 묘소를  
참배하였다.

4월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북환경운동연합」주최 제  
26회 지구의 날 행사 '녹색  
도시를 위한 자전거 걷기  
대회」가 비로 인하여 무기  
한 연기되었다.

# 평화와 인권

제 19 호 (95.5.1)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 5월, 유엔 사회권조약 한국정부 보고서 정식심사 민간단체들, 보고서 작성 완료, 회의 참석

유엔·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5월 1일 부터 19일까지 한  
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첫번  
째 정식 심의를 가짐으로서  
이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들  
의 활발한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참  
여연대등 8개 인권사회민간  
단체는 '경제·사회·문화  
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에 따른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보고서 제출과 사회권  
위원회 회의 참석과 관련  
25일 10시 세실 레스토랑에  
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권운동 사랑방 관노현  
교수(방통대법학)는 민간보  
고서 작성취지에 대해 "정  
부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  
하고 부족한 정보를 보충함  
으로써 한국의 인권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 문  
진영교수(성공회신학대사회  
복지학)는 "세계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구호속에  
몰린 한국의 인권을 세계적  
수준의 잣대로 살펴 볼 수  
있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민간보고서는 총110쪽에  
이르며 서문에서는 민간보  
고서의 의의, 정부보고서의  
문제점, 조약실시의 장애요  
소를 담고 있다. 또한 본문  
내용으로는 노동권, 사회보  
장권, 주거권 장애우인권,  
가족생활보장권, 보건권, 교  
육권, 문화권에 대한 민간  
단체의 의견을 기술하고 있  
으며 각 조항마다 민간단체  
의 권고안을 첨부하고 있  
다.

이번 민간보고서 작성은  
한국정부가 90년 경제·사  
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  
제조약에 가입하고 이를 비  
준함으로써 매 5년마다 국  
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에  
따라 민간단체도 반박보고  
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 해 5월경 국내인권사  
회단체들은 한국정부가 93

년 10월에 보고서를 제출했  
다는 정보를 외국의 인권단  
체로부터 듣고 그해 6월 열  
리게 된 사전실무분과회의  
에 약속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94년 11차  
회기(11월 21일-12월 9일)에

## 경찰폭력, 화장 지워진 문민의 가증스런 얼굴 공대위, 해고자폭행·사당의원 난입에 강력대응키로

「경찰폭력 진상규명 및 사  
당의원 불법점거 규탄과 국  
민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계훈제등 16명, 공대위)는  
28일 오전 11시 종로성당에  
서 경찰의 해고노동자 폭력  
사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  
다.

민주노총 해고자 특위 상  
황실장 이형진씨와 사당의  
원 원장 김종구씨는 4월 18  
일부터 20일사이에 벌어진  
경찰폭력 사태를 설명했다.  
원장 김씨는 "경찰의 병원  
난입은 70-80년대 군사정권  
아래서도 결코 없던 일"이

라고 말하며 "이런 행위는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치료할 권리를 박  
탈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 소  
장은 "이번 사건은 백주대  
낮에 일어난 명백한 테러"  
라고 말하며 "적법절차를

서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제  
출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정  
부가 연기를 요청하여 95년  
5월 12차 회의에서 다루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28  
항의 사전전문을 기초로 하  
여 한국 정부대표를 출석시  
킨 가운데 정부보고서 내용  
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  
과는 한국정부에 대한 공식  
권고안으로 발표된다.

며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병주 목사는 "군사  
정권은 군대를 동원하여 인  
권을 침해하더니 문명정부  
는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다"고 말하  
며 "화장이 지워진 문민의  
얼굴이 가증스럽다"고 주장  
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노동계,  
의료계, 종교계등을 중심으  
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집단적인 고소·고발운동과  
노동부, 경찰청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해고노동자 대책마  
련 및 복지과 구속자 석방  
△청사경비대장파 과천서장  
구속, 노동부 관련자 처벌  
△박일룡 경찰청장사임 △  
노동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  
공개사과△노동악법 개정운  
추구했다.

### ● 행사 안내 ●

- △ 어린이 환경 한마당  
일시:5월 5일 (금) 오전 10시-오후 5시 전주교대
- △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제5기 2차, 희망의 삶,  
통일농업을 준비하는 우리농업지키기 하루주점  
일시:5월12일 (금)오전11시-오후9시 전주기라성가든
- △ 환경어린이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주최:환경을 지키는 여성들의모임  
일시:5월 13일 (토) 오후1-6시 전주다가교밀 냇가

### 전북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포럼」 지역주민 정책과정 참여해야 환경문제해결

“환경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4월 29일 오후 3시 전북신협강당에서는 「전북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전봉호 변호사)이 주최한 시민환경포럼(지방자치시대에 전북의 환경문제 개선될 것인가)이 5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병완교수(광주대 환경행정학)는 “지방자치시대에 전북의 환경문제 개선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구성원과 지방정부와의 효율적 결합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 \*중앙정부와 지방의 합리적인 역할 필요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인식전환 \*지방단체장평가를 녹색 GNP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교수는 “지방정부의 자립도가 빈약하고, 지역주민의 환경의식이 투철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부의 개발논리에 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영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전북의 환경문제를 현안들”을 발표했다.

유영진 사무국장은 자신의

발표에서 “지역경제의 낙후성에 대한 여론조성과 행정체계의 비효율성, 주요하천의 오염, 무계획한 도시정책으로 인한 녹지공간 훼손, 국·도립공원의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등, 전북의 경우 어느 지역보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정진성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은 “지방환경문제는 중앙정부의 모든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정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식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환경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문민정부는 6공에서도 규제했던 그린벨트를 부분 해제하고, 농공단지 유해업체를 입주시키는등,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시민단체들은 아래로부터 역량을 결집하여 정책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에서 김섭 전라북도 환경 지도과장은 현재 도내에 환경시책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장영달의원(민주당 완산지구당) 이강년위원장(민자당 덕진지구당)이 나와 각 당의 환경정책을 발표하였다.

### 사회대개혁 투쟁 노동자가 앞장설 것을 다짐 민주노총원년 노동절 기념 전북노동자대회

4월 29일 오후 3시부터 전주 시청 앞에서는 제 105주년 노동절을 기념하는 노동자집회가 민주노총 전북 추진위를 비롯하여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한국통신노조 전북지방본부등이 참여한 민주노총 원년 노동절 기념대회 전북지역 조직위원회로 열렸다.

노동자 시민,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이승준 민주노총 지역추진위 공동대표는 대구가스 폭발사고로 인해 죄없이 숨겨진 학생,시민들을 위해 목숨을 하차고 주문하고 나서 문민독재경연의 헛구호인 ‘세계화’를 깨부수고 사회대개혁투쟁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자고 주장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전북연합 한규채공동의장의 축사에 뒤이어 연대사를

### 전북여성후보정책토론회

4월28일 오후1시 원광신협 강당 3층에서 「전북여성운동연합」이 주최한 「전북지역여성후보 정책토론회」가 엄영애(전북여성운동연합상임의장)등 토론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 후보들은 기존의 여성정책은 복지나 가정문제가 중심이 되어왔는데, 여성의 사회적 진출 등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맞는 새로운 여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을 추진할 뜻이 있는 사람이 여성문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신대균 전농 전북도연맹의장은 노동자들과 농민,시민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한국사회를 바꾸어나가자고 역설하였다.

본대회를 마친 노동자,시민,학생들은 5시부터 다가공원까지 시가행진을 하면서 이날 집회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였다.

한편, 이날 집회장 한편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해고자특위 해고노동자들이 과천서 경찰들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칼라사건으로 만든 대자보가 부착되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 전북지역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축적된 민주노조운동의 경험과 투쟁성과를 하나로 모아 민주노총-산별노조 건설을 결의하는등 모두 6개항의 활동방향을 밝혔다.

### 국보법 무죄판결자 증언 제 84차 민가협 목요일집회

제84차 민가협 목요일집회가 4월 2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6월과 21일 각각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와 박치관(사람과 일터 발행인)씨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였다.

두사람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가자”고 말해 집회 참석자와 주위 사람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 평화와 인권

제 20 호 (95.5.8)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 스 : 0658-45-0152

## 3자개입 선언으로 노동운동탄압 정면돌파 경기남부지역 80여 노조·노동단체 노동탄압에 공동대처

경기남부지역 80여개의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이 ‘3자개입’을 선언했다.

지난 5월 3일 수원동회장에서 모인 경기남부지역의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대표들은 “현정권에서 군부독재 시절보다 더 강도높고 교묘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고, 특히 경기남부지역에서는 그 사태가 심각하다”며 “정권의 적극적인 개입하에 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책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남부지역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고 최근 자행되는 탄압에 적극적으로 맞서나가기 위해서 3자개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3일 현재 경기남부지역에서는 안산지역에서 30개, 안양지역에서 23개, 수원지역에서 21개의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등 80여 노동조직들이 3자개입 선언에 서명

했다. 이들은 서명을 확대해나가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노동운동탄압에 적극 연대투쟁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특히, 안산 우신공업, 수원의 한일전장, 안양의 LG전선, 의왕의 계요병원에서 해고와 탄압을 자행하고 있고, 특히 경기남부지역에서는 그 사태가 심각하다”며 “정권의 적극적인 개입하에 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책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감옥 창살마저 막아버린 영등포 교도소 민가협, 법무부 항의방문

영등포교도소(소장:송선홍)가 지난 4월 15일부터 독거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각방의 창문을 자살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민가협)에 따르면 영등포교도소는 “법무부의 지시”라며 유일하게 방안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을 두꺼운 철판으로 막았고, 철판에 구멍을 뚫어놓

았다. 한편, 안산지역의 우신공업에서는 지난 4월 22일, 폭력사태가 발생, 농성중인 노조원들이 구사대의 폭력에 쫓겨났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 5명이 구속된 상태이나 이에 반해 폭력을 휘두른 구사대는 단 한명도 입건되지 않았다.

었다. 이런 사실은 ‘구국전위’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안재구(63)씨를 면회한 가족들에 의해 밝혀졌다. 영등포 교도소측은 “창문봉쇄는 재소자간의 격리와 자살방지를 위한 것이며,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영등포 교도소를 제외하고 다른 교도소나 구치소에도 이런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민가협은 2일 발표한 경우에서 “영등포교도소의 경우 작년 여름 열악한 교도소 환경과 폭염으로 인해 재소자가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교훈 삼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여름을 앞둔 지금 있던 창문마저 봉쇄한 것은 교정행

## 국보법, 노조법폐지 촉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장 이창복)은 1일 법의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 국보법과 노동조합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이성과 상식에 위배되는 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80년 권력찬탈과정의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가보안법과 노동조합법을 들었다. 전국연합은 국보법과 노조의 정치참여금지,제3자개입금지등 조항이 있는 노동조합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우리나라의 교도소나 구치소 감방에는 단 하나의 창문이 달려 있는데, 이 창문에도 손가락 굵기의 쇠창살이 박혀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재소자들은 하루 30분내 「서 1시간 정도의 운동시간외에는 햇빛을 쬐 수 없다.

한편, 민가협에서는 2일 이에 대해 안옥희씨등 의장단 6명이 항의방문하였으나, 보안과 직원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가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행정편의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우”로 단정짓고 이의 철회를 위해 교정국장을 면담하여 따질 예정이다.

5월 6일 오전 11시, 전북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널리 읽혀지고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지요.  
구독료는 년 3~5만원입니다.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 규 현

###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널리 읽혀지고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지요.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 규 현

### 사단법인 호남사회연구소 창립 새로운 상황에 맞는 연구활동의 활성화 시급

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 실에서는 지역성, 학제성, 진보성을 표방하고 1987년 8월 창립하여 현재까지 활동해온 호남사회연구소의 사단법인화를 위한 총회와 '호남사회연구 2집' 발간 기념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준비위원장인 김의수 교수(전북대, 철학)는 인사말에서 그동안 호남사회연구소가 개방적인 연구풍토와 건전한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참된 발전을 위해 상당정도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회현실은 제도적으로 지방화가 실현되는 등 구체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원들은 그동안 진행해온 호남사회연구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준비해온 사단법인화를 위한 정관(안)을 부분수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가운데 차루어진 임원선거에서 회장 김의수 교수, 부회장 강순규 전주대 교수들을 비롯한 임원 7명을 선임하였고 이사회에 참여할 나머지 3명의 이사로는 법조계를 대표하여 진봉현(변호사) 씨, 의료계를 대표하여 안철호(한의사) 씨, 종교계를 대표하여 문규현 신부를 선출하였다.

#### 성폭력에 대처요센터 상담전화 개설

성폭력에 대처요센터(공동의장: 박상희, 백남운, 박창신)에서는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담전화를 개설했다.

전화 : (0652) 83-9009

상황에 맞는 연구활동의 활

#### 전북연합 5.18주간 행사계획

- 5.13. 학살책임자 처벌 및 기념대회
- 5.18. 이세종열사 추모행사
- 5.20. 5.18 정신계승을 위한 도민대회

광주고법에 접수되는 항소

#### ● 행사 안내 ●

- △ 기독교청년회 5.18 추모의 밤  
일시: 5월 18일 (목) 오후 7시 전주교백교회
- △ 민주노동준비위 광주민중항쟁 15주년 기념대회  
일시: 5월 21일 오전 10시 망월동 묘역
- △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제5기 2차, 희망의 삶, 통일농업을 준비하는 우리농업지키기 하루주점  
일시: 5월 12일 (금) 오전 11시-오후 9시 전주기라성가든
- △ 환경어린이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주최: 환경을 지키는 여성들의모임  
일시: 5월 13일 (토) 오후 1-6시 전주다가교빌 넷가

### 광주고법 항소사건 40%, 도내에서 제기 도민 불이익과 불편감수

사건의 40%가 도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전북도민들은 항소과정에서 엄청난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전주고등법원 유지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3년의 경우 광주고법에 접수된 1천 9백 93건의 항소사건 가운데 전주지법 관내 사건은 7백 81건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한 것으로

#### 대구가스폭발사고 보도 축소 은폐보도 규탄

방송개혁국민회의 (공동본부장 강문규등 9명)는 4일 프레스센터에서 대구 가스폭발사건의 축소·왜곡 보도와 관련하여 규탄대회를 갖고 KBS, MBC, SBS방송 3사와 공보처에 항의 방문했다.

방송개혁국민회의는 "지난 해에 일어난 성수대교붕괴(94.10. 32명 사망), 아현동 가스폭발(94.12. 12명사망)등의 사건보다 피해가 큰 100여명의 사망자가 났는데도 방송시간이 짧고 화면구성도 끔찍하거나 유족이 오열하는 모습은 아예 배제시키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를 앞두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4일 현재 컴퓨터통신에서도 '대구참사와 방송축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집계됐다. 지난 92년의 경

우에도 항소사건 1천 9백 73건 중에서 37.2%가 도내에서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언도받아 항소심에 계류중인 조작간첩 사건의 주인공 이화춘씨의 경우 일주일에 몇차례씩 가족들이 면회를 다녀야 하는 형편이어서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등 문제가 산적해있다.

#### 5.3 동의대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 촉구

6년전 발생한 동의대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3일 오후 부산 동의대 교정에서 열렸다. 5.3동지회, 구속학생가족대책위원회, 동의대총학생회등이 주최한 이 집회에는 학생, 시민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의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정부가 5.3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외면하고 있다"며 현재 이 사건으로 구속중인 윤창호씨 등 5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5.3동의대 사건은 "화염병에 의한 화재 발생"을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이 재판부에서조차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화재 발생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도 2일 성명을 발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 평화와 인권

제 21 호 (95.5.15)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 국내인권문제관련,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가보안법등 조사활동 예정'

국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최초로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에 온다. 유엔인권위원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사인, 인도)씨는 올 6월 말 한국을 방문, 조사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후사인씨는 한국정부에게 방문의사를 밝혔고, 이를 의무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방한이 이루어졌다.

후사인씨는 민간단체와 정부를 만나 조사활동을 벌이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 51차 유엔인권위를 모니터링했던 이성훈씨는 "한국정부가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한 전향적인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는 "후사인씨의 방한을 통해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이 국제기준에 의해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특별보고관이 이를 거론하는 것도 최초라는 점에서 반인권적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후사인씨는 지난 5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94년의 활동보고와 9개국의 인권상황을 개괄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보고서에서 그는 "대부분의 국가가 분명하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

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단지 민주주의의 도구로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과 평등의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작가 황석영씨의 사건이 언급 되었다.

특별보고관제도는 유엔의 인권기구가 특정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인권 전문가를 임명해 조사를 통한 결과를 보고받는 제도를 말한다.

### 장기수 고 윤기남씨 묘지 광주시청 5.18전 이장 압력

지난 2월 24일 사망한 장기수 윤기남씨의 묘지를 옮길것을 강력히 요구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의 묘지는 광주 5.18묘역 근처인 제3묘역안에 설치되어 검찰과 언론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되어왔다. 광주시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열린 광주지역 관계기관대책위원회에서 윤씨의 묘지를 본격적인 5.18주간 이전에 이장하기로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광주시청이 떠맡고 있고, 가족들은 시청으로 부터 회유와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 5.18, 15주년 기념및 기소촉구 전북도민대회 "책임자 처벌은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

광주민중항쟁 15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학살책임자 '기소촉구'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13일 오후 3시 전주다가공원에서는 '5.18 민중항쟁 15주년 기념 및 학살책임자 기소촉구 전북도민대회'가 열렸다.

비가오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시민과 학생등 3백여명이 참석하여 전주 코야백화점까지 행진을 벌였다.

민주주의민중통일전북연합(공동의장 한규채, 박창신등)은 성명서에서 "5.18학살 책임자를 가려 처벌을 가하

자는 것은 군부세력이 정권장악을 위해 국민을 살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한것이며, 5.18문제의 해결을 통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5.18 민중항쟁의 책임을 묻는 일에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5.18영령의 숭고한 넋을 계승하여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행사는 비로 인하여 약식행사만 치루고 5월 20일 집회를 기약하며 이승준 민주노동전북추진위 공동대표의 성명서 낭독을 끝으로 오후 5시 20분에 마쳤다.

#### ● 행사 안내 ●

- △ 기독교청년회 5.18 추모의 밤  
일시: 5월 18일 (목) 오후 7시 전주교백교회
- △ 광주민중항쟁 15주년 기념식  
5월 18일 전주 이리 군산 각 대학
- △ 광주민중항쟁 15주년 기소촉구 시민대회  
5월 20일 오후 3시 -5시 전주다가공원
- △ 민주노동준비위 광주민중항쟁 15주년 기념대회  
일시: 5월 21일 오전 10시 망월동 묘역
- △ 여성학 강좌 「함께생각하는 가정폭력법」  
5월 24일 오전 11시 전북여성의전화
- △ 조작간첩 이화춘사건 항소심공판  
5월 19일 광주고등법원 오후 2시
- △ 태인여중 여교사 성폭행사건 제10차공판  
5월 25일 오후 4시 광주고등법원 301호 법정

무자비한폭력철거, 철거민 인권은 어디에  
폭력배등이 주축인 「적준개발」 16개 철거용역

지난 4월 25일 봉천동 철거지역에서 주부에 대한 성폭행을 저질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주)적준개발(대표이사 정숙중)은 현재 서울의 16개 지역에서 철거용역을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적준개발은 봉천동 뿐만 아니라 고공철탑 농성중 박근혜가 분신한 금호 6구역 등 그동안 철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철거를 도맡아 왔다. 그런과정에서 시공자들과 재개발조합측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상계동과 중계동의 철거까지 맡게 되었다.

보통 이들은 한건당 20억씩 철거용역을 맡고 있고 가옥수와 면적에 따라 계약금액의 차이가 있다.

적준개발은 현재 16개 철거지역에 팀장과 반장만 총 75명을 배치해놓고 있으며 유사시 동원능력이 8백에서 2천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강패들로 폭력전과자나 특수부대출신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일당은 보통 50만원선으로 알려져 있지만, 철거당시의 주민의 저항 정도에 따라 시간당 50만원 이상도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철거시

마지막까지 남게되는 세입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방식이 동원된다. 철거강패들은 쇠파이프와 각목등으로 무장하고 심지어는 어린이와 노인까지 안하무인으로 구타를 자행하고 순식간에 동네는 아수라장이 된다고 한다.

양해동(서울철거민연합회장)씨는 "이번에 봉천동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성폭력은 철거지역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철거민에게 주거권이니, 인권이니 하는건 너무 요원한 얘깁니다."

더욱이 철거반원들을 폭력으로 내모는데는 철거지연비용을 철거용역업체가 배상하게 되는 계약조건이 한몫한다. "8개월 이내에 용역업체로서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벌칙금을 1일당 총금액의 천분의 일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철거전문회사들이 주민들을 폭력으로 내모는 동안 아무리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은 폭력사태에 수수방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을 구속해 분노를 사고 있다. 이번 봉천동 성폭력사건에서도 적준개발 관계자 4명을 소환하더니 바로 그 다음날 훈방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8백-1천여명 수감 반국가사범 2백40명  
국제사면위원회, 북한방문에서 밝혀

국제 엠네스티 대표단이 북한의 법개정과 양심수 문제를 토론했기 위해 4월 26일부터 일주일간 북한을 방문했다. 엠네스티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북한의 인권조사연구소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연구소 관계자들과 만나 인권상황에 관한 폭넓은 토론을 벌였다. 대표단은 조사활동 중 북한의 사범·외무관련 책임자와 법조계 인사를 만났으며 사리원근처의 교화센터(교

도소에 해당)를 방문했다. 북한 당국자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는 사리원을 포함하여 3곳에 교화센터가 있으며, 여기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8백에서 1천여명이고 그중 2백40여명이 '반국가'행위로 인한 수감자이다. 북한정부는 대부분의 반국가 사범이 평양시에 있는 '형산 재교육센터'에 수감되어 있으며 제시한 3개 센터 이외의 또다른 구금장소는 없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자는 국제사면위 보고서에서 지적된 많은 양심수가 실제 구금된 일이 없으며, 또한 북한당국자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막연한 소문에 의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이랜드' 그룹 노조원  
해고투쟁 43일째

이랜드그룹(사장 박성수)이 3월 23일 직영점인 진로라파밀리아에서 일하던 김은주, 조은주,씨와 노조사무국장 박재석씨를 해고하고 류정부씨를 감봉처리하였다.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신진식)은 이를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43일째 노조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회사측은 김씨등이 외상거래를 했다는 해고사유를 들고 있지만 노조측은 이는 사업장에서는 관례화된 일이며, 오히려 김씨등이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했던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93년 10월 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조합원들을 해의연수에서 제외시키는등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어 출범당시 7백여명이었던 조합원은 3백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전국연합, 집회의 자유침해  
시위통제선 철폐 요구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대변인 임종인(변호사)는 11일 경찰의 시위통제선 설정 방침에 관한 논평을 발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외국의 사례를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5.18 광주민중항쟁 15주년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민중들의 투쟁이 격화될 것을 의식해서 이를 공권력을 동원해서 억압하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누르겠다는 경찰의 방침에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평화와 인권

제 22 호 (95.5.22)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재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 스 : 0658-45-0152

정부, 국가안보 위협 빌미로 강경탄압  
한국통신, 노동자 3명구속 14명 사전구속영장 발부

정부의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 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노조간부들에 대한 검거방침으로 올해도 노동권이 심각히 훼손될 전망이다.

경찰은 19일 새벽 3시 40분, 울산 현대자동차에 전경등을 투입, 농성중인 노조원 3백여명을 모두 연행했다. 연행자 중에는 「양봉수씨 분신대책위원회」공동대표인 이상범씨등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공동대표 2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울산에서는 현대자동차등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소속 노조원들의 연합시위가 계속되었다. 이날 시위에 경찰은 무차별적인 연행으로 8백명이 연행되었고 5명이 구속되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현총련은 22일 오후 5시 일산해수욕장에서 경찰력 투입과 무차별 연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한편 한국통신 유덕상 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지지가 떨어지자 노동문제를 빌미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통신 노조는 19일 오후 2시 전남대학에서 가진 대의원대회에서 "21일부터 10일간의 생각기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는 민주노총준비위, 현총련,등 9개단체 간부들이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 노조에 깊이 개입한 사실을 문제삼아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일 국제연인인협회(IPU) 한국측 임원들과 가진 오찬 모임에서 "한국통신노조가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전

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준비위원회(공동대표:권영길,양규현)는 20-21일 조선대와 광주역에서 「현대자동차, 노동운동 분쇄와 광주학살주범 기소추구및 전국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 준비위는 "단순 노사대립을 체제전복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노동자들을 폭도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김영삼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난했다. 또한 천만노동자가 오월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오월정신계승하여 사회대개혁과 민주노총출범에 적극 매진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 준비위는 △한국통신을 폭도로 매도한 김영삼대통령 발언을 규탄하고 광주학살규명을 위한 투쟁 △현대자동차 경찰 철수와 한국통신 간부단압과 준비위 탄압즉각 중단 △노동운동탄압을 분쇄하고 10월 출범할 민주노총건설에 매진할것을 결의하였다.

집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광주역에서 조선대학교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국가보안법 7조1항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사건 경상대 교수

지난해 여름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과), 정진상(사회학과)교수는 19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첫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과 5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위헌심판 청구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국가 체제에 비판적 성향을 가졌다는 행위를 '국가존립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국가보안

법 제7조 1항과 5항은 표현의 자유 제한의 엄격성 기준에 철저하지 못하며 죄형법정주의에도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능성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행사안내

- △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입입 찾침 5월 27일 전주 '작품하나'커피숍
- △ 여성학 강좌 「함께생각하는 가정폭력법」 5월 24일 오전 11시 전북여성의전화
- △ 태인여중 여교사 성폭행사건 제10차공판 5월 25일 오후 4시 광주고등법원 301호 법정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널리 읽혀지고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구독료는 년 3-5만원입니다.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 규 현



### 희생하는 공안정국, 불어오는 공안한파 서울과 부산에서 24명 긴급 구속

경찰청 공안국은 전국연합 자통위원회 부장 최홍제(91년도 고려대 총학생회장)씨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일 새벽 자택과 부대에서 긴급구속해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하고 있다.

최씨의 부인 신미혜씨에 의하면 이날 새벽 6시경 경찰청 행사들 4명이 긴급구속장을 보이며, 집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최씨를 연행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최씨 외에도 고대생 4명, 건국대생 1명, 군인 3명을 같은 혐의로 긴급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지난해 일어난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과 관계된 혐의를 잡고 있다. 특히 93년도 서총련 조동위원회의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최씨의 연행이 8.15를 앞두고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며 최씨와 연행된 학생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또, 부산시경은 15일 새벽 5시 이은영씨등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긴급구속했다. 부산시경은 "빛나는 전망"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맑스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학생노동계에 학습, 유포한 혐의로 긴급구속"했고, 이들 외에도 5명을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박종철 출판사의 맑스엔겔스 전집, 디스켓, 자료집 '백박'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 철거테러 공동대책위 발족 백만인 서명운동등 펼쳐

「성폭력 테러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철거용역 해제를 위한 공동대책본부(대표 남경남의 2인, 공대본)는 15일 오전 10시 종로성당에서 결성식을 갖고 책임자 처벌과 용역반해제를 촉구했다.

공대본은 이날 사업보고에서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운동 백만인 서명운동 철거용역반 해제를 위한 공청회 등의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공대본은 백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이후 서울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다.

### 최규하씨 면담 거절 여성계 대표들, 결단 촉구

여성계 200인이 지난 4일 최규하 전대통령에게 보낸 면담요청에 대해 최씨는 8일 답신을 보내 "충정은 이해하나, 다리와 허리의 통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사실상 면담을 거절했다.

이에 면담신청자들은 "통원치료를 할 정도의 건강상태라면 면담은 물론 증언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전대통령에게 '12.12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 조직간첩 이화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

5월 19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권남혁)에서는 조직간첩사건 이화춘씨의 항소심2차공판이 있었다. 3명의 증인신문과 이화춘씨의 심문으로 이어진 이날 재판에서 이화춘씨는 4번의 도일과정에서 숙부 이좌영씨와의 만남은 친척거리 나누는 친목이었고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화춘씨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과 관련되었던 숙부를 만나고 생활비를 지원받은 사실로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금품수수, 이적표현물 소지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았다. 다음 재판은 선고공판으로 6월 16일 오전 10시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다.

### 문화행사 참가교사에 서울교육청, 경위서 요구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시민모임」등 5개단체의 주최로 13일 열린 문화행사 '95 이화춘등 우리들은'에 참가한 교사와 학생들을 문책 경위서 작성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학교측이 행사에 참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사들을

불러 참석여부를 추궁하고, '불법집회'에 참가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행사당일에는 교육청의 지시를 받은 장학사, 교감등이 행사장 주위를 돌며 이름을 적는 등으로 행사에 참석한 교사와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 행사는 전교조등이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취지로 지난 90년부터 매년 가져온 문화행사이다.

### 전국연합 정책토론회 살의질을 높이는 정책 필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6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잇따르는 대형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제8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장하상 교수(고려대 경영학)는 "한국기업은 안전에 대한 사후비용을 사회가 부담해 주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윤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업의 사회적 이익을 공적이익과 일치시키는 것이 정부와 시장의 기능인데 정부는 이러한 기능을 포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장만을 위한 경제 정책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널리 읽혀지고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요. 구독료는 년 3~5만원 입니다.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규현

# 평화와 인권

제 23 호 (95.5.29)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규현  
편집인 : 유경은  
주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 경찰, 준법 투쟁에 불법적인 탄압 수배자 검거위해 영장제시 무시하고 가택 침입

한국통신노동조합(위원장: 유덕상, 수배중, 한통노조)이 25일 정오를 기해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자 한통노조의 수배자들을 연행하려는 경찰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통노조에 의하면 경찰은 수배자들의 집에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들어가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

25일 새벽 1시 한통노조 조직1국장 박철권(35)씨의 집에는 구로경찰서 소속 형사 4명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집에 들어와 심지어 냉장고까지 뒤지고 갔다. 박씨의 부인 정수진(32)씨에 의하면 이날 새벽 1시경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든 순간,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자마자 윤밀고 들어왔다고 한다. 영장을 제시할것을 요구하는 정씨에게 이들은 "이런 상황 잡는데는 영장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모든 방과 장롱, 화장실, 부엌, 냉장고까지 문을 열어 박씨가 있는가 확인했다고 한다. 이를 항의하는 정씨에게 이들은 "이런 남편과 사니 불쌍한 아줌마"라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말을 계속했다. 정씨에 따르면 이들중 1명은 술을 먹어 이마가 벌겍게 보였다.

또 한 수배자의 집에 경찰이 찾아와 80이 넘는 노인에게 "당신 아들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다. 심지어는 학교에간 아이들에게까지 찾아가 아빠의 거처를 묻는 등 수배자의 가족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를 심각한 인권침해로 보고 대응책을 준비중에 있다.

한국통신노조는 25일 12시를 기해 전국의 3백27개 지부에서 일제히 보고대회를 갖고 준법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대다수의 지부에서

대회를 치렀으나, 일부지부에서는 회사 관리직과 관할경찰서 정보과 형사등이 나와 대회를 저지하려고해 조합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 나는 노동당 입당 한 적 없다.

박창희 교수, 안기부 고문으로 '허위자백' 정정보도 신청

안기부가 북한 노동당에 입당한 것으로 발표한 대학원직교수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임을 주장하고 있다. 22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민가협)에 의하면 박창희 교수(63, 한국외대 사학과,구속중)는 4월 26일 안기부에 권침해로 보고 대응책을 준비중에 있다.

15일 안기부는 박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노동당 입당 문제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씨의 항의로 무시하고, 검찰 기자실에서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 언론이 이를 받아 일

정부의 노조탄압에 대해 노조의 한 간부는 "출퇴근 시간을 지키겠다는 것마저 국가전복 의도라고 매도하여 탄압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처사이며 노동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회사는 준법투쟁에서도 강경한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제히 보도하였다.

박씨는 지난 16일 동아일보등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1차로 정정보도 중재를 신청했다. 박씨는 중재신청이유에서 "안기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듣고 무책임하게 보도함으로써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 본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언론의 보도로 인해 가족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역사학자들의 학문업적도 모독당했으며, '국민학교 개명운동'등의 활동도 매도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언론이 자신에게 한번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가협은 "고문등 가혹행위 통해 강요한 행위는 정부가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할"것을 요구했다.

### "50년 전 일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엔, 군 위안부 실태조사 보고서

유엔인권소위원회 전문위원 린다 차베츠(47,미국인)씨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차원의 첫 조사를 마치고 26일 노총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차베츠씨의 이번 방문은 95년 8월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할 '전쟁중 노예제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것이다. 이미 그는 지난 5월 19-22일 동안 필리핀을 방문하여 30여명의 군위안부를 만났다.

그녀는 이번 방문의 소감과 보고서 작성의 의의에 대해 "지난 2년동안 위안부 문제를 다룬 자료를 보았으나 직접 와서 피해자를 만나 느끼는 확실하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했는지 50년 전일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전쟁범죄가 유엔 문서에 남겨지고 일본은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에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좋은세상열어가는 익산시민모임 출범

「좋은 세상 열어가는 익산 시민모임」 출범식이 5월 26일 오후 6시 30분 한아름예식장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준비위원장이었던 조정권(41)씨가 대표로 선출되었다.

#### 노동운동탄압 분쇄선전전

「노동운동 탄압분쇄를 위한 전북지역 노동자 선전전」이 5월 27일 오후 2시 전주교아백화점앞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현재 준법투쟁으로 탄압받고 있는 한국통신노조(전북본부장:이갑열)의 탄압사태가 발표가 있었다.

#### 전북여성의전화 여성학교실 「다시생각해보는 가족법」

전북여성의전화 5월 여성학교실은 가정내 폭력의 원인을 진단하고 방법을 모색해보기 위하여 '다시생각해보는 가족법'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송광섭교수(원광대 법대)는 가정폭력 발생의 원인을 개인의 기치관 차이와 경제적 빈곤 및 사회적 스트레스, 잘못된 폭력학습 등 여러각도로 분석하고, 가정폭력은 폭행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관련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진다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함께 가해자의 심리상태를 살펴 구타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행사 안내 ○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생활 호신술 강좌  
일시 : 월 7일 오전 10시 전주 효문여중 강당  
주최 :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 미군 성병 뽀뽀스럽다. 미군범죄 규탄 확산

지난 23일 미군당국은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이 '오해로 피해자' 라고 항변했다. 이에 재야 단체들은 강력 반박 성명을 냈다. 이에 조재학 간사(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미군범죄에 대한 공개사과는 물론 재발방지를 해야 할 미군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범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뽀뽀스럽다"고 분노했다. 또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미군당국의 이번 성명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또한 깎아내리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소속단체와 학생 1백여명은 26일 오후 2시 충무로 대한극장 앞에서 '미군의 연쇄폭력 규탄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 촉구대회'를 가졌다. 25일 오후 군산대생 40여명은 군산미군비행장 정문에서 「한.미행정협정개정과 주한미군 범죄외징을 위한 규탄대회」를 가졌다.

#### (미군관련 사건에 관한 최근 한국 언론보도에 대한 주한 미군 대변인의 성명서 전문)

주한미군은 금요일밤 충무로 지하철 역과 어제 춘천 미군캠프 주변에서 있었던 미군관련 사건에 대한 한국 언론의 설명을 강하게 논박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의 군인들이 대한민국 언론이 묘사했듯이 술에 취한 거친 무법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표현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몇가지 구체적인 지적을 하고 싶다. 어제 사건에 관련되어서나 광대한 의료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춘천사건에서 한 미군이 한국이 젊은이가 던진 깨진 맥주병 때문에 얼굴을 베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지하철에서나 그 근처에서 미군이 한국인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어떤 절대적인 증거도 없다. 우리는 여기서 미군과 관련된 사소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부정적인 폭로를 최대화하려는 의도와 분명히 관련되어 있는 집단의 견해를 잘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견해에 민감하다. 우리는 그들의 유해하고 균형잡히지 않은 견해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이유로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봉사하기 위해 여기 왔다. 우리는 우리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들이 조사되는 동안 한국의 활동에 충분히 협조해 왔으며, 협조하고 있다. 우리는 해롭고 부정직한 근거로 사실을 왜곡하려는 자들 앞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승리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 평화와 인권

제 24 호 (95.6.5)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 지자체 선거를 앞둔 신공안정국 만들기 원광대학생들 '구국자주대오'사건 으로 대거 연행

국가기무부대와 전북지방경찰청은 30일 성민식씨(94년 철학파출)를 비롯한 7명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3명 등 10명을 연행 이중 김용연씨(약학과 4년)등 4명을 구속하였다. 이들 중 가담정도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6월 1일 석방된 성민식씨에 의하면 자신은 93년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출마시 후보유인물 내용과 북한영화 상영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들었고, 가담정도가 미약하다는 경찰 쪽의 판단으로 풀려났다 한다. 또한 경찰 측의 발표된 혐의 내용은 원광대에 재학 중이던 93년초 '자주대오'에 가입한 뒤 성씨 등과 함께 학생회관과 학교주변 하숙집을 돌며 '김일성회고록'등 주체사상관련 북한원전을

학습했다는 것과, 학내세력 확산을 위해 지난해 9월 익산경찰서 산하 일부 파출소를 습격하는 등 사회혼란을 야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원광대 총학생회와 구속자 가족들은 이를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전북도경보안과와 기무사가 벌이는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1·2년전의 학생회 활동을 문체감아서 구속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연행사유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 중에 일체 면회를 허용치 않고 밀실에서 수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복무 중으로 알려진 황충연 일병, 배영석 상병은 가족이외에 일체 면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

### 문민정부 일상적인 도청 자행 출소 장기수 장동 밑에서 도청장치 발견

'문민'정부에서도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도청이 이뤄지고 있어 민변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출소장기수 박정숙(79), 김선분(71)씨가 자신들의 방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생명불상의 수사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박정숙씨는 "4월 18일 오전 7시 30분경 방안에서 청소를 하던 중 장동 좌측 밑에 붙어있다가 떨어진 도청장치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동안 수상한 사람들이 집주변을 배회하거나 집안을 엿보아 이웃들의 따돌림을 받는 등 이루 말할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이 제시한 도청장치에는 길이 41.5cm의 각목으로 모서리 끝에는 양면접착 테이프가 붙어있고 양쪽 끝에는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나사못이 박혀 있었다. 내부는 정교하게 파여 미세하고 복잡한 전기회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민변은 전원을 공급하여 실험한 결과 FM 방송 주파수인 93.8MHZ에서 전파가 잡혀 각목주위에서 했던 말들이 라디오 스피커를 통해 들렸다고 한다. 박씨들은 52년 국방경비대 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61년 출소했다가 75년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77년만에 만기출소했다.

#### ○ 행사 안내 ○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생활 호신술 강좌  
일시 : 월 7일 오전 10시 전주 효문여중 강당  
주최 :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기행  
6월 6일 오후 2시 전일여객앞 오후 2시  
△태인여중 여교사 성폭행 사건 11차공판  
6월 15일 오후 4시 광주고등법원 301호실  
△올바른 교육계획을 위한 전북도민 결의대회  
6월 15일 오후 6시 30분  
△조작간첩 사건 이화춘 선고 공판  
6월 16일 오전 10시 광주고등법원

### 정부의 불법적인 탄압 저지 위한 노동인권대책위원회 출범

최근의 한국통신, 현대그룹 노조등 정부의 초강경 노동운동 탄압에 대해 재야 사회단체들의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등, 노동인권대책위)를 구성하였다.

1일 오전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결성식과 기자회견에 선 현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공격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은 "87년 이후 노동운동은 끊임없이 성숙한 모습을 보인 반면, 정부의 노동정책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노동인권대책위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맞서 노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

고 쟁의발생결의 등 파업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영삼 대통령이 파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가전복 저지' 등을 운운한 것은, 노동계와의 일대 충돌을 조장하여 파국을 유도함으로써 지자체 선거에서 예상되는 참패를 만회해 보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통신 노조와 민주노총준비위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진영의 운동역량을 약화시켜 10월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출범을 저지.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노동인권대책위는 첫사업으로 3일 오후 3시 장충당 공원에서 1만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 망언 규탄 및 노동인권 보장 촉구대회"를 가졌다.

### 5.18당시 헬기 기총소사 목격자를 찾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임병대 신부, 광주정평위)는 5.18당시 헬기 기총소사를 보거나 상해를 입은 목격자와 피해자를 찾고 있다.

광주정평위는 "5.18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나서서 직접 찾아야 함에도 소극적인 검찰의 수사의지에 안타까움을 느껴 제보를 받고 있다"고 경위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검찰청을 방문한 조비오 신부는 "조성욱 검사가 '당시 기총소사를 했다면 탄피라든가 피해물을 입은 사람을 증거로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찾지 못한다면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

#### 안정된 주거권리 보장받아야

'집은 삶의 휴식처로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도시빈민연합」(도빈연),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주거연합)등은 5월 29일부터 6월4일까지를 주택자의 주안으로 선정하고 정책토론회와 촉구대회, 건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찰은 '많은 광주시민들이 목격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니 최초로 이를 증언한 조비오 신부가 증언자들을 확보해 검찰로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정평위는 "5.18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가해자들의 기소촉구를 위해 광주시민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부탁했다.

광주정평위는 88년 국회 5.18 청문회 당시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후 10여명의 목격자 제보를 받았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1명의에는 연락 되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증언자를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 삼청교육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

지난 80년 신군부 집단에 의해 실시된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했다.

삼청교육 피해자인 이택승(57)씨는 지난 18일 삼청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제소장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널리 읽혀지고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요. 구독료는 년 3~5만원입니다.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번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규현

###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 요구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

주한미군범죄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2일 오후 4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시민과 사충련 학생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의 연쇄폭력' 규탄 및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운동본부는 결의문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은 계속되는 미군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국 국민앞에 공개 사

과할 것 △김영삼 정권은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자세를 청산하고 미군범죄에 강력 대처할 것 △한미행정협정을 전면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3일 오후 서울역에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용산 미군사령부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 평화와인권

제 25 호 (95.6.12)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규현  
편집인 : 유경은  
주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 정부의 한국통신 노조 탄압에 종교계등 강경대응 확산 전북지역 공권력 남용 규탄 결의대회 가져

정부가 지난 6월 6일 오전 8시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 농성자를 전부 연행한 사건에 종교계와 노동계 등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대대적인 시국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 전북지역 규탄대회

「김영삼 정권 공권력 남용 규탄 결의대회」, 오후 3시 전주교아백화점앞에서 노동자 시민 학생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전동성당까지 가두행진과 대시민 홍보전을 벌였다.

이송준(민주노총 전북추진위 공동의장)의장은 "5만 한국통신 조합원들의 정당한 준법 투쟁을 국가전복세력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정부를 주장하는 김영삼 정권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거라며 김정권의 퇴진을 위해 투쟁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같은 시간 시청앞 광장에서는 「부당고발철폐 및 노조탄압중단 촉구 결의대회」가 한국통신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 노조원과 가톨릭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송준(민주노총 전북추진위 공동의장)의장은 "5만 한국통신 조합원들의 정당한 준법 투쟁을 국가전복세력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정부를 주장하는 김영삼 정권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거라며 김정권의 퇴진을 위해 투쟁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 ○ 행사 안내 ○

- △태인여중 여교사 성폭행 사건 11차공판 6월 15일 오후 4시 광주고등법원 301호실
-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전북도민 결의대회 6월 15일 오후 6시 30분 원불교 전주교구 3층
- △조작간첩 사건 이화춘 선고 공판 6월 16일 오전 10시 광주고등법원

문대 열렸다.

한국통신노조는 성명서에서 지난 6월6일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난입하여 농성간부들을 연행한 것을 국민에 대한 정권의 폭거로 규정하고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노조간부들에 대한 부당고발을 철회하고 노조 집행부가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외에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갑열전북본부장이 대독한 대회사에서 유덕상위원장은

###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 하지 않는 행위’ 노동인권위, 김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서명운동 시작

민간단체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보장 범국민대책위원회」(대표 김진균등, 노동인권대책위)는 12일 12시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범국민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노동인권대책위는 서명운동 취지문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김영삼 대통령이 5월 19일 한국통신노조의 활동에 대해 '국가전복

"지난 3주간 한국통신노동자들에게는 오직 한국통신과 정부에 복종할 의무의 외에는 아무 권리도 없었다"며 △임금가이드라인 3% 철폐 △통신개방반대 △민영화반대등을 주장하였다. 문규현 신부(김제 요촌성당, 노동인권보장 범국민대책위 공동의장)는 격려사에서 "성지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 되어 사회의 마음으로부터 이자리에 섰다"며,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폭 지지하며 굳센 단결로 투쟁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하였다.

의 저의'운운 한것은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통신노조가 파업은 커녕 쟁의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를 불법으로 몰아 노조간부들을 구속하고 수배하는 것은 명백히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로서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배정을 설명했다. 노동인권대책위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청원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

# 평화와 인권

제 26 호 (95. 6. 19)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 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 화 : 0658-44-0152 팩 스 : 0658-45-0152

##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구속자 급증 구속자 1천2백34명중, 5월부터 41일동안 1백61명구속

정부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등에 대한 탄압을 강화, 구속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가 16일 발표한 을 5,6월 구속자 현황에 따르면 5월 1일 6월 10일까지 41일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1백61명으로 하루 평균 3.92명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각 대학 총학생회, 노동조합, 언론보도, 법원, 구치소, 구속자 가족등을 통해 조사 집계한 것이다. 이는 1월 4일까지 총 구속자가 1백4명이었고, 3,4월 구속자가 각각 33명과 34명인 것에 비하면 무려 3배나 늘어난 수치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간사 송소연(30)씨는 "공안당국이 이미 해체된 조직의 관계자들을 대거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비난이 되고 있는 제3차 개입금지를 이유로 구속자를 양산하는 것은 지

자재 선거를 앞두고 정국을 경색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나아가 "월말 방한하는 유엔인권의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면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삼 정권이 등장한 이후 6월 10일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양심

수는 전체 구속자의 64.6%인 3백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향린교회에서는 성회직(현 강원도 도의원)등 6.27 지방선거에 출마한 진보진영 후보자 명단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삼 정권이 등장한 이후 6월 10일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양심

## 대통령 탄핵 서명 본격화 노동인권대책위, 20일부터

「부당한 공권력 남용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공동대표 김진균등, 노동인권대책위)는 17일 이창복, 고영구, 유완규씨 등 각계인사 1천5백여명에게 김영삼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을 위한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17-22일 까지 본격적인 대중 서명운동을 펼치고 20일에는 국회청원을 위해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 경찰, 분신노동자 유골 강제 탈취 만행 -유가족에게까지 폭력 휘둘러-

경찰이 분신사망한 노동자의 유골을 탈취하여 강제로 장례를 치르게 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5월 12일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항거하여 분신한 현대자동차 고 양봉수씨의 유해는 사망 7일만인 19일 경찰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주변 동료노동자들의 뜻과는 달리 화장된 뒤 강물에 뿌려 졌다.

오전 8시 30분경 대구 동산병원에서 발인식을 마치고 운구차를 타려하던 노동자들을 저지하려하자 유가족과 경찰의 몸싸움이 심하게 일어나기도 하였다. 운구차가 오전 9시 30분경 대구 경산의 공원관리묘지사무소에 도착 했을때 경찰은 1천여명의 병력을 화장터 주위에 배치했다. 양씨의 유해는 화장한 후 유골은 양산 솔밭산공원묘지(91년 이후 영남지역의 민족민주운동가들이 묻히는 곳)로 옮기려 했으나 경찰측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원 30여명 대구노동자 50여명이 1천여명의 전경들과 몸싸움과정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고,

경찰들은 유가족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현대자동차 버스에 유가족들을 강제로 태우고, 사복경찰이 탄 버스 3대와 전경차량 5대가 뒤따르며 목포로 향했다. 강제로 탈취한 고 양봉수씨의 유골은 목포 영산강 하구언 독에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 화장터에 남은 노동자들은 집회를 가졌다. 대구노련의 박용선씨는 "우리가 힘이 없어 양봉수 동지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며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오늘과 같은 불통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30분 간담을 거부한 현충원 소속 3천여명의 조합원들은 울산 일산해수욕장에 모여 '양봉수열사 추모집회'를 가졌다

**경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경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널리 읽혀지고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구독료는 년 3~5만원 입니다.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 규 현

## 구속된 원광대생 석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5월 30일-6월 3일 사이에 연행 구속되었던 원광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대책위가 결성되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복연합, 익산연합, 민가협, 원대총학생회등 10개단체가 모여 「구속학우석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익산연합 전병생목사)가 6월 8일 구성되었다. 대책위는 6월 13일 검찰청 항의방문을 할 예정이다.

## 제 4회 환경기행 전주 수질오염상태 심각

전북환경운동연합(의장 전봉호 변호사)이 주최한 제 23회 환경의 날 기념 제4회 환경기행이 6월 6일 오후 2시-5시 까지 시민과 지방자치체 출마후보등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기행은 전주 고사평 쓰레기 야적장, 전주천 추천대, 분노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등 수질오염과 관계된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전주시의 폐수발생량은 생활하수를 비롯 27-28만톤 정도이나 처리될 수 있는 양은 10만 3천 톤으로 나머지는 정화되지 않는 상태로 전주천으로 방류 되고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잠안재우기등 고문을 자행했고, 지난 6월 2일 서울에서 연행된 이정훈(93년 총여학생회장)씨는 생리중인데도 불구하고 심문을 계속해 실신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한편 서울 기무대에 연행된 사람은 장대영씨가 아닌 박정훈씨(군북무중)로 알려졌다. 구속된 사람들은 6월 9일 전주교도소와 송천동헌병대로 이감되었다.

## 광주노동사목 김용진씨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6월 8일 오후 6시 광주노동보안수사대는 광주노동사목 김용진(29,교육정책위원장)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김씨는 광주노동사목에서 4년째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랑방 노동교실」중에서 「노동자의 세계관」, 「우리사회 어떻게 볼 것인가」는 등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6월 8일 오후 긴급구속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책자와 컴퓨터 디스켓 등을 압수해 갔다. 광주 노동사목은 얼마전에도 프락치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 여전히 침해받는 교사들의 권리 서울시 교육청, 교육개혁선언 교사 중징계 방침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 현장 교사 1백여명이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서울교사 100인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중징계하려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애초 선언한 것 자체를 문제삼다가 국민제안장구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접수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교사들이 단체행동"을 했고, 따라서 이들이 "불법단체인 전교조의 합법화를 주장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한다. 선언교사의 대표 3인을 포함한 5인의 교사에 대해서 교육청과 해당 학교측이 △선언의 철회와 다시는 선언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 △경위서 제출 △문답서 작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선언 교사들은 "교사들의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중징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전교조 6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2명의 문답서를 받아 징계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 부산교육청은 전교조 6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현장교사가 바라는 교육개혁을 발표한 교사에게 5월 29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교육청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문답서를 받아가는 등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5월 31일 교육개혁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표명을 한 충남,충북지역의 교사들에게도 징계절차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최전대통령 증언 나서라

5.18과 관련한 조사를 거부한데 대해 「5.18 진상 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국민위원회)와 전국연합은 8일 성명을 발표, 최전대통령의 용기있는 증언을 촉구했다. 국민위원회와 전국연합은 "최 전대통령의 증언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책무"라고 지적하며 "당시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내란과 국권찬탈 과정에 대해 역사 앞에 당당하게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 조정국씨 단식농성 시작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지난달 19일 충무로 지하철역에서 미군 8명에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했던 조정국(28,상업)씨가 8일 오전 11시부터 용산 주한 미군사령부 1번문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조씨는 자필 성명서에서 "사과 한마디 없는 것도 그렇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자라는 어처구니없는 그들의 주장을 대할 때마다 끊어오르는 분노를 누를 길이 없다"며 "무언의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경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널리 읽혀지고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구독료는 년 3~5만원 입니다.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 규 현

### 천주교 전주교구 시국 기도회 “양심에 기초하지 않는 실정법은 악법”

6월 19일 오후 7시 30분 전주 중앙성당에서는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과 평신도 사도직협의회가 주최한 「명동성당 공권력 난입 사태에 대한 시국 기도회」가 있었다.

이날 기도회는 전주교구 사제들과 각지역에서 모인 신자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경과보고), 2부(시국미사), 3부(침묵으로)로 진행되었다.

이병호 주교는 강론에서 “교회는 일부언론과 행정당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성역과 치외법권적 특권을 요구한 적 없다. 공권력을 피해 마지막 피난처로서 교회는 끌어 안았고 그런 교회

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 “태동부터 잘못된 노동관계법과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며, 양심에 기초하지 않는 실정법은 양심법과 충돌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심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호 주교는 신자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악법을 고발하고 별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하고 성서 귀절(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낭독을 끝으로 강론을 마쳤다.

시국미사를 마친 참석자들은 대신증권까지 촛불 침묵 시위를 가졌다.

### 일본정부, 민간위로금으로 중군위안부 보상 여성단체, 국가차원의 사과와 법적배상 촉구

일본정부가 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민간위로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정대협 등은 14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이가라시 관방장관은 14일 발표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우호기금(가칭)’의 사업계획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민간기금 모금 △정부자금으로 피해자들의 의료, 복지비 등 지원 △위안부 관련자료를 정리,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을 실시

하는데 있어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반성과 사죄의 기분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대협과 여연 등 23개 여성단체는 이 사업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일본정부의 이러한 발상한 “국가차원의 사과나 배상이 아닌 국민모금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발뺌하려는 속셈”이라며 기금안을 철회하고 국회결의 사과와 법적배상을 촉구했다.

### 박홍중장 망언 서강대 총학생회 단식농성 한국통신 가족 농성 합류

“한국통신노조가 복한의 사주를 받았다”는 발언으로 한국통신노조로부터 고발을 감수해야 하는 박홍 서강대 총장이 이번에는 서강대 학생들에게 총장직 사퇴를 강요받고 있다.

16일 「서강대총학생회」(총학생회장 신성필)는 “박홍 총장 망언 규탄대회를 갖고 전국민에 대한 사과와 총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신경준 등 학생 11명이 학내 도서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박총장의 발언에 대해 총학생회는 “6.27 지사 재선거와 8.15 남북공동행사를 앞두고 또 한번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경거망동”이라고 항의했다.

한편 한국통신노조 가족들은 박홍총장실로 물러가 항의를 하다가 학생들과 함께 농성 중이다.

### 5.18 국민위, 종교계 최전 대통령에게 증언 촉구 서한

5.18 고소고발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7월중 종결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계승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5.18국민위)는 14일 오전 11시 최규하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16일 오전 11시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최 전대통령의 자택을 방문, 비서실에 5.18광주항쟁에 대한 증언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 이화춘씨 재판 연기

지난 16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항소심 선고공판 예정이었던 이화춘씨의 재판이 23일로 연기되었다.

# 평화와 인권

제 27 호 (95.6.26)

발행처: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문 규 현  
편집인: 유 정 은  
주소: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화: 0658-44-0152 팩스: 0658-45-0152

## 공소시효 넘긴 직무유기 재판, 법원에서 기각 -박충렬씨, 이근안등 고문경관 12명 고소사건-

검찰의 직무유기로 고문경관의 공소시효가 넘어가 막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소송에서 법원은 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도 고문사실 유무를 따지며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22일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박충렬(35)씨 등이 전 경기도경 이근안 경감 등에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기피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를 넘겨 검사에게 부여된 본인의 직무를 위배했다”며 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도 “원고 박충렬씨 등이 수사를 받을 당시 육체적 고문을 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고 원고들의 일방적 진술이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변호인 백승현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고,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충렬씨도 “내가 고문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것을 조사하지 않은 점을 재기한 것인데 엉뚱한 내용을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기피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이에 지난해 7월 서울민사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 변호사와 의논하여 항소할 예정이다.

박씨 등은 지난 86년 10월 이른바 ‘반체통맹당’ 사건으로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고문기술사’ 이근안 등에게 고문당해 지난 89년 1월 수사관 12명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키 93년 11월 30일 공소시효가 완료되자 이에 지난해 7월 서울민사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정부,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되풀이 성남시에 철거강제까지 동원 국내 최대 저유소 강행

저유용량 1백58만 드립의 국내 최대 저유소(기름저장소)가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들어서게 되어 주민들이 1년간 가까이 생업을 포기한 채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주민2백40세대 1천여명은 건설부가 94년 8월 16일 대장동 산 41-1, 석운동

7-7번지 일대 (면적 약 27만평)을 저유소로 지정고시한 것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23일 마을주민 이병원(32), 이종국(32)씨가 업무방해로 연행, 구속된 데 이어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부」 김영순 본부장(54)이 구속되었다. 김씨는 상동구치소에서 물도 끓은 채 9인동안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지금 대장동 지역에는 입산용역회사 철거반원 1백50여명이 동원되어 주민들과 대치중이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늦은 밤이나 새벽에 트럭과 굴삭기등 중장비를 동원, 7만평의 녹지를 파헤

치 놓았다. 이 과정에서 밧이진 마찰로 주민7명이 진지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철거반원들은 노인들을 내동댕이 치거나 팔을 끼고 얼굴을 아스팔트에 짓이기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주민들이 용역반원들의 행패를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수수 방관할 뿐이고 오히려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구속시켰다.

법률상 저유소등 주민기피시설을 설치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94년 3월 건설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도 되는 보존녹지지역인 대장동을 저유소 대지로 선정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94년 8월 대장동 일대를 저유소로 지정고시했다.

주민들은 대장동 일대가 수원의 광고산과 차천의 청계산 자락을 잇는 7등급 산림으로 대부분 청정지역이고 1급수 지역으로 저유소가 설치되면 녹지훼손,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저유소로부터 3백m 앞 15.4만kw, 34.5kw의 전력소가 있는데 76.5 kw의 신성남전력소가 증설된 예정이어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인체사고로 이어질 위험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널리 읽혀지고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요.  
구독료는 년 3~5만원 입니다.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 규 현

전주교구 사제들 항의 단식 22일부터 26일까지

6월 22일 오후 3시 전주 가톨릭센터에서는 전주교구 사제단의 김진통신부(삼천동성당, 정의구현사제단 의장)등 사제 25명이 '현정권의 부도덕성에 항의하는 무기한 단식기도를 시작하였다.

사제단은 단식기도에 앞서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현정권의 부도덕성에 항의하는 단식기도' 글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임을 다해야 할 주님의 제자들로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단식기도를 시작하며, 이 나라에서 하느님 앞에 평등한 인간의 존엄성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고, 또한 이를 보장해야 할 현정권의 참회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발표했다

이 항의단식기도는 선거전 날인 26일 시국미사를 끝으로 마무리한다.

정대협, 위안부 문제에 굴욕적인 대일외교 비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정옥등, 정대협은 22일 성명을 발표, 정부가 일본정부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우호기금안'을 지지하는 논평을 낸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대협은 "14일 일본 정부의 안이 결국 그들의 범죄에 대한 인정도, 공식적인 사죄도, 법적인 배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옹당'저야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임에도 우리 정부가 '성'의있는 조치'라고 논평한 것은 굴욕적인 대일 외교 자재라고 비난했다.

엠네스티, 비인도적인 대우 조사 촉구

'국제엠네스티'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4월 긴급구속된 박창희 교수를 양심수로 선정하고 그가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보고에 대해 조사할 것을 한국정부에게 촉구했다. 엠네스티는 박씨가 '36회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실현했다'며 양심수 선정 사유를 밝혔다. '박교수는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된 뒤 조사를 받는 동안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잠안제우기와 구타, 협박등 고문을 받아왔다고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면회하러 간 딸조차 2시간동안 협박을 받으며 심문을 받았다. 이러한 폭압적인 상황에서 박교수는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다는 허위자백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ILO총회 유인물 배포 규탄

한국노총이 제81차 국제노동기구(ILO)총회에서 배포한 자료가 민주노총등 국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 총회 중 위원장의 명의로 "몇몇 사업장에서는 법질자를 따르지 않는 파업으로 정부에 탄압에 구실을 줌으로써 노조운동에 지해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등 3인)은 20일 한국노총으로 보내는 공개요구서에서 "한국노총 위원장 명의로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배포된 내용은 한국통신과 현대자동차 사태의 진상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노총위원장의 공개사과 △한국통신과 현대자동차 사태의 진상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검찰 혐의 사실 전면부인 '한국사회의 이해' 두번째 재판

지난해 이광 선공안정국에서 인이던 경시대 '한국사회의 이해' 사진 두번째 공판에서 정진상(36, 경시대 사회학과)교수는 검찰의 혐의사실을 전면부인했다.

22일 오후4시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정교수는 "마르크스주의를 사회과학 방법론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냐. 이념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와는 구분해서 사용했다"며 자신들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조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방법은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는 입장"으로 책에도 서술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주의의 폭력혁명을 신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운동에 의해서 사

회는 변화발전된다. '한국사회의 이해' 어느 곳에서도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작간첩 이화춘 사건 원심 형량 선고

지난 6월 23일 오전 10시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권남희)에서 일었던 이화춘씨의 재판에서 원심형량인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되었다.

각계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1천4백여명 서명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범국민대회'(공동대표 김진균등 8명, 노동인권대행위)는 20일 오전 10시 김영삼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에 참가한 각계대표는 고영구 변호사등 범조계 106명, 박길용 씨등 보건의료계 141명, 권인길씨등 노동계 528명, 지자체 출마후보자 76명, 농민 143명등 1천4백42명이다. 이 청원은 김병오(민주당 정책위원장), 김발봉(민주당), 박계동, 원해영, 이석현의원 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지난 21일 낮 12시에 분신한 대우조선 노동자 박삼훈씨의 유서

이들의 세상, 가진 자만이 관치는 세상 우리 근로자는 작은 월급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노동자야!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지 누가 찾습니까? 노동자야, 봉치면 살고 흠이되면 죽는다. 용 임금 100% 생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약성하라. 앞시간 노동인사 뒤를 따라갑니다.

제 28 호 (95.7.3) 발행처 : 정의평화정보센터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유 경 은 주소 : (576-010) 김제시 요촌동 172 전화 : 0658-44-0152 팩스 : 0658-45-0152

대형사고 예방은 인간중심 개발로 전환 되어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보고-

이번 삼풍백화점 참사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리저리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다른 사고와 같이 이번 참사 또한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건물의 붕괴조짐이 확실해 드러난 속에서 열린 백화점 대책회의는 여전히 매출이익에 신경을 썼다. 결국 보석이나 귀중품을 대피시키고 간부들은 백화점을 빠져나갔다. 그 직후 붕괴참사가 일어났다.

두번째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지적되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구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초 자체 출마후보자 76명, 농민 143명등 1천4백42명이다. 이 청원은 김병오(민주당 정책위원장), 김발봉(민주당), 박계동, 원해영, 이석현의원 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세번째 고질적인 부실시공의 문제다. 인간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실시공하는 판에 다른 사람들이 살 건물은 어떻게 지

었겠는가. 네번째 감독관청의 안전전단의 신뢰성에 대해서이다. 바로 5월의 안전전단에서도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 이번 사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도 아마 '단 귀중품을 대피시키고 간부들은 백화점을 빠져나갔다. 그 직후 붕괴참사가 일어났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도 아마 '단 귀중품을 대피시키고 간부들은 백화점을 빠져나갔다. 그 직후 붕괴참사가 일어났다.'

곽노현(방송대, 법학)교수는 "이번 사건은 군부독재와 결합된 개발독재의 붕괴 소이다. 3-6공에서 있었던 공사 부실화가 종합적으로 붕괴한 것으로 본다. 그 첫째가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두번째가 지난해 일어난 청주 우암복합상가의 붕괴사

고였다. 이번 사고도 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경쟁원리를 넘어선 준법,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 경제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인간을 중심에 놓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인간중심의 개발'을 천명한 지난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발정상회의'(WSSD)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전환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어떻게 사고에 대비해 귀중품을 옮길 것을 생각하면

고 박삼훈씨 장례식 열려 회사측, 장례참석 방해하기도

지난 21일 회사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분신 사망한 박삼훈(41)씨의 장례식이 30일 경남 거제도 대우조선에서 노동자장으로 치러졌다. 이날 장례식은 오전 6시 운구 행렬이 대우병원을 출발, 대우조선 북문과 14년 간 일해온 특수선 건물 앞을 거쳐 서문 앞에 도착, 조합원과 각계인사등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영결식을 갖고 10시경 장지인 경북 영덕으로 향했다.

'대우조선노동조합' 백순환 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열사의 죽음은 회사의 노동통제와 노조탄압 때문인데도 회사는 반성하기는 커녕, 신경영전략으로 노동수준을 더 악화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더 주겠다" 차라리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고 하루 쉬어라"는 등으로 장례식 참가를 막으려 했다고 한다. 29일 총회에는 전날 철야작업을 시키는등 방

한 위원은 추모사에서 "열사의 죽음은 회사의 노동통제와 노조탄압 때문인데도 회사는 반성하기는 커녕, 신경영전략으로 노동수준을 더 악화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더 주겠다" 차라리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고 하루 쉬어라"는 등으로 장례식 참가를 막으려 했다고 한다. 29일 총회에는 전날 철야작업을 시키는등 방

한 위원은 추모사에서 "열사의 죽음은 회사의 노동통제와 노조탄압 때문인데도 회사는 반성하기는 커녕, 신경영전략으로 노동수준을 더 악화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더 주겠다" 차라리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고 하루 쉬어라"는 등으로 장례식 참가를 막으려 했다고 한다. 29일 총회에는 전날 철야작업을 시키는등 방

한 위원은 추모사에서 "열사의 죽음은 회사의 노동통제와 노조탄압 때문인데도 회사는 반성하기는 커녕, 신경영전략으로 노동수준을 더 악화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더 주겠다" 차라리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고 하루 쉬어라"는 등으로 장례식 참가를 막으려 했다고 한다. 29일 총회에는 전날 철야작업을 시키는등 방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의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널리 읽혀지고 다양한 취재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구독료는 년 3~5만원 입니다. 전북은행 711-22-0006413 국민은행 508-24-0144-967 예금주 문 규 현